

연구총서 01-12

•

김정일 정권의 분야별 정책변화 추이 분석

- 「로동신문」(1994. 7. 4 ~ 2001. 11. 31)
사설·정론·논설을 중심으로 -

전 현 준

통 일 연 구 원

본 연구는 1994년 7월 김일성 사후부터 2001년 11월 31까지 게재된 「로동신문」의 정론·사설·논설을 통해 김정일 정권의 정책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학술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그 동안 북한이 대내·외적인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의 타결을 위해 대내적으로는 정치사회적 통제 및 지도자와의 융합을 강조한 반면, 대외적으로는 유연한 태도를 취했다는 가설을 설정, 이를 증명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I. 연구 방법 및 가설

1. 연구 방법 및 한계

노동당 선전매체인 「로동신문」 사설, 정론, 논설 등을 통해 북한사회의 변화를 분석하고 전망하는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동신문」 사설, 정론, 논설 등은 선전목적이 명확한 글이면서도 당시의 중요한 관심사, 쟁점, 문제, 목표 등을 다루고 있어서 그 유용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정론은 최고통치권자의 의지가 개입된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크다.

분석대상 자료는 1994년 7월부터 2001년 11월 31일까지의 「로동신문」에 보도된 각종 사설, 정론, 논설 등이 될 것이고, 이들 제목 분석을 통해 각 분야별 강조빈도수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가 추출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김일성 사후 분야별 사설, 정론, 논설 등의 숫자, 둘째, 김일성 사후 각 연도별로 각 분야에 대한 사설, 정론, 논설 등의 빈도수가 분석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사건과 관련된 사설, 정론, 논설 제목에 대한 빈도수조사 외에 전체적인 내용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정확한 정책변화 추이를 추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채용된 분석대상 건수는 총 689건으로서 사설 472건, 정론 211건, 논설 6건 등이다. 연도별로는 1994년 55편, 1995년 100편, 1996년 82편, 1997년 112편, 1998년 87편, 1999년 93편, 2000년 86편, 2001년 74편 등이다. 분야별로는 정치사상 289건, 사회문화 182건, 경제 103건, 군사 48건, 대남 44건, 대외 23건 등이다.

2. 연구를 위한 가설

연구를 위한 가설은 북한은 대내외적 위협이 가해질 때 대내적으로는 지도자에 대한 충성 및 사회사상적 통합을 강조한 반면 대외적으로는 유연한 태도를 취하였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크게 4시기에 걸쳐 ‘대내 강경, 대외 유연’ 전술을 구사하였다. 제1차는 1950년대 초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제2차는 197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제3차는 1970년대 후반부터 중반까지, 제4차는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이다.

II. 「로동신문」의 기구와 기능

1. 「로동신문」의 기구

「로동신문」은 조선노동당 비서국 선전선동부 소속으로 조직과 예산 등에 있어서 철저히 당의 통제를 받고 있다. 「로동신문」 조직은 당부장

급인 책임주필 밑에 부주필(3~5명), 편집국 및 각종 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책임주필은 발행책임자로서 편집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부주필은 통상 주필로 호칭되며, 교대로 주필역할을 담당하면서 몇 개 부서를 분할 지도한다. 가장 중요한 부서는 업무국과 편집국이다. 편집국은 편집부와 교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국장 2명이 교대로 편집업무를 수행한다. 업무국에는 당생활부, 이론선전부, 공업부, 농업부, 남조선부, 국제부, 사진부, 지방서한부, 재정경리부, 교육문화부, 보도부, 군사부 등이 있다.

2. 「로동신문」의 임무와 기능

「로동신문」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우상화·신격화, 1인 독재체제 강화를 위한 교육·교양 매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로동신문」은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역할 외에 당원과 인민대중에 대한 주체사상 전파 및 공산주의 교양, 그리고 각급 당 단체와 당원들의 당 생활 및 사업 지침을 적시에 하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로동신문」은 일반주민들의 교양용으로 사설을 발표하고, 중요한 정책적 전환이나 김정일의 강력한 의지를 담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론을 발표한다. 논설은 각종 사안에 대한 해설을 담아 자주 발표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론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의 발전전략이 되고 있는 1998년 8월 22일자 「로동신문」 정론 「강성대국」이다.

Ⅲ. 김일성 사후 「로동신문」 사설·정론·논설 추이 분석

1. 정치·사상분야

김일성 사후 「로동신문」은 정치사상분야에 대한 사설, 정론, 논설을 다수 게재함으로써 주민들의 사상동요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김정일의 위상제고에 주력하였다. 특히 김일성 사후인 1995년에는 전체 사설, 정론, 논설의 55%를 차지, 북한이 주민사상동요를 크게 걱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재임된 이후인 1999년에 정치사상 분야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다. 1999년 이후 정치사상에 대한 강조 횟수가 점점 줄어든 것은 김정일로의 정치적 통합이 완성된 자신감에서 발로된 것으로서 경제분야나 외교분야에 대한 강조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 증거로서 1999년 「로동신문」에 등장한 ‘강성대국’ 관련 정론과 사설이 18건에 이른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경제강국’ 건설에 초점이 맞춰졌다.

2. 경제분야

김일성 사망 직후인 1995년 「로동신문」은 체제동요 방지를 위해 정치사상 분야 사설을 늘였으나 1995년 1996년부터는 경제관련 사설을 대폭 증가시켰다. 북한이 1996~1997년을 ‘고난의 행군’ 기간으로 정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시기가 경제적으로 가장 곤란한 때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분야에 대한 사설 게재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로동신문」은 경제관련 정론·사설·논설수를 대폭 축소하였다. 그 이유는 일단 최악의 경제상황

은 극복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북한은 가능하면 ‘자력갱생’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 정신,’ ‘사회주의 강행군,’ ‘성장의 봉화,’ ‘라남의 봉화’ 등 주민의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구호를 창출해 내고, 감자농사나 경지정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3. 사회·문화 분야

사회문화 분야 관련 「로동신문」의 사설, 정론, 논설 등의 비중변화 추이를 보면 정치사상분야와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 김일성 사후 김정일에 대한 충성 강요가 강화되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절대자’ 김일성의 사망은 주민들의 심리적 아노미를 야기 시켰다. 김정일은 신속히 자신을 중심으로 정치사회적 통합을 이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1994년부터 자신을 강조하였고 “김일성=김정일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자신을 강조하기 보다는 먼저 김일성의 위대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주민들의 호감을 사는 책략을 구사하였다. 그것이 곧 ‘김일성 영생론,’ ‘태양절 제정,’ ‘영원한 주석’ 옹립 등이었다.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일탈 증가, 청소년 타락 등은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제국주의에 대한 경계도 강화하였다. 특히 1997년에 사회문화 관련 사설, 정론, 논설 비율이 높았던 이유는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동요가 극심했고, 그 만큼 주민들의 단결이 중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2000년에 「로동신문」이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게재횟수를 증가시킨 이유는 정상회담과 EU 등 서방국가 들과의 수교로 인한 사상침습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4. 군사분야

「로동신문」은 군사관련 정론·사설·논설을 많이 게재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대체로 게재비율은 4~7% 정도였다. 그러나 2001년 들어 「로동신문」은 그 비율을 15%로 격상시켰다. 그 이유는 북한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매우 불안하게 인식하고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맞서 내부적으로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이 체제위기 의식을 느끼고 군의 역할을 증대시킨 것은 식량난이 가중된 1997년이었고, 1998년에는 ‘선군정치’까지 도입하였으나 2001년에 북한이 군에 대한 중시정책을 취한 것은 그 질이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즉 2001년 북한이 군의 중요성을 강화한 이유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책’으로 선화하려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고 더구나 미국의 ‘9·11 테러사태’로 인해 ‘테러지원국가’로 분류된 북한도 언제 미국의 침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이로 인해 북한은 내부통합을 위해 ‘미제’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였다.

5. 대외분야

김일성 사후 「로동신문」은 대외문제와 관련된 사설을 별로 다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룬다 할지라도 중국관련 사설이 대부분이었다. 중국관련 사설이 9건 중 5건이었다. 이것은 북한이 그만큼 중국을 중요시한다는 증거이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악화된 상황에서도 「로동신문」 사설이나 정론에는 ‘반미’가 잘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제3방송’을 통해서 ‘반미교육’을 강화했겠지만 외형적으로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대화하려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하나의 특징은 1999년 이후 대외관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사설숫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6. 대남분야

「로동신문」의 대남관련 사설은 1996년 11%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6년의 빈도수가 높았던 이유는 1995년 대홍수로 인해 ‘민족대단결’ 즉 남한의 원조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대남관련 정론이나 사설 빈도수가 낮아진 것은 대북 포용정책을 채택한 김대중 정부의 등장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아직까지도 ‘민족대단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정책 또는 대남전략이 변화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속단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로동신문」은 대남관련 사설이나 정론을 대체로 8월말 이전에만 게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북한이 매년 8월 15일을 대남 통일전선전술 구사의 정점으로 삼고있다는 증거이다.

IV. 결 론

1994년 김일성 사후부터 2001년 11월 31까지 「로동신문」이 분야별로 게재한 ‘사설·정론·론설’ 689건을 분야별로 나누어 정책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정치사상 및 사회분야에 대한 강조가 69%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대외분야에는 3%만을 할애하였고 그것도 매우 유연한 내용이었다.

한편, 「로동신문」의 분야별 정론·사설 추이를 분석해 볼 때 서론에

서 세운 가설 즉, 북한은 국·내외 상황이 어려울 경우 생존을 위해 ‘대외 유연’ 정책을 구사한다는 경향성(tendency)이 있고, 대외 유연정책 이전에 사상정치적으로 공고한 체제를 구축한다는 점이 정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즉 김일성 사망, 극심한 식량난, 대북 포용정책을 재검토하려는 부시 행정부 등장 등에 대해 ‘강성대국’론, 강력한 국방위원장 체제 수립, ‘선군정치’ 표방, 사상단속 강화 등 내적 체제를 정비한 가운데 미국과 「북미제네바합의」, ‘북미공동코뮤니케’ 등을 도출하는 한편, EU와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하였고 남한과는 금강산관광 개방 및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취하였다. 특히 ‘9·11테러사건’ 및 ‘10·7 대테러전쟁’ 이후 북한은 2개의 ‘반테러조약’에 가입하는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로동신문」 ‘사설·정론·론설’ 제목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김정일 정권의 정책을 ‘추론적 차원’에서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체사상에 대한 강조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혁명적 수령관’에 대한 강조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체사상의 내용은 김정일의 위대성을 부각시키는 내용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 차원에서는 주체사상 기초하에 실용주의적 태도가 주요 생활기준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당대회를 통해 중국처럼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유사한 노선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식 개발독재’ 정책을 합리화하는 노선변경이 도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국방위원장체제는 지속될 것이다. 다만 이의 변형된 형태인 ‘왕정’이나 ‘종신대통령제’ 같은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왕제를 채택하고 있는 아랍국가들처럼 김정일도 정치적으로는 ‘왕제’를,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당대회나 헌법수정을 통해 국방위원장 체제는 종식될 것이다. 특히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이산

가족 문제를 포함한 각종 전향적 조치를 김정일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전향적 조치에 대해 남북한 주민 및 주변국의 지지가 확산될 경우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합하는 기구를 설립, ‘초대 수장’ 즉, ‘연방 대통령’이 되려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정일식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 개인적 차원에서 반대할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셋째, 경제난 해결을 위해 경제제도 개선에도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분조관리제의 가족책임생산제로의 전환, 폐기발에 대한 세금완화, 농민시장의 거래품목 확대, 소규모 개인상행위 합법화, 이산가족 방문을 위한 해외여행 확대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체농법을 개선하여 농민의 선택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개방정책으로 인해 북한경제 회생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확대되면 중앙통제경제는 형해화되고 자본주의식 경영방식이 도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농민시장의 ‘암시장화’ 확산으로 인해 당국의 묵인하에 밑으로부터 시장사회주의가 등장하고 상당량의 자본소유자도 발생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으로 주민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고 정치적 목적이 아닌 각종 친목활동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행증없는 지역간 이동을 허용하고 남한 및 해외 가족·친지들과의 서신교환이나 전화통화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의식은 보다 개방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방적 분위기는 김정일 정권의 개방정책에 오히려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민들의 개방적 태도가 자유주의적 세력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섯째, 북한군의 보수적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빨치산의 후예임을 자부하는 군부는 ‘반체’노선을 고수할 것이고 주체사회주의 고수에 헌신할 것이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수령후계자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또한 변함이 없을 것이다. 김정일의 개방 노선에 대한 반발 가능성

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 차원에 머물 가능성이 있고 각종 통제장치로 인해 조직화·집단화되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개방정책에 대한 군관료들의 개별적인 불만표시 가능성은 상존할 것이고, 이것은 ‘궁정혁명식’의 김정일 정권 변화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섯째, 남북관계는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화해협력이 지속될 것이다. 김정일의 절대권력에 기반한 전향적인 대남정책은 김정일의 권위제고를 위해서라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한과의 관계는 제6차 장관급회담 무산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전체제라는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급속한 진전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긴 하지만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정신에 입각, 당국간 대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2차 정상회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더구나 만일 미국이 ‘대테러전쟁’ 승리 이후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면 정상회담을 ‘피난처’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통일전선전술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남한내 진보적 인사들에 대한 ‘포섭공작’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가 현실화될 것인가는 의문이다. 아울러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답보상태에 있는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할 것이고, 주민들의 사상이완없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개방지역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대내외 환경이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대외관계를 유연하게 유지하려 할 것이다. IT산업 활성화를 비롯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는 대미관계 개선이 필수적이고 특히 ‘대테러전쟁’ 이후 미국의 유일패권화가 확고히 된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화는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벼랑끝 외교’를 구사하면서 결국 미국과의 핵심의제인 대량살상 무기 및 재래식 무기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 목 차 -

I.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를 위한 가설	3
3. 연구 방법 및 한계	12
II. 「로동신문」의 기구와 기능	16
1. 「로동신문」의 기구	16
2. 「로동신문」의 임무와 기능	18
III. 김일성 사후 「로동신문」 사설·정론·논설 추이 분석	21
1. 정치·사상분야	21
2. 경제분야	44
3. 사회·문화 분야	68
4. 군사분야	85
5. 대외분야	102
6. 대남분야	137
IV. 결 론	153
참 고 문 헌	163

- 표 목 차 -

<표-1> 북한의 대내·외 환경 적응 체계도	10
<표-2> 전체 사설·정론·논설(1994.7.4~2001.11.31)	14
<표-3> 분야별 분류기준 주요용어	15
<표-4> 「로동신문」 조직표	17
<표-5> 1994년 정치·사상 분야 빈도율(%)	21
<표-6> 1995년 정치·사상 분야 빈도율(%)	24
<표-7> 1996년 정치·사상 분야 빈도율(%)	26
<표-8> 1997년 정치·사상 분야 빈도율(%)	29
<표-9> 1998년 정치·사상 분야 빈도율(%)	33
<표-10> 1999년 정치·사상 분야 빈도율(%)	35
<표-11> 1999년도 ‘강성대국’관련 「로동신문」 정론·사설	36
<표-12> 2000년 정치·사상 분야 빈도율(%)	39
<표-13> 2001년 정치·사상 분야 빈도율(%)	41
<표-14> 1994~2001년 정치·사상 분야 빈도 수 추이	44
<표-15> 1994년 경제분야 빈도율(%)	44
<표-16> 1995년 경제분야 빈도율(%)	46
<표-17> 1996년 경제분야 빈도율(%)	48
<표-18> 1997년 경제분야 빈도율(%)	51
<표-19> 1998년 경제분야 빈도율(%)	53
<표-20> 1999년 경제분야 빈도율(%)	56
<표-21> 2000년 경제분야 빈도율(%)	59
<표-22> 2001년 경제분야 빈도율(%)	62
<표-23> 김정일의 경제관련 행사 숫자	63

<표-24> 1994~2001년 경제분야 빈도 수 추이	68
<표-25> 1994년 사회분야 빈도율(%)	68
<표-26> 1995년 사회분야 빈도율(%)	70
<표-27> 1996년 사회분야 빈도율(%)	72
<표-28> 1997년 사회분야 빈도율(%)	73
<표-29> 1998년 사회분야 빈도율(%)	76
<표-30> 1999년 사회분야 빈도율(%)	78
<표-31> 2000년 사회분야 빈도율(%)	80
<표-32> 2001년 사회분야 빈도율(%)	82
<표-33> 1994~2001년 사회분야 빈도 수 추이	84
<표-34> 1994년 군사분야 빈도율(%)	85
<표-35> 1995년 군사분야 빈도율(%)	86
<표-36> 1996년 군사분야 빈도율(%)	88
<표-37> 1997년 군사분야 빈도율(%)	90
<표-38> 1998년 군사분야 빈도율(%)	91
<표-39> 1999년 군사분야 빈도율(%)	94
<표-40> 2000년 군사분야 빈도율(%)	97
<표-41> 2001년 군사분야 빈도율(%)	98
<표-42> 김정일의 군관련 행사숫자	100
<표-43> 1994~2001년 군사분야 빈도 수 추이	101
<표-44> 1994년 대외분야 빈도율(%)	102
<표-45> 1995년 대외분야 빈도율(%)	103
<표-46> 1996년 대외분야 빈도율(%)	106
<표-47> 1997년 대외분야 빈도율(%)	110
<표-48> 1998년 대외분야 빈도율(%)	115
<표-49> 1999년 대외분야 빈도율(%)	119

<표-50> 2000년 대외분야 빈도율(%)	123
<표-51> 2001년 대외분야 빈도율(%)	131
<표-52> 북한-서유럽(EU포함)수교현황	134
<표-53> 1994~2001년 대외분야 빈도 수 추이	137
<표-54> 1994년 대남 분야 빈도율(%)	137
<표-55> 1995년 대남 분야 빈도율(%)	139
<표-56> 1996년 대남 분야 빈도율(%)	141
<표-57> 1997년 대남 분야 빈도율(%)	142
<표-58> 1998년 대남 분야 빈도율(%)	144
<표-59> 1999년 대남 분야 빈도율(%)	146
<표-60> 2000년 대남 분야 빈도율(%)	148
<표-61> 2001년 대남 분야 빈도율(%)	150
<표-62> 1994~2001년 대남분야 빈도 수 추이	152
<표-63> 김일성 사후 북한의 대내·외 환경 적응 체계도	156
<표-64> 1994~2001년간 사설·정론·논설 중 부문별 비중	157

I. 서 론

1. 연구 목적

1998년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북한은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경제적으로는 1995~1996년 대홍수 및 1997년 냉해로 인해 식량생산량이 급감함으로써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아사자가 발생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령 후계자’ 김정일은 1996~1997년 ‘고난의 행군’을, 1998년에는 ‘사회주의강행군’ 강조와 함께 ‘강성대국’론¹⁾을 제시하여 ‘자력갱생식’ 난관극복을 시도하는 한편, ‘자존심’을 버리고 1995년 공개적으로 ‘큰물피해대책위원회’를 통해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호소하였다.

정치군사적으로는 김정일이 1997년 10월 당 총비서에 취임하였고, 1998년 7월에는 제10기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였으며 9월에는 헌법 수정을 통해 주석제를 폐지하는 동시에 권한이 강화된 국방위원장에 재 취임하였다. 이후 김정일은 한국전쟁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던 체제위기 극복을 위해 충성심과 조직성으로 뭉쳐진 군대를 체제보위의 전위대로 내세우는 ‘선군정치’를 채택하였다.

대외 및 대남관계와 관련, 북한은 1994년 10월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제네바합의」를 도출하였고, 2000년에는 역사상 최초로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의 방북과 조명록 군총치국장의 방미를 통해 북미관계

1) ‘강성대국’ 건설전략에 대한 ‘북한식’ 해석은 김재호, 「김정일강성대국 건설전략」(평양: 평양출판사, 2000) 참조. 아울러 남한의 시각은 줄 저,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실태 평가: 사상·정치·군사분야를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1999) 및 최수영,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경제 부문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1999) 참조.

2 김정일 정권의 분야별 정책변화 추이 분석

를 개선시켰다. 특히 중요한 것은 김정일이 2000년 6월 분단 55년만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본인이 직접 「6·15 남북 공동선언」에 서명함으로써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었다는 점일 것이다.

이처럼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많은 정책적 전환을 시도하였다.²⁾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사전에 충분히 감지되지 못하고 북한이 「로동신문」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했을 때 비로소 변화사실을 인지함으로써 남한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하였다. 물론 그 동안 북한의 언론매체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사건을 앞두고 사전에 정보를 누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북한의 공식발표 이전에 언론매체 보도내용 분석을 통해 북한의 정책의도를 사전에 감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북한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장애이다.

그러나 통일의 상대자이면서 경쟁자인 북한의 정책 의도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불안한 일임에 틀림없다. 물론 국내외의 각종 정보기관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의 정책방향을 사전에 입수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반연구자들은 북한의 공식매체이외에는 북한정보 입수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 연구자들은 비록 북한 조선노동당의 선전선동 매체이기 때문에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선전매체인 「로동신문」을 통해 북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정책방향을 감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비록 「로동신문」이 공개된 선전매체이기 때문에 최고지도자의 ‘진실’이 모두 담지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

2)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에 대해서는 김성철, 「김정일의 퍼스널리티·카리스마·통치스타일」(서울: 통일연구원, 1999) 참조.

만 역설적으로 북한도 「로동신문」을 통해 ‘북한식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점에서 「로동신문」의 유용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즉 북한은 역사적으로 「로동신문」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고정된 정책으로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로동신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북한의 정책선택 전망을 위해서는 필수적 단계이다. 특히 사설, 정론, 논설 등은 북한의 정책방향의 방향타가 된다는 점에서 북한연구를 위한 유용한 1차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³⁾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김일성 사후 「로동신문」 사설, 정론, 논설 등에 나타난 분야별 정책선택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김정일 정권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는데 있다.

2. 연구를 위한 가설

역사적으로 북한은 주변환경이 불리하게 변할 경우 주변국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한 반면 내부적으로는 사상통합과 지도자의 절대화 정책을 구사하는 경향성을 보여왔다.⁴⁾ 그 이유는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3) 「로동신문」 분석을 통해 북한을 분석한 자료는 매우 많다. 대표적인 사례는 조형준, 「북한언론에 관한 연구: 로동신문 사설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2년); 이상우 “로동신문에 나타난 북한정책관심의 변천: 1967~1973,” 「省谷논총」, 제6집, 1975년; 이은숙, 「북한사회연구」(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이종석,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과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주체사상과 유일지도체계를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년 8월); 목정균, 「북한의 위기상황인식에 관한 연구-김일성 사후 「로동신문」사설(1996.1~1997.2)의 「위기주제」 분석-」(서울: 통일연구원, 1999); 백인학·홍민식·김승채, “김정일정권의 ‘신북방삼각관계’ 분석: 「로동신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北韓研究學會報」, 제5권 제1호, 2001년 등임.

4 김정일 정권의 분야별 정책변화 추이 분석

주변국과 극단적인 대치를 피하는 것이 필요하였지만 대외관계의 유연성으로 인해 주민의 ‘주체의식’이 훼손되면 안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역사경험적 방법에 의해 분석해 보면 북한은 크게 4시기에 걸쳐 이러한 경향성을 보였다.

첫째, 1953년 스탈린 사후 소련 및 동구공산권에서 스탈린 노선 및 개인숭배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고, 이에 대해 중국이 비판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중·소이념분쟁이 발생하자 북한은 소련 및 중국과의 대결보다는 ‘등거리 외교’라는 타협적 태도를 취하였다.⁵⁾ 반면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1955년 ‘주체’를 내세우면서 소위 소련파, 연안파에 대한 대대적 숙청을 통해 체제 및 권력강화를 시도하였다. 이 시기 대숙청의 대표적 사례는 1956년 ‘8월종파사건’이었다.⁶⁾ 이 사건 이후 북한내에는 대안 세력이 부식될 공간은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다. 그리고 체제단속 행위는 1958년부터 시작되어 1960년에 끝난 ‘중앙당집중지도 사업’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업은 1960년대 들어 중·소이념분쟁이 격화되면서 더욱 체계화되었다. 1964년부터 1969년까지 지속된 주민등록사업을 통해 주민들을 기본군중과 복잡군중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1962년 12월 ‘4대군사로선’의 채택으로 나타났다.⁷⁾

둘째, 1971년 4월 미국 탁구팀의 중국방문을 시작으로 소위 미·중간 ‘핑퐁외교’가 시작되고 10월 키신저 당시 美 국무장관의 북경방문 및 1972년 2월 닉슨 美대통령의 북경방문, 동년 9월 일·중수교 등으로 세

4) 북한의 외교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허문영,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서울:민족통일연구원, 1997) 참조.

5) 자세한 내용은 정진위, 『북방3각관계』 (서울: 법문사, 1987) 참조.

6) 자세한 내용은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7) 참조.

7) 4대군사노선의 확립과정에 대해서는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3), pp. 301~308 참조.

계적인 데탕트 무드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1971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을 수용하고 1972년 7월에는 7·4남북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1971년부터는 OECD국가들로부터 외채를 본격적으로 들여오기 시작하였다.⁸⁾ 북한은 1974년 3월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⁹⁾하였고, 9월에는 UN상주 업저버 대표부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대내적으로 북한은 1970년 제5차 당대회를 통해 주체사상을 지배이데올로기로 채택하고, 1972년 12월에는 주석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사회주의헌법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1972년부터 1978년까지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성)내 '주소안내소'를 통해 '주민료해사업'을 실시, 북한내 불순분자 색출은 물론, 월남자 가족까지 철저히 파악하여 불이익을 주었다. 1973년부터는 당중재교부 사업과 반관료주의 투쟁이 실시되었다. 아울러 북한은 1974년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정해 지도체제를 강화하였고, 수령에 대한 절대충성을 강요하는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을 제정하였다.¹⁰⁾

셋째, 중국에서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를 통해 등소평의 개혁개방 노선이 확정되고,¹¹⁾ 1979년 1월 미·중간에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소위 '북방3각관계'가 크게 흔들리게 되자 북한은 소련으로의 경도를 나타내었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한반도평화문제를 위해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1980년 제6차 당대회 시 극명하게 나타났는 바, 북한은 대외정책 기조로 자주·친선·평화를 내세우고 '대남혁명전략'대신 사실상 남북한 현상유지 정책인 '고려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발표하였다.

8) 최주환, 「북한경제론」 (서울: 대왕사, 1992), p. 192.

9) 원문은 이 한 편저, 「북한의 통일정책변천사(하)」 (서울: 온누리, 1989), pp. 455~464 참조.

10) 줄 저, 「김정일리더쉽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35~52.

11) 김하룡, 「중국정치론」 (서울: 박영사, 1990), p. 295.

북한은 대미 ‘인민외교’의 일환으로 1981년 7월 김종익을 비롯한 7명의 재미 교포학자들을 초청하였다. 이후 1984년에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북투자를 겨냥한 「합영법」이 채택되었다. 또한 북한은 1979년 7월 한국과 미국이 제안한 ‘3자회담’을 동년 10월에 거부한 것과는 달리 1984년 1월에 최고인민회의 제7기 3차회의를 통해 미국에 ‘3자회담’을 제기하였다. 1983년의 ‘아웅산 테러사건’에도 불구하고 1984년 3월 ‘L.A 올림픽 공동출전’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되었고, 10월에는 남한에 수해구호물자를 전달하였으며, 1985년에는 ‘남북불가침 선언 채택’을 주장하였다. 1985년 9월에는 분단후 최초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서울·평양 동시교환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사상통제가 더욱 정교화 되었다. 수령에 대한 충성만이 제1 덕목이 되었다. 김정일은 1982년에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여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화’하였다. 주체사상은 ‘혁명적 수령관’으로 확실한 위치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1986년에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까지 등장하였다. 이로써 김일성은 ‘신적 지위’까지 점유하였다.¹²⁾

넷째, 1988년 9월 고르바초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으로 부터 촉발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1990년 사실상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은 북한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즉,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북한에게 시장상실은 물론 체제붕괴 위협까지 느끼게 하였다.¹³⁾ 이를 모면하기 위해 북한은 1989년 남북대화를 적극화하였다. 북한은

12)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줄 저, 「김정일리더쉽 연구」, 앞의 책, pp. 68~74.; 최완규, “사회주의 건설과 주체사상,” 최완규 외, 「북한사회주의 건설의 정치경제」,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3), p. 168.

13) 동구권 붕괴의 북한에 대한 영향은 하용출, “동유럽·북한관계,” 유세희·이정식 편, 「전환기의 북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pp. 93~94 참조.

1989년 1월 남한의 고위당국자회담 제의를 받아 들이고 1989년 2월 8일부터 1990년 7월 26일까지 8차례의 예비회담, 1990년 9월 4일부터 1992년 9월 18일까지 8차례의 본회담을 통해 역사적인 「남북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¹⁴⁾ 아울러 1991년 김일성은 「신년사」를 통해 기존의 연방제안을 변형시켜 '1민족 1국가 2정부 2제도'를 토대로 남북한 자치정부에 국방권과 외교권을 주는 '느슨한 연방제'를 제의하였다.¹⁵⁾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선량한 이미지' 착근정책은 1994년 미국의 '대북폭격'¹⁶⁾ 직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이루게 하였고 비록 김일성의 사망으로 '김영삼-김일성 정상회담'은 무산되었으나 2000년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리고 북한은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1991년 12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고, 수많은 개방관련 법령들을 만들어 냈다.¹⁷⁾ 이는 북한의 개방의도를 서방세계 특히, 미국에게 과시하려는 측면이 강하였다.

한편 1990년 2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북한 핵문제¹⁸⁾는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의 명분을 제공하였고,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을 모면하기 위해 북한은 대미외교에 매진하였다. 1992년 1월 22일 당시 김용순 당국제부장은 미국 뉴욕에서 아놀드 센터 미국무부 정무차관과 접촉을 갖고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였다. 김일성 사후 북한은 1994년 10월 「북미제네바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북한은 끈질긴 대미 '편승외교

14) 자세한 전개과정은 양영식, 「통일정책론」 (서울: 박영사, 1997), pp. 287~310 참조.

15) 「로동신문」, 1991.1.1.

16) 자세한 내용은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by Don Oberdorfer」 (Indianapolis Addison-Wesley, 1997) 참조.

17) 개방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국가안전기획부,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집」 (1996) 참조.

18) 북한핵문제가 서방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 2월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990.2.26.

(bandwagoning)’를 펼쳤고,¹⁹⁾ 결국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북한은 대서방 관계 개선 노력을 본격화하였다. 1995년부터 시작된 ‘경제붕괴’라는 대내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였다.

1998년 김정일은 ‘강성대국’ 건설을 천명하고, 서방세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그 결과 2001년 7월 현재 유럽연합 13개국과 수교하였다. 특히 2001년에 들어서는 변화에 대한 강한 집념을 발표하였다. 2001년 1월 4일 『로동신문』을 통해 김정일은 “새로운 연대에 들어선 것만큼 우리는 지난 날 다른 나라 식의 낡은 틀과 관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보고 모든 사업을 우리 식대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고 하였으며 “이제는 2000년대에 들어선 것만큼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라고 하였다.²⁰⁾ 또한 “구시대의 관습과 사고 방식을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나가자”고 촉구하였으며, “사상 관점과 사고 방식도 일본새와 생활 기풍도 근본적으로 일신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사색하고 새롭게 실천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²¹⁾ 이것은 김정일이 어떤 형태로든 개방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대외 유화 조치와는 달리 국내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혼신을 다하였다. 1991년부터 ‘우리 식 사회주의’가 강조되고 사회주의일탈자 색출을 위해 ‘비사회주의구루뻘’이 조직되었다. 국경경비를 위해 정규군이 동원되고 범법자에 대한 공개총살이 증가되었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1998년 헌법수정을 통해 주석에 못지않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방위원장에 재취임하고, 군의 힘을 빌어 체제와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선군정치’²²⁾를 강조하고 군부대 방문을 강화하였다.

19) 북한핵문제 해결과정에 대한 종합분석은 이준근, 『북한핵의 문제』, (성남, 경기도: 세종연구소, 1995) 참조.

20) 『로동신문』, 2001.1.4.

21) 『로동신문』, 2001.1.7.

1998년 8월 31일에는 3단계 로켓까지 발사, 주민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다. 물론 현재도 주민에 대한 정치사상적 통제는 지속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추이를 추출해 보면 첫째, 북한은 국내·외적 상황이 어려울 경우 생존을 위해 ‘대외 유연’ 정책을 구사한다는 ‘경향성’이 있고, 둘째, 대외 유화조치이전에 사상정치적으로 공고한 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정리해 보면 <표-1>과 같다. 1차, 2차, 3차, 4차 등과 1단계, 2단계, 3단계등은 필자가 임의로 설정한 것이다.

한편 북한이 실행한 대외적 강경책이었던 ‘청와대 습격사건,’ ‘프에블로호 나포사건,’ ‘EC-121기 격추사건,’ ‘판문점 도끼살해 사건,’ ‘아웅산 테러사건,’ ‘KAL기 폭파사건,’ ‘잠수함 사건’ 등이 사건표에서 제외된 이유는 궁색한 논리이지만 북한 최고지도부의 정책적 검증이 없이 ‘군벌주의자’나 ‘맹종맹동분자들’의 일과성 행동 또는 ‘실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일성이 이 사건 책임자들을 철저히 숙청한 것이 반증자료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향후에도 이러한 강경한 사건이 발생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점이다.

위의 ‘경향성’을 토대로 본 연구는 김일성 사망 및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한 수 십만명의 아사자 발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북한은 기존의 행태대로 대내적으로는 강력한 사상정치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유연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실제로 김일성 사후 북한이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는가를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 사설·정론·논설 등을 통해 검증해 보려 한다. 아울러 2001년 1월 북한에게 불리한 부시행정부가 등장했고, 9월 11일 소위 ‘9·11 테러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응징하기 위해 미국이 ‘10·7 대테러전쟁’을 실시, 조기승리를 달성한 이후 북한을 포함해 미국의 ‘테러지원국

22) 선군정치의 실체에 대해서는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참조.

가들'에 대한 태도가 보다 강경해진 상황에서 북한이 향후 어떤 대외정책을 구사할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중의 하나이다.

<표-1> 북한의 대내·외 환경 적응 체계도

1단계: 대내외 위협		2단계: 내부안정 정치		3단계: 대외적 반응		
시 기	내 용	시 기	내 용	시 기	내 용	
1 차	1953.3.5	스탈린사망	1953.	'김일성수령화'	1953.11.2 5	김일성, 중국방문
			1955.12	'주체' 표방		
	1956.2.14 ~15	소련공산당 20차대회, 스탈린 비판	1956.9	연안파, 소련파속칭	1955.3.11	평화통일 주장, '조선'문제조정 국제회의 제의
	1956.8.30	'8월 종파사건'	1957.1.4	중앙당집중지도 사업 본격화	1958.10.2 6	중공군 철수 완료
	1961.5.16	남한내 군사정권등장	1961.9.11	4차 당대회, 빨치산 일색화	1960.8.14	남북연방제 및 교류협력 제안
	1962. 10	쿠바사태발생	1962.12	4대군사노선	1961.7.6	북소우호 및 상호원조조약
	1964. 8.4	미, 월맹폭격	1964. 2.25	3대혁명역량강 화론 등장	1961.7.11	북중우호 및 상호원조조약
			1965. 4.14	주체사상 정립	1960년대	중·소 등거리의 교를 통한 대강 대국 유연외교
			1966.10.5 ~12	당총비서제 도 입		
			1967.5.4 ~8	유일 사상 체 계 확립		

1단계: 대내외 위협		2단계: 내부안정 정치		3단계: 대외적 반응				
2 차	1971.9.13	중국, 입표사건	⇒	1972.12.25	주석제 도입	⇒	1971.8	남북적십자회담
	1971.10.30	키신저, 방중		1972.2~1978.9	주민요해사업		1971.	외채도입 확대
	1972.9.29	닉슨, 방중 및 미·중공동성명		1973년 초	당중재교부사업		1972.7.4	7.4남북공동성명
	1972.9.29	일·중 수교		1973.2	3대혁명소조운동 시작		1973.9.5	UN상주 업저버 대표부
	1975.4.30	베트남 공산화		1974.2.13	김정일, 후계자로 확정		1974.3.25	대미평화협정 제의
				1974.4.14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 정교화		1975.8.25	비동맹회의 가입
3 차	1978.12.	중국, 개방노선 채택	⇒	1980.10	후계체제공식화	⇒	1980.10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79.1.1	미·중국교수립		1982.3.31	김정일, 주체사상 완전 체계화		1984.1.25	3자회담 제의
	1979.7.1	한·미, 3자회담 제안					1984. 9.8	합영법 채택
	1979.10.26	박대통령 피살					1984년 이후	각종 개방관련법 채택 지속
	1980.5.18	광주민주화운동						

1단계: 대내외 위협			2단계: 내부안정 정치		3단계: 대외적 반응		
4 차	1985.3.10	고르바초프 등장, 소련의 변화시작	⇒	1986.7.15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장	1989.1	남북고위급회담 수락
	1989.10	동구붕괴시작		1991.5.5	우리식 사회주의 표방	1991.1.1	연방제수정
	1990.10	독일통일		1991.12.24	김정일, 인민군최고사령관 추대	1991.9.17	UN가입
	1990.10.1	한·소수교		1992.4.9	헌법개정, 사회주의 고수	1991.12.28	나진·선봉특구 설치
	1991.2.28	미국, 걸프전 승리		1993.3.12	NPT 탈퇴 선언	1992.1.22	김용순 방미
	1991.5	미국, 북핵문제 거론 시작		1993.4.8	전민족대단결10 대강령 채택	1994.6.15 ~18	김일성, 카터와 회담, 핵사찰 수용
	1992.8.24	한·중 수교				1994.6	김일성, 남북정상회담 수락
	1992년 이후	미국, 대북 핵문제 해결압력					
	1994.6	미국, 대북폭격 준비					

3. 연구 방법 및 한계

노동당 선전매체인 「로동신문」 사설, 정론, 논설 등을 통해 북한사회의 변화를 분석하고 전망하는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로동신문」은 사건·사고와 같이 북한체제에 부정적인 기사나 비밀스러운 기사는 전혀 다루지 않고, 북한체제의 우월성 등 선전선동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기사내용과 현실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로동신문」을 통해 북한의 정책전환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로동신문』 사설, 정론, 논설 등은 선전목적이 명확한 글이면서도 당시의 중요한 관심사, 쟁점, 문제, 목표 등을 다루고 있어서 그 유용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²³⁾ 예를 들면 1960년대 중소이념분쟁이 한창이던 1966년 8월 12일자 『로동신문』은 “자주성을 옹호하자”라는 사설을 통해 자주노선을 천명한 바 있고,²⁴⁾ 지난 1997년 7월 22일²⁵⁾과 1998년 8월 22일 『로동신문』 ‘정론’을 통해 국가전략 목표인 ‘강성대국’론을 제시한 바가 있다.²⁶⁾

사설, 정론, 논설 등은 매일 정기적으로 반드시 게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최고지배자나 노동당의 논지는 더욱 확실한 근거를 얻게 된다. 따라서 사설, 정론, 논설 등을 분석단위로 삼으면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최고통치권자의 관심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²⁷⁾ 예를 들면 전면사설이나 정론 등 중요 기사는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이 직접 검토·수정하기 때문에 권력핵심의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로동신문』은 일반 당원들의 주요 학습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엿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분석대상 자료는 1994년 7월부터 2001년 11월 31일까지의 『로동신문』에 보도된 각종 사설, 정론, 논설 등이 될 것이고, 이들 제목 분석을 통해 각 분야별 강조빈도수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가 추출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김일성 사후 분야별²⁸⁾ 사설,

23) 『로동신문』 ‘사설’ 분석에 대한 의의는 목정균, 『북한의 위기상황인식에 관한 연구』, pp. 13-14 참조.

24) 『로동신문』, 1966.8.12.

25) 『로동신문』, 1997.7.22. 이 사설에서는 ‘강성대국’론에 대해 체계화된 논리를 제시하지는 않았고 단지 ‘주체의 강성대국’이라는 용어만 사용하였음.

26) 『로동신문』, 1988.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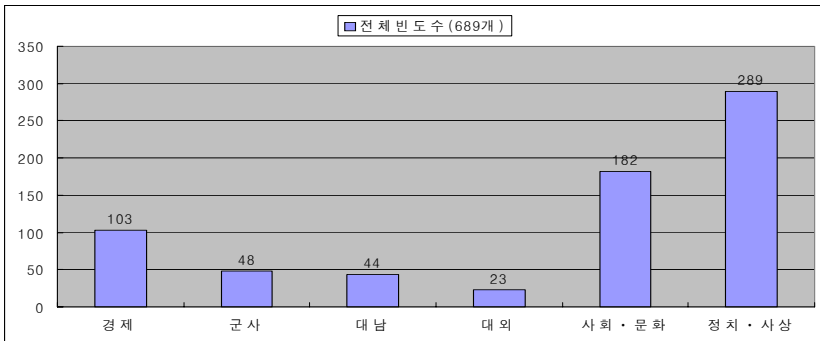
27) 이운죽, 『북한사회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pp. 159~161.

28) 『로동신문』을 분야별, 시계열별로 분석한 논문은 이운죽, “『로동신문』 사설분석에 의한 북한사회 변동의 추적: 1952~1987,” 이운죽, 『북한사

정론, 논설 등의 숫자, 둘째, 김일성 사후 각 연도별로 각 분야에 대한 사설, 정론, 논설 등의 빈도수가 분석될 것이다.²⁹⁾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사건과 관련된 사설, 정론, 논설 제목에 대한 빈도수조사 외에 전체적인 내용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정확한 정책변화 추이를 추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채용된 분석대상 건수는 총 689건으로서 사설 472건, 정론 211건, 논설 6건 등이다. 연도별로는 1994년 55편, 1995년 100편, 1996년 82편, 1997년 112편, 1998년 87편, 1999년 93편, 2000년 86편, 2001년 74편 등이다. 분야별로는 정치사상 289건, 사회문화 182건, 경제 103건, 군사 48건, 대남 44건, 대외 23건 등이다. 연구대상 건수를 도표로 나타내 보면 <표-2>와 같다.

<표-2> 전체 사설·정론·논설(1994.7.4~2001.11.31)



아울러 「로동신문」 사설·정론·론설을 각 분야별로 나누는 주요용어

회연구」, pp. 135~161 참조.

29) 「로동신문」 기사수의 빈도를 상대적 편차지수(Relative Deviation Index)로 분석한 논문은 백인학 외, “김정일 정권의 ‘신북방삼각관계’ 분석: 로동신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5권 1호 참조.

의 기준은 <표-3>과 같다.

<표-3> 분야별 분류기준 주요용어

분 야	주 요 용 어
정치·사상분야	수령론,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 주체사상 및 사회주의 강조, 노동당 강조, 일심단결, 혁명성 및 3대혁명, 고난의 행군, 강성대국, 붉은기 등
경제분야	사회주의경제건설, 혁명적 경제전략, 인민경제생활, 과학기술 발전, 먹는 문제, 각 종 경제분야
사회·문화분야	여성, 청년, 학교, 혼연일체, 결속, 모범적 삶, xx정신, 사랑, 각종 단체 행사, xx지역, 음악, 찬가 등
군사분야	최고사령관, 조선인민군, 금성철벽, 선군정치, 선군령도, 최고사령부, 전승, 총대, 혁명적 군인정신 등
대외분야	미국(‘반제’), 중국, 러시아, 조총련, 평화, 친선, 남남협조 등
대남분야	전민족대단결, 연방제, 조국통일, 남조선, 민족자주, 통일대축전, 10대강령 등

II. 「로동신문」의 기구와 기능

1. 「로동신문」의 기구

「로동신문」은 김일성이 1945년 10월 17일 「正路」³⁰⁾로 명명하고 11월 1일자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正路」가 그 근원이다. 「로동신문」이라는 제명은 1946년 9월 1일 조선신민당 기관지 「前進」을 통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김일성은 1946년 7월 조선신민당과의 합당을 결의한 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때 김일성은 당중앙위원회 기관지로서 「로동신문」 발간을 결정하였다.³¹⁾ 그러나 북한은 「正路」의 창간일인 11월 1일을 「로동신문」의 창간일로 삼고 있다.³²⁾

「로동신문」은 조선노동당 비서국 선전선동부 소속으로 조직과 예산 등에 있어서 철저히 당의 통제를 받고 있다. 「로동신문」 조직은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부장급인 책임주필 밑에 부주필(3~5명), 편집국 및 각종 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책임주필은 발행책임자로서 편집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부주필은 통상 주필로 호칭되며, 교대로 주필역할을 담당하면서 몇 개 부서를 분할 지도한다. 가장 중요한 부서는 업무국과 편집국이다. 편집국은 편집부와 교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국장 2명이 교대로 편집업무를 수행한다. 업무국에는 당생활부, 이론선전부, 공업부, 농업부, 남조선부, 국제부, 사진부, 지방서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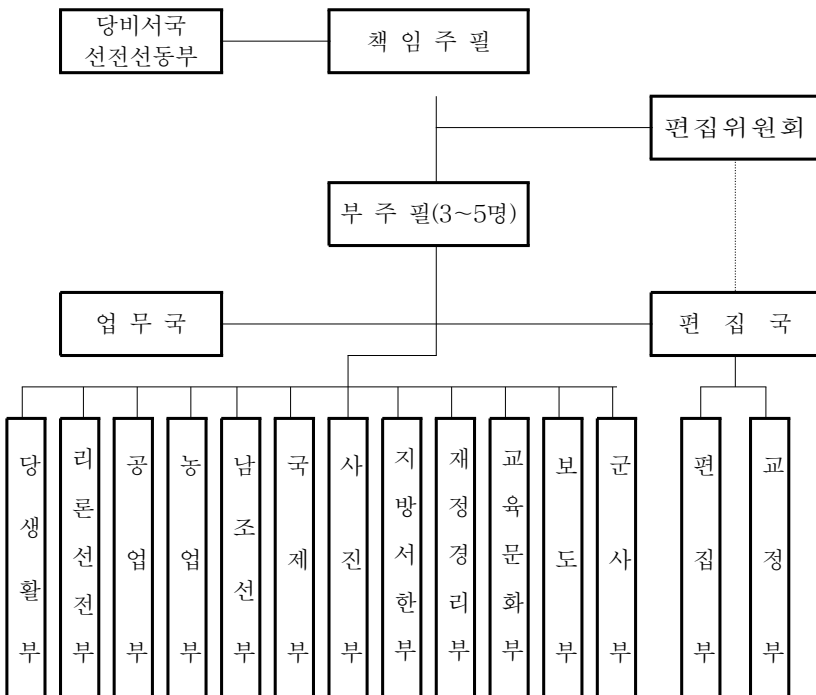
30) 김일성은 ‘북조선공산 중앙조직위원회’ 당기관지인 당보 명칭을 ‘정로’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음. 김일성, “당보를 창간할데 대하여(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선전부일군들과 한 담화 1945년 10월 17일),”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358.

31)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212.

32)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328.

재정경리부, 교육문화부, 보도부, 군사부 등이 있다.³³⁾ 『로동신문』은 해외 및 각 도에 특파원을 파견하고 있으나, 『로동신문』과 각 도당기관 지간에 상하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 각 도에 파견된 『로동신문』 특파원은 당생활만 지방당위원회에서 수행한다. 대체로 『로동신문』 기사는 지방과 관련된 기사를 제외하고는 「조선중앙통신사(KCNA)」의 기사를 전제하고 있다.

<표-4> 「로동신문」 조직표



33) 이항구, 『북의 실상과 허상』 (서울: 한국출판공사, 1985), p. 360.

「로동신문」기자들은 중앙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소속으로서 종사자들은 기자인 동시에 당 일꾼이며, 봉급도 당에서 지급되고 있고, 「로동신문」과 선전선동부간의 인사교류가 빈번하다. 취재 기자는 중앙당 지도원급 대우를 받으며, 중견기자가 되면 내각의 국장급 대우를 받는다.

2. 「로동신문」의 임무와 기능

북한 언론매체들은 사회주의국가 언론들의 일반원칙인 “당과 계급에 의 봉사 와 헌신”이라는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로동신문」은 공식 당 기관지로서 우리의 신문과는 그 성격과 역할이 전혀 다르다. 「로동신문」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우상화·신격화, 1인 독재체제 강화를 위한 교육·교양 매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1974년 이후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노선에 따라 「로동신문」에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찬양기사와 주체사상에 대한 해석, 김일성 현 지지도내용 등이 부쩍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이것은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로동신문」은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역할 외에 당원과 인민대중에 대한 주체사상 전파 및 공산주의 교양, 그리고 각급 당 단체와 당원들의 당 생활 및 사업 지침을 적시에 하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³⁴⁾ 「로동신문」은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관철을 위한 선전선동 활동과당이 설정한 당면과제 완수를 위해 당원과 대중을 동원하는 조직자적 역할을

34) 「로동신문」의 역할에 대해 김일성은 “<로동신문>의 중심과업으로 되는 것은 당의 방침과 정책, 당원들의 투쟁임무를 일상적으로 해설하여 당원들을 교양하는 것이며...”라고 규정하였음.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당선전선동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9), p. 484.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로동신문』은 일반주민들의 교양용으로 사설을 발표하고, 중요한 정책적 전환이나 김정일의 강력한 의지를 담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론을 발표한다. 논설은 각 종 사안에 대한 해설을 담아 자주 발표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론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의 발전전략이 되고 있는 1998년 8월 22일자 『로동신문』 정론 ‘강성대국’이다.

『로동신문』은 총 6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면마다 다루는 분야가 정해져 있으나, 전면사설 등이 게재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1면은 김일성 부자관련 사항, 당면 중요 과제 및 중요 시사관련 문제, 2면은 혁명 전통 및 당 사업(노선, 정책 및 당생활) 관련 사항, 3면은 사회주의 건설 경제 기사, 4면은 과학·교육·문화 사업 및 김 부자 숭배관련 사항, 5면은 통일 및 ‘남조선’ 관련 사항, 6면은 해외 소식 및 대미·일 반제 투쟁, 제3세계권과의 연대성 관련 기사가 취급된다.³⁵⁾

신문의 발행과정상의 특징을 보면, 익일 발간신문에 대해 정오까지 시사관련 기사를 제외한 편집을 끝내고 오후 5시까지 모든 편집을 완료한 후 출판총국 검열부 신문과에 검열을 의뢰하여 검열이 완료되는 즉시 종합인쇄공장에서 인쇄한다. 시사관련 기사는 공란으로 두었다가 기사입수 즉시 활자화하여 재검열 후 인쇄한다. 신문 발행에 앞서 행해지는 검열과정에서 지적되면 무조건 수정 및 삭제된다. 다만 재검열을 받아 통과되면 인쇄될 수도 있다. 검열의 주요내용은 당의 노선과 정책 구현, 김일성 부자의 권위 함양, ‘혁명전통 교양’ 반영, 유일사상체계확립 기여,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경제 발전 선동, 사회의 부정적 측면들의 노출 방지, 사회주의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의 정신, 국가 및 군사비밀 보호 등이다.

35) 이항구, 『북의 실상과 허상』, pp. 358~359.

『로동신문』은 시사성 있는 기사보다는 선전선동에 관련한 기사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사건·사고와 같이 북한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는 전혀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지만 기자들의 취재 내용은 ‘비통(秘通)’을 통해 상급관료들이 읽기 때문에 하급관료들은 『로동신문』 기자들을 두려워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단신 보도는 『로동신문』 취재기자의 기사보다는 주로 『조선중앙통신사』 기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로동신문』은 주 7회 매일 6면이 발간되고 있으며, 발행 부수는 약 150만부로 알려지고 있으나, 최근 종이 부족 등 경제난으로 발행 부수는 90~100만부 정도로 추정된다. 신문 배포는 평양은 오후 6시까지 완료하며 지방도 익일 오전 6~8시까지 도착하도록 열차 또는 트럭 편으로 운반되며, 해외에는 비행기편으로 발송된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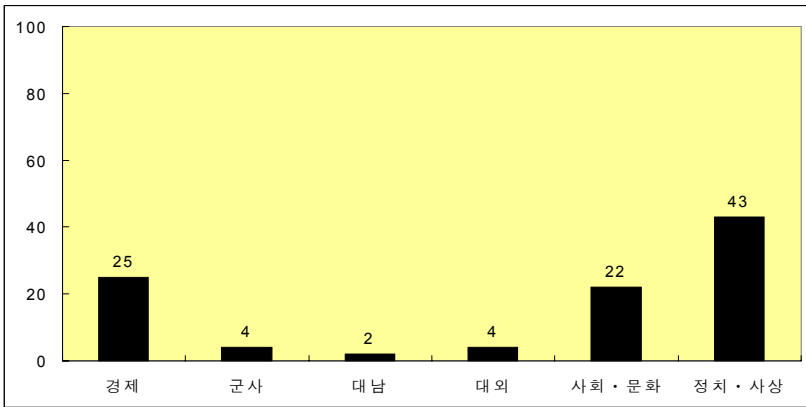
결국 『로동신문』이 갖는 중요성과 그 기능을 감안할 때 『로동신문』 분석은 북한 최고지도부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김일성 사후 『로동신문』 사설, 정론, 논설 등의 분석을 통해 김정일의 각 분야에 대한 추이를 분석해 보려 한다.

36) 前 북한 『조선중앙방송』 기자였던 이항구씨의 증언. 2001년 4월 4일

Ⅲ. 김일성 사후 『로동신문』 사설·정론·논설 추이 분석³⁷⁾

1. 정치·사상분야

<표-5> 1994년 정치·사상 분야 빈도율(%)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 정치사상 분야 『로동신문』의 사설·정론·논설 비중은 43%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김일성 사망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김일성이 1994년 후반기인 7월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량의 정치사상분야 관련 사설·정론·논설이 게재되었다는 것은 김일성 사후 북한의 사상단속이 그 만큼 많았고 위기 의식이 높았다는 의미가 된다.³⁸⁾ 1994년 북한은 김일성 사망에도 불

37)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각 분야별 구체적인 내용은 본 연구원의 「연례 정세보고서;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에서 재인용된 것임.

38) 1990년대 북한의 위기구조에 대해서는 박형중,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1997) 참조.

구하고 주체사상을 당 및 국가지도이념으로 채용하였다. 김일성 사망이 후 7월 11일 보도된 「로동신문」의 첫 사설 제목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동지는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할 것이다”였다. ‘김일성 영생론’이 등장한 것이다. 김정일은 10월부터 김일성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건립했던 전국의 ‘만수무강탑’을 ‘영생탑’으로 교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7월 22일자 사설제목은 ‘유훈통치’를 시사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였다. 이후 사실상 현재까지 김정일의 ‘유훈통치’는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⁹⁾ 아울러 정치사상관련 사설들이 ‘김일성 혁명사상’ 즉 ‘혁명적 수령관’으로 무장하자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것은 그만큼 김일성 사망은 큰 충격이었고 체제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았기 때문에 김일성 사상으로서의 무장이 강조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특징적인 점은 김일성 사망 후 100일이 가까워 올 즈음부터는 김정일로의 통합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10월 5일 정론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우리의 운명이다”라는 제목이었다. 그리고 ‘김일성 사망 100일추모대회’를 앞둔 10월 10일 사설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백전백승할 것이다”였고, 10월 16일 ‘중앙추도대회’ 직후인 10월 18일자 사설제목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 나가자”였다. 이것은 이미 김일성 사후를 대비하여 김정일의 정치적 정당성이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따라서 당시에 풍

39) 북한은 2001년 9월 11일자 「로동신문」 사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아양을 일으키자”를 통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투쟁은 바로 수령님의 생전의 뜻대로 경제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이다”라고 말하여 오늘날 북한의 제반 정책은 김일성 생존시 의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하였던 ‘북한조기 붕괴론’은 ‘북한무지’의 소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최초로 11월 1일 「로동신문」에 자신의 명의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논문을 발표, 사회주의의 변질을 강하게 비판하고, “사람위주의 사회주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는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우월하며 가장 위력한 사회주의”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에도 ‘우리식 사회주의’ 이념을 지배이데올로기로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김일성은 김정일이고 김정일은 김일성’이라는 도식을 사용, 김정일과 김일성의 일체화작업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김일성 유훈’의 절대고수를 표방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역사적 성격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작업도 지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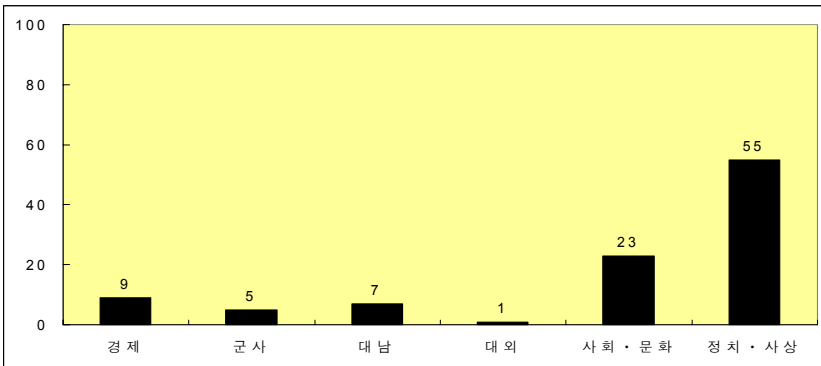
김일성 사망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후계자’ 김정일은 신속하게 정치권력을 장악하였다. 따라서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정치적 공백상태는 없었다. 김정일은 7월 20일에 개최된 김일성 추도식 이후 오랫동안 공식 석상에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성공적 권력승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김일성 사망 100일째인 10월 16일 ‘1백일 중앙추모회’에 참석함으로써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였다. 이후 김정일은 10월 29일 단군릉 시찰, 11월 1일 평양 청류다리 건설장 시찰 등 ‘현지지도’를 실시하였다. 특히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최초인 11월 9일 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서의 명령 하달을 통해 평양시 청류다리 2단계공사와 금릉 2동굴 공사를 당창건 50주년인 1995년 10월 10일까지 마칠 것을 인민무력부와 정무원에 촉구함으로써 권력의 안정성을 과시하였다.

그리고 김정일은 10월 21일 「북미제네바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정상적인 정치외교 활동을 수행하였다.⁴⁰⁾ 이것은 김일성 사망으로 인

40)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지리한 경쟁에 대해서는 이춘근, 「북

한 대내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유연한 정책을 채택한 대표적인 사례였다.⁴¹⁾ 북한은 김정일체제의 정당화를 위해 김정일의 맑스-레닌주의 서적 탐독⁴²⁾, 김정일 통일대통령추대,⁴³⁾ 북·미고위급회담 타결의 김정일 승리⁴⁴⁾ 등을 강조하였다.

<표-6> 1995년 정치·사상 분야 빈도율(%)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도에 「로동신문」은 정치사상 분야 사설을 55%까지 증가시켰다. 그 만큼 정치사상분야에 대한 강조가 절실했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바로 김일성 사망이후 주민의 사상적 해이방지가 국가정책의 제1순위였기 때문이다. 1995년에는 김일성 생존시와는 달리 ‘신년사’가 아닌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 형식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형식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공동

한 핵의 문제; 발단, 협상과정, 전망」(서울: 세종연구소, 1995) 참조.

41) 북한이 미국과 핵합의를 도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계동, “북한의 대미정책,” 양성철·강성학, 「북한외교정책」(서울: 서울프레스, 1995), pp. 191~199 참조.

42) 「평양방송」, 1994.10.22

43) 「조선중앙방송」, 1994.10.24

44) 「조선중앙방송」, 1994.11.6.

사설」 제목은 “위대한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자”였다. 역시 가장 중요한 화두는 ‘김일성=김정일’론이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된 것은 ‘김일성의 사업방식’ 관철과 김정일로의 통합이었다.

대표적인 사설은 2월 4일자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대로 일해나가자”와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자”였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중요성과 당을 중심으로 한 통일단결의 중요성 강조를 위해 1월 1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 6월 19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10월 2일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12월 25일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등을 발표하였다.⁴⁵⁾ 주 내용은 사상사업의 중요성, 김일성 혁명사상의 계승·발전, 김일성 유훈관철,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 3대원칙에 기초한 통일, 주체사상의 순결성 고수 및 외부사조의 침습방지, 부정부패 반대투쟁, 그리고 당의 통일·단결 등이었다.

5월 1일 당 창건 50주년에 즈음하여 발표된 281개의 구호에도 김정일 중심의 체제결속과 사회주의 건설을 촉구하였을 뿐 새로운 정책이나 노선에는 변화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구호의 주요 내용이 “김일성은 사회주의의 시조,” “김일성이 곧 김정일,” “제국주의의 사상 문화적 침투 방지를 위해 모기장을 든든히 칠 것,” “자체의 힘으로 근대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할 것,” “반제 자주력량의 단결” 등이었던 점에서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설은 “전당, 전민, 전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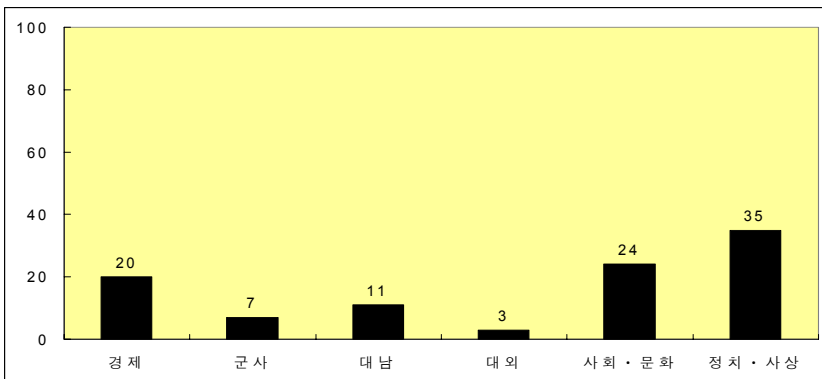
45)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등 3편의 담화는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48~137 에 실려 있음.

당중앙위원회 구호관철에 한결같이 떨쳐 나가자”라는 제목으로 5월 2일자에 나왔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 1주년을 전후해서는 7월 6일자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자,” 7월 8일자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우리 인민은 영원한 혼연일체이다” 등을 발표하였다. 이후부터 북한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구호가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김일성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었으나 정신적으로는 현재도 지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통해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자 하였다. 이것이 ‘김일성 영생론’의 본체이다.

아울러 중요한 사실은 1996년부터 주민동원 구호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붉은기’라는 용어가 1995년 8월 28일 『로동신문』 정론 “붉은기를 높이 들자”에 나타난 것이고, 1998년에 제시된 ‘강성대국’론의 한 분야인 “사상의 강국”⁴⁶⁾론이 1995년 3월 31일 정론에 이미 등장한 점이다. 이것은 북한이 어떤 전략을 내세우기 전 사전에 치밀히 준비한다는 증거이다.

<표-7> 1996년 정치·사상 분야 빈도율(%)



46) 「로동신문」, 1995.3.31.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년도에 들어서 「로동신문」의 정치 사상 분야에 대한 강조는 35% 정도로 약해졌다. 그 이유는 경제난으로 인해 경제분야에 대한 강조가 증가한 점과 사상적 이완이나 김정일에 대한 반항 위험성이 약해졌다는 자신감의 발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1996년 북한은 새로운 이념적 혹은 정책적 노선을 제시하는 대신에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김정일에게 전이하는 작업과 함께 김정일의 독자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작업을 지속하였다. 특히 북한이 1월 1일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에서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고 강조함으로써 ‘붉은기 철학’을 새로이 제기한 점이 주목된다. 「로동신문」은 1월 8일자 사설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자”를 통해 ‘붉은기 철학’을 김정일의 철학, 령도자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의 정신, 령도자를 결사옹위하는 불굴의 혁명정신, 주체사상과 이념의 결정체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1995년 유래없는 대홍수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에 봉착할 것을 예상한 북한이 ‘붉은기’라는 상징을 내세워 주민들이 식량난의 역경을 극복해 나가도록 추동하기 위한 통치전술의 소산인 것으로 해석된다.⁴⁷⁾

1996년에는 ‘붉은기 철학’과 함께 ‘고난의 행군정신’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공동사설」은 “전체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사회주의 3대진지를 튼튼히 다지며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싸워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 3차례 있었다고 주장한다. 김일성의 빨치산 시절인 1938년 12월부터 1939년 3월까지, 1956년 ‘8월 종파사건’ 전후,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등이다. ‘고난의 행군정신’은 빨치산 시절처럼 최악의 식량난이 도래하더라도 사회주의 정신을 포기하지 말라는 동원구호이

47)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김영수, “주체사상의 변용과정과 붉은기 사상,” 「北韓調査研究」 제1권 1호 (서울: 北韓問題調査研究所, 1997), pp. 129~142 참조.

다.⁴⁸⁾ 1996년 『로동신문』 사설이나 정론에 ‘혁명적 군인정신’이 자주 강조된 것⁴⁹⁾도 빨치산들이 발휘한 ‘고난의 행군정신’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정일에 대한 독자적 이미지 구축 작업은 그의 생일인 2월 16일과 6월 19일인 당사업시작 기념일을 즈음하여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로동신문』 사설은 아니었지만 『로동신문』은 2월 1일 김정일의 32년 당사업의 역사를 “위대한 령도자의 자랑스런 연대기”로 선전하는가 하면 『조선중앙방송』 6월 18일자는 그를 “걸출한 사상이론가이며 철학자형의 위인”으로 격찬하였다. 이 즈음 무엇보다 특이한 사실은 김정일 54회 생일을 맞아 軍정치국장 조명록, 총참모장 김영춘 등이 인민무력부 ‘경축야회’에서 김정일을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⁵⁰⁾으로 호칭한 점이다. 북한에서의 군의 역할을 감안했을 때 김정일은 ‘사실상’ 수령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민들의 김일성에 대한 정서를 감안 공론화시키지 않고 있을 뿐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일성 사망 2주년을 맞은 1996년에도 김정일은 당총비서 또는 주석직에 공식 취임하지 않았으나, 군최고사령관 직책으로 실질적 통치를 계속하였다. 김정일에 대한 이미지 구축 작업은 병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민이 ‘총폭탄’이 되어 그를 옹위해야 한다는 통속적 구호에 의해 극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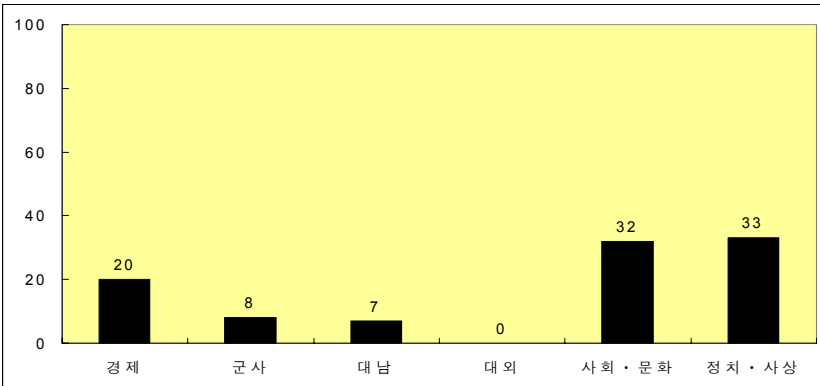
48) 김정일, “일군들은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며 일해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10월 14일),” 『김정일 선집 14』, pp. 249~252.

49) 대표적인 것은 『로동신문』, 1996.10.18. ‘사설’ “모두 다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로동신문』, 1996.11.4. ‘정론’ “혁명적 군인정신”; 『로동신문』, 1996.11.11. ‘사설’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자” 등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1997년에 가서야 ‘혁명적군인정신’을 강조한다. 김정일,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3월 17일),” 『김정일 선집 14』, pp. 292~296.

50) 『조선중앙방송』, 1996.2.16.

를 이루었다. 이것은 북한이 군사 지도자로서 김정일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여전히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였고 그 일환으로 1월 19일 「사로청」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하고 최용해를 제1비서로 임명하였다.⁵¹⁾

<표-8> 1997년 정치·사상 분야 빈도율(%)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도 『로동신문』의 정치사상에 대한 강조는 전년도와 비슷했다. 그 이유는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분야와 사회통합에 대한 강조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로동신문』 사설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은 그 어떤 해보다 많은 사설, 정론이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그 숫자는 평년에 100건 정도를 넘지 않던 것이 1997년에는 112건에 달하였다. 그 만큼 1997년이 가장 어려웠던 시

51) 김정일은 명칭 변경이유를 “수령님의 청년동맹”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김일성 우상화와 연계시켰다. 김정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사명과 임무에 대하여(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 한 담화 1996년 1월 20일),” 「김정일 선집 14」, pp. 138~144.

절이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997년 북한은 ‘당의 령도’와 ‘부국건설’을 유난히 강조하였다. 1월 1일 「공동사설」 제목도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나가자”였다. 김정일도 1997년에 당사업의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고 강조하였다.⁵²⁾ 사상적으로는 ‘고난의 행군정신’과 ‘붉은기 철학’이 여전히 강조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1월 20일자 정론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총진군하자,” 2월 26일 사설 “붉은기사상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일대 양양을 일으키자,” 5월 1일자 사설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자,” 7월 15일자 사설 “<고난의 행군> 최후돌격전을 힘있게 벌리자,” 7월 18일자 정론 “<고난의 행군> 최후돌격전 앞으로,” 8월 6일자 사설 “<고난의 행군> 최후돌격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등이다. 식량난으로 인해 수많은 주민들이 아사⁵³⁾해 가는 상황에서 김정일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주민의 ‘인내’뿐이었을 지도 모른다.

2월 12일 황장엽 망명사건은 북한 지도부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상단속에 정치적 역량을 집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 증거가 주체사상에 대한 강조이다. 2월 18일 「조선중앙방송」 논설을 통해 북한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감으로써 사회주의의 길을 우리식대로 승리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월 17일자 「로동신문」 정론인 “시대는 부른다”를 통해 김정일을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라고 하였고, 3월 31일자 「로동신문」 논설도 “주체사상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

52) 김정일, “올해에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 14」, pp. 53~273.

53) 황장엽은 1995년에 50만명, 1996년에 100만명이 아사했다고 증언하였다.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p. 305.

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로동신문』은 4월 1일자 사설에 “위대한 주체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자,” 5월 25일에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억세계 싸워 나가자” 등을 통해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주체사상을 ‘실질적’으로 체계화한 황장엽의 망명으로 인해 주체사상 자체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발로인 것으로 보인다.

1997년에도 북한은 김정일의 우상화·신격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북한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였으며, 김정일 추대의 당위성을 선전하기 위해 자연현상까지 날조하였다. 「조선기독교연맹」은 9월 1일 담화에서 김정일을 ‘하느님’으로 불렀다. 1997년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큰 사건은 10월 8일 김정일이 당총비서로 추대된 사실이다. 『로동신문』은 10월 10일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최고수위에 모신 조선로동당은 필승불패이다”라는 사설을 게재하였다. 김정일은 1974년 김일성의 후계자로 지명된 후 1980년대에 들어서는 실질적인 통치자로 군림하여 왔고 김일성 사망후에는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의 자격으로 북한을 통치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공식승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김정일이 당총비서에 추대됨으로써 이제 북한은 최고사령관이 통치하는 변칙적인 통치행태를 종결짓고 정상적 체제로 환원되었다는 점이다.

김정일의 추대는 9월 21일 평안남도 당대표회가 개최되어 김정일을 총비서로 추대하는 결정서를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각 도, 직할시 및 인민군, 정무원 사무국, 사회안전부 등이 연이어 같은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당대표자회나 당대회가 개최되지는 않았으며,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공동명의로 김정일의 총비서 추대가 발표되었다. 이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총비서를 선출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김정일의 총비서 추대가 당규약을 뛰어넘는 고도의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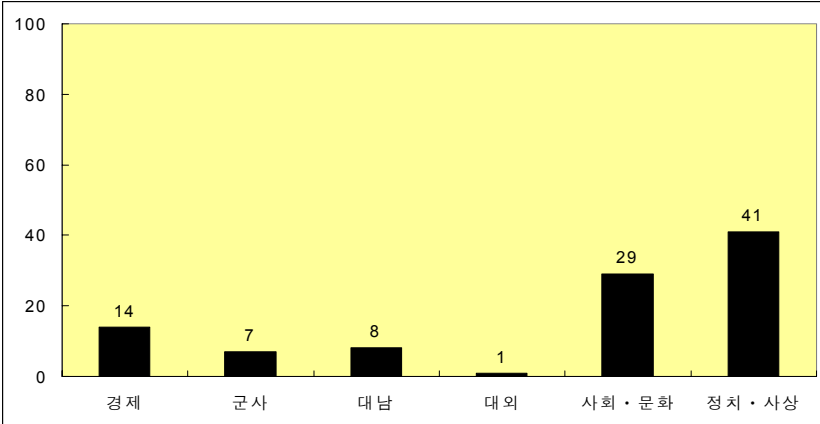
치적 행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상 당대회나 당대표자회가 개최되면 새로운 정책방향이나 비전이 제시되는데, 북한이 당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당총비서 취임을 계기로 김정일과 그 일가에 대한 이상화 작업도 더욱 강화되었다. 11월 4일 평양에 김정일 혁명사적 표식비 및 현지 말씀판이 건립되었고, 김일성 가계를 이상화하는 5개의 각종 이상물이 잇달아 건립되었다. 김정일의 총비서 추대 4일전인 10월 4일 「평양방송」은 향후 북한의 노선이 과거 김일성 노선과 “0.001mm”의 차이도 없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김정일 자신도 2월 17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우리는 절대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요구하는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북한은 김일성 사망후 3년만인 7월 9일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의 연호’를 제정하고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제정하였다.⁵⁴⁾ 이는 김일성을 봉건왕조의 태조와 같이 자리 매김 함으로써 부자세습에 대한 정통성을 강화하고 유훈통치를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아버지인 김일성을 절대화시킨 후 당총비서직에 취임하기 위한 행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김일성에 대한 충·효만이 김정일의 정치적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로동신문」은 9월 12일자 정론을 통해 “영원불멸할 주체년호”를 게재하였다.

54)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으나(「연합뉴스」, 1995.5.4.) 실제로 제정된 것은 1997년 1월 7일이었다. 북한은 당중앙위원회·당중앙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중앙인민위원회·정무원 공동명의로 ‘태양절’ 제정을 발표하였다. 「조선중앙방송」·「평양방송」, 1997.7.9.

<표-9> 1998년 정치·사상 분야 빈도율(%)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에는 『로동신문』의 정치사상 분야에 대한 강조가 예년수준 정도를 유지하였다. 1998년 「공동사설」은 ‘청년보’를 제외한 채 ‘당보·군보’로만 발표되었다. 1997년에 청년들의 사상이완이 심했고 이것이 김정일을 분노하게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조선중앙방송」은 1월 25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최용해 제1비서의 해임을 발표함으로써 최용해가 청년사업에서 과오를 범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1998년은 북한이 1994년 이후 정착되지 못했던 정치적 리더십을 확립하고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는 주요한 해였다. 1998년 9월 5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회의에서 채택된 수정 헌법을 통해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정무원을 내각으로 교체하였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규정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대표직으로 신설하였다.

개정된 북한 헌법 100조는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 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2조는 “국방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고 밝힘으로서 비록 주석은 없지만 국방위원장이 주석못지 않은 권한을 갖게 함으로써 김정일 위원장을 절대화하였다.⁵⁵⁾ 이와 관련 「로동신문」은 9월 7일 사설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우리공화국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다”를 통해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재추대를 찬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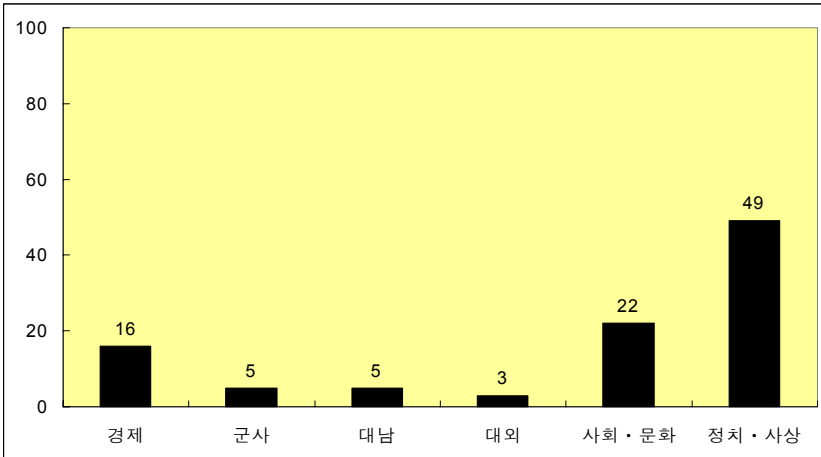
헌법 수정에 앞서 북한은 7월 26일 1990년 4월 이후 8년여만에 제 10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하였고, 687명의 대의원중 443명(64%)을 교체하였다. 아울러 김정일의 공식 승계에 즈음하여, 북한은 8월 22일자 「로동신문」 정론을 통해 ‘강성대국’ 건설을 김정일 시대의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로동신문」은 ‘강성대국’과 관련된 정론과 사설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였다. 이것은 김일성 사후 4년 동안 과도기적 슬로건으로 내세워 온 ‘고난의 행군’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사상강국, 정치대국, 군사강국 등은 달성하였으나 경제강국이 미진한 상태이므로 향후 김정일을 중심으로 경제강국 건설에 매진하자는 내용이었다.⁵⁶⁾ 최고인민회의의 정상화는 북한도 점차 ‘법치주의’적 관행이 정착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1998년 이후 북한은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충격, 경제난에 따른 ‘고난의 행군’을 마감하고, 새로운 목표인 ‘강성대국 건설’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8월 31일에는 ‘3단계로켓’이 발사되었다. 북한은 이를 과학탐사 위성이라고 주장하고 9월 7일 ‘광명성1호’로 명명하였다. 북한주민들이 위성보유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김정일의 위대성을 찬양한 것으로 보아, 북한의 로켓발사 목적은 주민통합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5) 헌법수정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장명봉, “최근의 북한사회주의 헌법 개정(’98.9.5)의 분석: 배경·내용·평가 및 정책전망,” 「統一研究論叢」 제7권 2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p. 1~39 참조.

56)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줄고, “김정일정권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統一研究論叢」 제7권 2호, pp. 131~134 참조.

<표-10> 1999년 정치·사상 분야 빈도율(%)



<표-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동신문」의 정치사상 분야에 대한 강조는 1999년에 들어 증가하였다. 그것은 김정일이 제시한 ‘강성대국’에 대한 강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999년 들어 「로동신문」은 1998년에 선포한 ‘강성대국’ 건설을 정치사상의 중심 주제로 삼았다.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를 필두로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성대국’과 관련하여 「로동신문」은 정론 3건, 사설 15건 등 18건을 게재하였다. 이에 근거한다면 1999년은 ‘강성대국’ 건설이 명실상부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해였고 북한이 경제적 부흥을 얼마나 열망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표-11> 1999년도 ‘강성대국’관련 「로동신문」 정론·사설

1999-01-01	사설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1999-01-05	사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진격 앞으로!
1999-01-06	정론	강성대국을 위하여
1999-01-13	사설	제2의 천리마대진군으로 강성대국의 령마루에 오르자
1999-01-16	사설	과학중시사상을 구현하여 강성대국의 앞길을 열어나가자
1999-02-16	사설	위대한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1999-03-08	사설	녀성들은 내 조국의 강성부흥에 적극 이바지하자
1999-03-25	사설	과학과 기술로 강성대국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하자
1999-04-15	사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지켜 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자
1999-05-01	사설	강성대국에서 조선로동계급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자
1999-05-23	사설	항일혁명투사들이 조국에로 진군하던 기세로 강성대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1999-05-27	정론	강성대국건설의 핵심부대
1999-06-22	사설	강계정신으로 강성대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자
1999-09-05	사설	위대한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1999-09-09	사설	당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1999-11-03	사설	강성대국건설사에 빛날 제2의 천리마대진군 선구자대회
1999-11-05	사설	우리 시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1999-12-30	정론	우리는 강성대국에서 살리라

아울러 1998년 이후 강조되기 시작한 김정일의 정치적 상징조작도 함께 강화되었다. 특히 1999년에는 ‘김일성=김정일’ 논리 하에 김정일의 위대성과 김정일 중심 단결이 강조되었다. 4월 14일 김일성 87회생일 경축 중앙보고대회, 7월 8일 김일성 사망 5주기 중앙추모대회, 7월

10일 김형직 출생 105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9월 9일 정권창건 51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10월 8일 김정일당총비서추대 2돌 중앙보고대회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김정일 위대성 강조 이유는 김일성 사후 주민의 심리적 아노미를 해소하고 김정일 중심의 국가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당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식량난으로 인한 아사자 증가 등의 악재로 인한 체제붕괴 방지를 위해 군부를 우대해 왔다. 군부 출신의 서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선군정치’, ‘선군후로’ 등 군우대 구호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로동신문』 5월 27일 정론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부대” 제하의 글을 통해 노동계급이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임을 강조, 혁명과 건설의 중추세력으로 군을 내세우던 종전의 태도와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 이유는 군우대를 통해 체제안정이 어느 정도 달성되는 반면, 군우대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였기 때문에 김정일은 전통적인 당우위체제로의 복귀를 시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동안 군대가 사회통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집단적인 민간일탈행동이 감소하고 군의 건설 참여를 통해 생산성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6·15 서해사태’와 같은 군사모험주의, 군의 일탈행동 증대, 당에 대한 군의 위압적 태도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당·군 균형체제’에서 ‘당우위체제’로의 복귀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그렇다고 ‘선군정치’가 포기된 것은 아니었다. 당의 역할을 강조한 『로동신문』 사설은 7월 27일 사설 “당의 령도따라 반제투쟁의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9월 9일 사설 “당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 위업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자,” 10월 10일 사설 “당의 기치따라 전진하는 주체혁명의 새시대는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11월 23일 사설 “당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우자” 등이다.

한편, 국가기구의 정상화가 시도되었다. 3월 8일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었고, 5년만에 예산심의회가 진행되었다. 북한은 3월 8일 ‘중앙선거지도위원회 보도’를 통해 유권자 99.9%가 투표에 참가, 100% 찬성으로 대의원 2만 9,442명을 선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대의원은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들로 구성되었고, 여성은 20~30%를 차지하였다. 1998년 최고인민회의 구성에 이어 지방차원의 인민회의가 구성됨으로써 전국적인 행정기관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김일성 사후 5년만에 국가예산 심의회가 있었다. 4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 회의가 개최되어 1998년 결산과 1999년 예산심의 및 인민경제계획법 채택이 이루어졌다.⁵⁷⁾ 이와 관련 「로동신문」은 4월 21일자 사설 “인민경제계획법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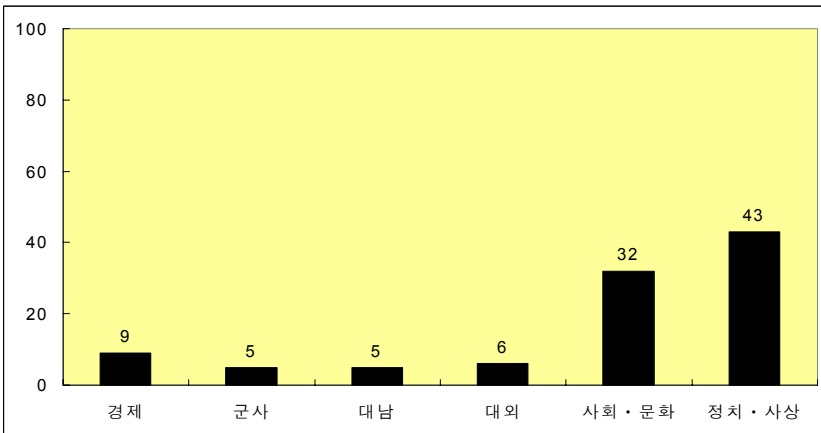
이 회의 의안이 모두 경제관련 사안인 것은 앞으로 경제문제가 중요 사안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인민경제계획법’을 통해 자본주의시장 경제를 배격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것은 ‘황색바람’을 철저히 차단하고 ‘모기장’식 개방을 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6월 1일 「로동신문」·「근로자」·「공동농설」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는 제하의 글을 통해 자본주의요소 침투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모든 분야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1999년에 주목할 것은 세대교체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김정일로부터 ‘혁명선배’로 존대받던 이종욱이 사망하고, 박성철·김영주 등은 권력 일선에서 퇴진하였다. 이들은 4월 24일 인민군창건 67주년 중앙보고대

57) ‘인민경제계획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조성호·임강택, 「북한 ‘인민경제계획법’의 분석 및 평가」(통일정세분석 99-2)(서울: 통일연구원, 1999.5) 참조.

회 이후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와병중이거나 아니면 후진을 위해 일선에서 퇴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퇴진에도 불구하고 김철만, 백학립 등이 80대, 김영남, 이을설, 전병호 등이 70대, 조명록, 연형묵, 김영춘 등이 60대여서 전통적인 노·장·청 구조는 존속되고 있다. 세대교체는 중하권 관료층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것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채취공업상 손종호를 비롯한 최종건(도시경영상), 장일선(국토환경보호상), 변영립(교육상), 강릉수(문화상) 등의 등장도 이러한 기조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12> 2000년 정치·사상 분야 빈도율(%)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도 『로동신문』의 정치사상 분야에 대한 강조는 예년과 비슷했다. 상대적으로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강조가 많아졌다. 아울러 2000년에도 『로동신문』은 주민사상 강화와 김정일 권위제고에 앞장섰다. 특히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로동신문』은 김정일을 ‘절세의 위인’으로 칭송하였다. 대표적인 『로동신문』

사설은 6월 19일자 “절세의 위인을 령도자로 모신 영광을 만대에 빛내여 나가자,” 10월 8일 사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우리 당은 언제나 백전백승할 것이다” 등이다. 북한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의 여세를 몰아 김정일을 ‘21세기의 수령’, ‘통일대통령’ 등으로 호칭하면서 김정일의 권위를 강화시켰다. 김정일 위대성 강조 이유는 김일성 사후 주민의 심리적 아노미를 해소하고 김정일 중심의 국가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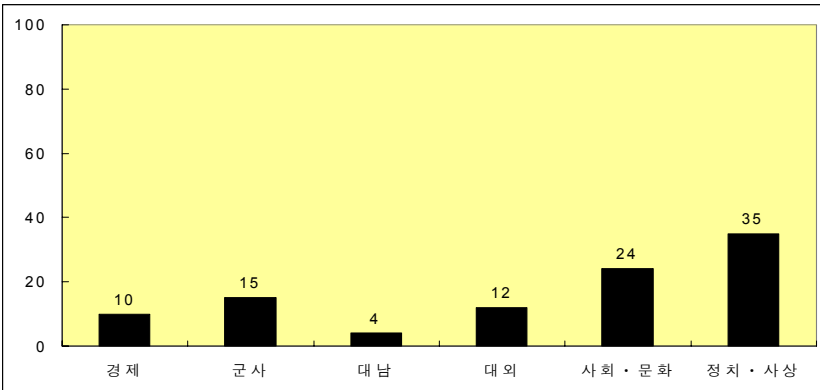
한편, 2000년 1월 1일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은 2000년을 “당창건 55돌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라고 선언, 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주민들이 1950년대 후반 수행했던 ‘천리마운동’시처럼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예년과 다름없이 김정일의 권위제고를 위한 위대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발휘하게 된 근본요인을 당의 ‘세련된 영도’, 즉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독특한 통치형태 덕택으로 규정함으로써, 김정일 위원장의 지도력을 미화하였다. 특히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김정일을 ‘21세기의 수령’, ‘통일대통령’ 등으로 호칭하면서 김정일의 권위를 강화시키려는 작업을 하였다.

1998년 헌법개정 시 인민무력성으로 개칭되었던 인민무력부를 9월 9일 인민무력부로 재개칭하였다. 이는 국방위원회에 속해 있는 무력기관을 내각의 성과 명백히 구분하여 군부 위상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군사력 강화의 명분이 약화됨으로써, 군부의 동요를 예방하고 군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국가기구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이 2000년에도 확인되었다. 4월 4일부터 7일까지 최고인민회의 10기 3차회의가 개최되어 예산을 심의하고, 사회안전성을 인민보안성으로 개칭하는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주목할 만한 안건이 없었던 것은 대내외적으로 특별한 정책 변화 없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관철하고 모든 사업을 ‘수령님식’대로 실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로동신문』은 4월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업을 받들어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였다.

<표-13> 2001년 정치·사상 분야 빈도율(%)



<표-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도 정치사상 분야에 대한 『로동신문』의 강조는 2000년에 비해 약간 낮아졌다. 『로동신문』은 2001년에도 ‘김일성=김정일’론을 통해 김정일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특징적인 것은 군사분야에 대한 사설이 증가되었다는 점이다. 후에 ‘군사분야’에서도 설명이 되겠지만 이는 미국의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고조된 안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9·11 테러사태’ 및 ‘10·7 대테러전쟁’ 이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력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9·11테러사태’ 이후 『로동신문』은 9월 16일 정론 ‘번영하라 선군시대여,’ 9월 22일 사설 ‘반제의식을 높이는 것은 혁명위업수행의 요구,’ 11월 5일 정론 ‘조선은 끄떡없다’ 등

을 게재함으로써 테러사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선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로동신문』 1월 4일자를 통해 김정일이 ‘새로운 관점’이 강조되고, 1월 15일부터는 김정일이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인 상하이(上海) 포동지역을 방문함으로써 개방의지를 분명히 한 가운데 사상 및 군사분야에 대한 강조가 증가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이것은 개방에 앞서 내부체제를 공고히 하는 ‘북한식 관행’의 표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증거는 1월 1일 「공동사설」이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가는 것 보다 더 중대한 과업은 없다”라고 밝힘으로써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의 전개에 부합하는 경제력 회복에 총력을 경주할 것임을 시사한 것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로동신문』은 1월 9일 사설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높이에서 보고 풀어 나가자”를 게재하여 김정일이 추구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뒷받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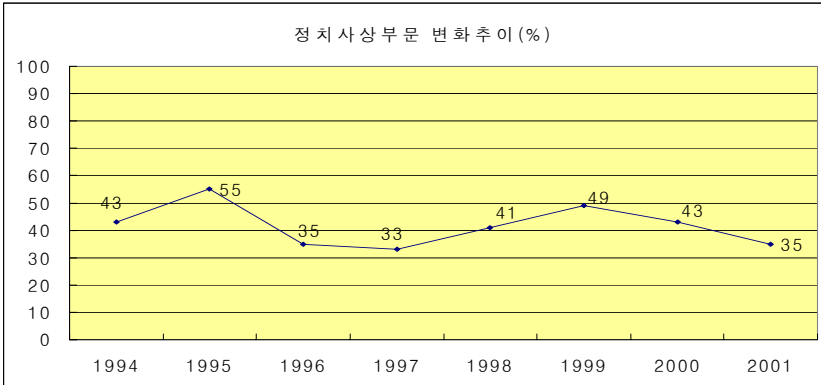
그리고 주목되는 되는 것은 「공동사설」에서 ‘종자론’이 등장한 점이다. 「공동사설」은 2001년에 추진해야 할 주요 과업을 제시하는 가운데 ‘종자론’을 모든 분야에서 구현해 나갈 강령으로 제시했다. 종자론이란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73년 4월 논문 ‘영화예술론’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것이다. 북한은 종자론을 “작품의 핵인 종자를 바로 설정하고 그에 기초해 소재를 잡고 주제를 설정하며 사상을 내세워야 한다”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종자론’이 「공동사설」에서 모든 분야에서 관철해 나가야 할 강령으로 꼽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보검’으로까지 꼽히고 있는 ‘종자론’은 현재 농업부문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생물학분야와 과학연구사업에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대담성’을 강조한 점이다. 『로동신문』은 1월 7일 정론 “더 용감하게, 더 빨리, 더 높이,” 2월 21일 사설 “일군들은 모든

일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실천해 나가자,” 3월 2일 정론 “대담하고 또 대담하라!” 등을 통해 김정일이 추구하는 새로운 관점인 IT산업 육성에 과감히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것은 관료들이 김정일의 의중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정책에 앞장서서 참여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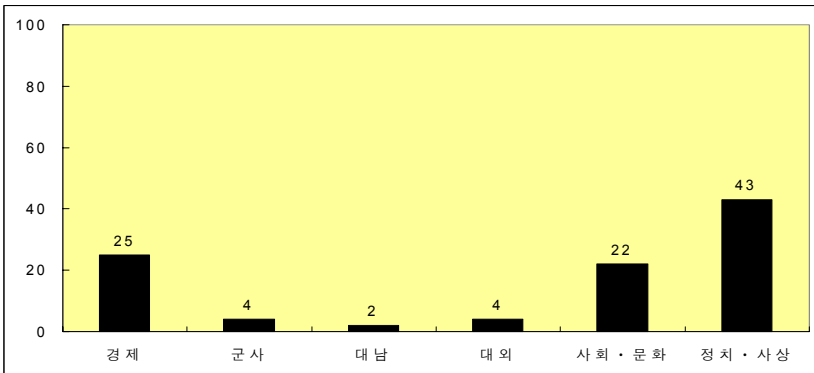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표-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김일성 사후 『로동신문』은 정치사상분야에 대한 사설, 정론, 논설을 다수 게재함으로써 주민들의 사상동요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김정일의 위상제고에 주력하였다. 특히 김일성 사후인 1995년에는 정치사상 분야가 전체 사설, 정론, 논설의 55%를 차지, 북한이 주민사상동요를 크게 걱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재임된 이후인 1999년에 정치사상 분야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다. 1999년 이후 정치사상에 대한 강조 횟수가 점점 줄어든 것은 김정일로의 정치적 통합이 완성된 자신감에서 발로된 것으로서 경제분야나 외교분야에 대한 강조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 증거로서 1999년 『로동신문』에 등장한 ‘강성대국’ 관련 정론과 사설이 18건에 이른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경제강국’ 건설에 초점이 맞춰졌다.

<표-14> 1994~2001년 정치·사상 분야 빈도 수 추이



2. 경제분야

<표-15> 1994년 경제분야 빈도율(%)



<표-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 『로동신문』에는 경제에 대한 강조가 비교적 높았다. 이것은 김일성이 사망하기 직전에 내린 '7·6교시'⁵⁸⁾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사망에도 불구하고 김

정일에는 ‘유훈관철’을 위해 경제회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로동신문』은 8월 30일 사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훈을 받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⁵⁸⁾를 통해 ‘혁명적 경제전략’ 달성을 촉구하였다. 이외에도 9월 5일 사설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앞장서 관철하자,” 9월 13일 사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등을 통해 『로동신문』은 김일성의 경제관련 유훈관철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정치사상 분야 못지 않게 경제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발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전인 1월에 「합영법」을 개정하고 2월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기업 상주대표사무소 규정」과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시행규정」을 제정하였다. 또한 3월 27일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4월 28일 「자유무역항 규정」, 6월 14일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체류 및 거주규정」, 6월 27일 「외화관리법 시행규정」을 마련하였고, 김일성 사망이후인 9월 7일 「토지임대법 시행규정」을 제정하는 등 외국기술과 자본유치를 위한 법적 투자환경 개선에 노력하였다.

또한 「대외경제협력촉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지역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유치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러나 독일,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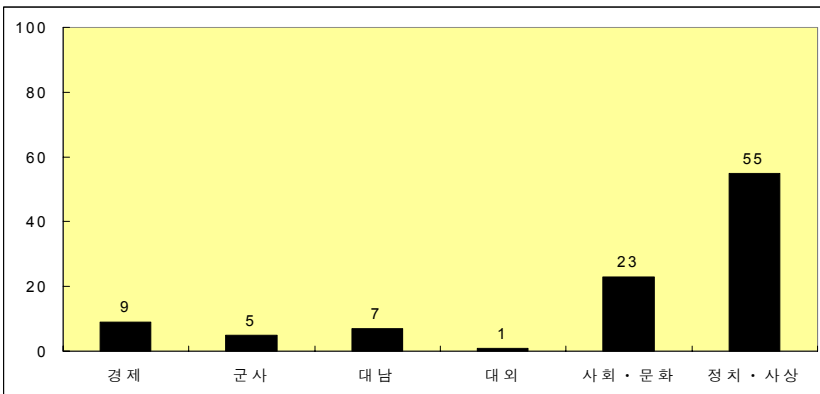
58) 김일성은 사망직전인 7월 6일 경제관료들에게 ①전력 ②비료 ③세멘트④강재⑤선박 문제 해결을 ‘교시’하고 경제관료들의 책임성을 강조하였다.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결론 1994년 7월 6일),”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474~490.

59) 『로동신문』, 1994.8.30.

러시아 등지에서 일부 기업들이 대북 투자에 약간의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냉담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우리 정부가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 타결 이후 북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는 판단 하에 11월 8일 핵·경협 연계 완화조치를 발표하자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11월 1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를 통해 북한은 공식적으로 우리의 태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대남 경제교류 창구인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 회장 이성록과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겸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정우가 차례로 북경을 방문하여 남한 기업인들과 비공식적 접촉을 가졌을 때 적극적인 대북투자를 요청하기도 했다.

<표-16> 1995년 경제분야 빈도율(%)



<표-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 『로동신문』의 경제분야에 대한 강조는 1994년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 그 이유는 경제난 타개를 통한 체제강화보다는 사상이나 정치적 통제를 통해 체제를 지키려는 의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5년 들어 북한경제는 1991년 이후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경제정책은 1993년 12월 8일 당 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완충기 과업으로서의 3대 제일주의(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선행부문」(전력·석탄·철도운수)과 금속부문의 생산잠재력을 동원하여 연료·동력 및 수송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며,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군(郡)을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등 군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⁶⁰⁾

1995년도 경제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최악의 비극은 수재로 인한 식량난이었을 것이다. 당시 북한 UN평가단 보고서는 북한의 수해 피해정도를 약 10만 가구의 이재민 발생, 약 190만톤의 곡물유실, 상당수의 생산시설 및 산업기반 시설의 파괴로 추계하고 수해에 따른 장기적인 경제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1995년 9월 식량난 타개를 위해 건국 이래 최초로 자본주의국가를 비롯한 NGO에게 ‘큰물피해대책위원회’를 통해 대북 식량지원을 호소하였다.⁶¹⁾

한편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대외경제개방과 외자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외자유치관련 법령들을 계속 정비하였다. 북한은 2월 22일 「대의경제계약법」, 4월 6일 「보험법」, 6월 28일 「자유경제무역 지대 세관규정」, 7월 13일 「합영법시행규정」 및 「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적임자 대리업무규정」, 12월 4일 「합작법시행규정」 및 「외국인투자기업 부가계산규정」 등의 외자유치관련 법령들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다.⁶²⁾

그러나 전체적으로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사회체제동요 방지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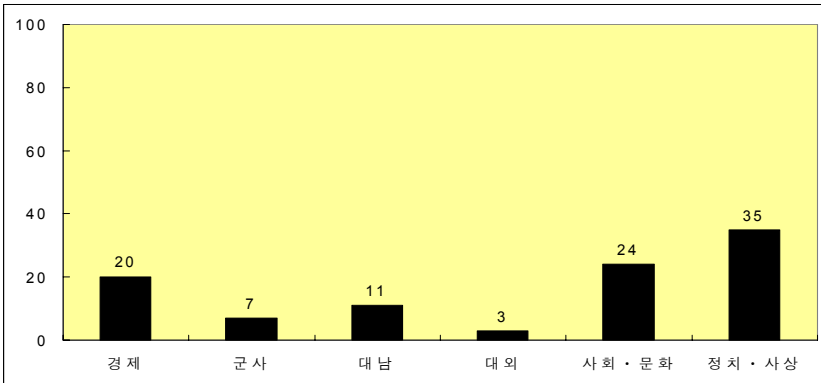
60) 김정일, “당의 무역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5년 2월 1일),” 「김정일 선집 14」, pp. 8~11.

61) 「연합뉴스」, 1995.11.3.

62) 1995년 현재까지 북한이 제정한 외자유치 관련법에 대해서는 국가안전기획부,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집」(1996.1) 참조.

정치사상 분야에 대한 단속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은 1994년에 비해 크게 줄어 들었다. 이것은 1995년도 김정일의 현지도가 1월 1일부터 군부대 방문이었던 것에서도 증명된다.

<표-17> 1996년 경제분야 빈도율(%)



<표-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년 들어 『로동신문』의 경제관련 사설이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1995년 대홍수로 인해 최악의 식량난을 맞이한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선포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자력갱생’으로 해결하려했기 때문이었다. 1월 11일 정론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역세계 싸워나가자,” 2월 7일 정론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자”가 대표적인 기사였다. 그리고 자력갱생을 강조한 사설은 11월 18일자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의 혁명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

아울러 북한은 새로운 경제건설 전략보다는 김일성이 제시한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3월 5일 사설 “사회주의농촌건설위업에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며 나가

자,” 6월 11일 사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국토건설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 12월 28일 사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 대고조의 역사를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 등을 통해 북한은 김일성노선의 지속을 강조하였다.

물론 새로운 것을 강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8월 1일 사설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나가자,” 11월 11일 사설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 등은 경제난 해결을 위해 뭔가 새로운 발상이 필요함을 역설한 내용이었다. 특히 1995년 수해로 인해 국토유실이 심했던 북한은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전군중적으로 국토관리사업에 메달렸다.⁶³⁾ 이를 위해 북한은 국토에 관한 실태를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관료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 토지, 산림, 강·하천, 도로, 연안, 영해 등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국토관리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전망 계획과 당면계획을 철저히 세웠다. 또한 토지관리, 도로정비, 강·하천 관리, 산림보호사업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군중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정권기관과 국토관리기관들은 기관·기업소, 협동농장 별로 관리담당구역을 분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및 모범산림군 칭호쟁취운동 등과 결부시켜 국토관리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6년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에서 천명한 대로 인민생활을 높이고 사회주의 경제토대를 다지기 위해 농업, 경공업,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북한은 농업부문에서는 알곡생산 증대, 경공업부문에서는 생필품 증산, 대외무역부문에서는 수출품 생산 증대를 강조하였으며, 석탄공업, 금속공업부문과 철도운수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고, 이와 함께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절약을 실천

63) 김정일,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8월 11일),” 「김정일 선집 14」, pp. 203~208.

할 것을 강조하였다.

1996년은 「제3차7개년계획」의 실패에 따라 1993년 12월 설정하였던 완충기(1994~96)의 종료 년도임에도 불구하고, 완충기 정책의 성과나 향후 계획에 대한 공식적 발표가 없었다. 이는 완충기의 주요 과제인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시사한 것이었다. 마이너스 성장은 지속되었고 봄철의 냉해로 곡물 파종 시기가 2주 이상 지연되었으며, 7월 하순의 폭우로 인하여 농경지 유실 등 피해가 심각하였다. 북한의 곡물 부족분은 200만톤 이상에 달하였고, 아사자가 속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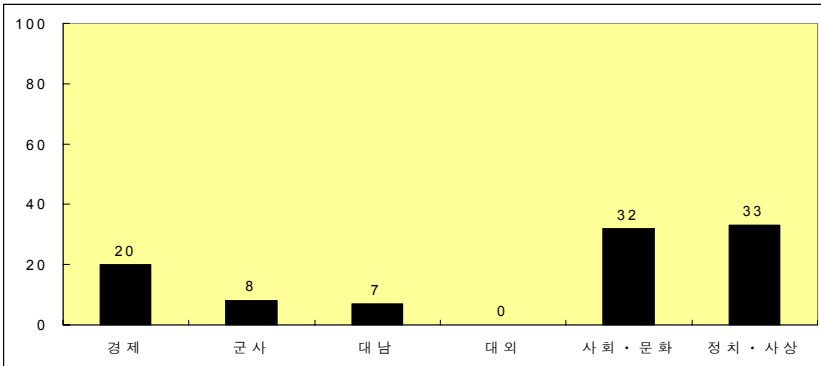
한편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대외개방정책과 외자유치의 일환으로 외자유치 관련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했다. 북한은 2월 14일 「외국인투자기업 명칭제정규정」·「외국인투자기업 등록규정」·「자유경제무역지대가공무역규정」, 3월 28일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공인조각 및 등록규정」, 4월 30일 「자유경제무역지대 공업지구 개발 및 경영규정」 및 「자유경제무역지대 광고규정」, 7월 15일 「자유경제무역지대중계무역규정」·「자유경제무역지대 청부건설규정」·「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등이 제정되었다.

1996년에도 북한은 총체적인 경제난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절약 강조, 노력선동에만 의존하는 등 기존 체제 내에서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 또한 2년 연속된 수재와 집단적 영농체제로 인한 인센티브 결함, 농업원자재 공급난 등의 요인으로 식량사정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생필품 공급 감소로 인해 주민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사회 전 부문에 걸쳐 근로자의 노동의욕 감퇴, 당국의 경제통제력 저하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⁶⁴⁾ 결과적으로 비공식 부문 경제가 확산되

64) 김정일도 경제가 나쁘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였다. 김정일, “경제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4월 22일),” 「김정일 선집 14」, p. 160.

는 조짐을 보였으며, 계획부문의 물자가 불법수단을 통해 암시장 등으로 유입됨으로써 공식배급망의 물자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주민들 대다수는 생필품 수요의 70% 이상을 암시장이나 불법수단을 통해 확보하였다.⁶⁵⁾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로동신문』 사설 빈도에서 보듯이 경제에 대한 관심은 점점 고조되었다.

<표-18> 1997년 경제분야 빈도율(%)



<표-18>에서 보는 것처럼 1997년에도 『로동신문』의 경제에 대한 강조는 1996년과 비슷했다. 경제문제가 그 만큼 중요했다는 반증이다. 북한은 1997년에도 ‘고난의 행군’을 지속하였다. 아울러 2월 3일 사설 “자력갱생의 구호를 들고 사회주의 강행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에서처럼 ‘자력갱생’과 ‘사회주의강행군’이 강조되었다. ‘자력갱생’은 3월 15일 사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경제건설을 힘차게 다그치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1월 1일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중심과업으로 ‘먹는 문제의 결정적 해결’, ‘인민생

65) 이영훈, “북한체제의 변화진단 및 전망: Big Push와 경제체제전환,” 『북한체제의 변화진단 및 전망』 (통일정책연구소 제3차 남북한관계학술회의, 2001.10.25), p. 8.

활의 획기적 향상, ‘국토건설을 통한 부강조국의 토대 마련’을 제시하고, 과업의 달성을 위해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목표는 개방정책 미진, 외화난 등으로 인해 달성되지 못하였다.

아울러 6월과 7월의 가뭄 및 이상고온 현상으로 함경남도, 양강도, 평안남도, 강원도 지역의 농작물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으며, 8월 하순의 해일로 곡창지대인 서해안 지역(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의 농경지가 해수에 침수되어 곡물수확 감소가 불가피했다. 1995년과 1996년의 수해로 유실된 농경지의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7년에도 자연재해가 발생한 데다가 비료, 농약, 영농기자재의 공급이 부족함으로써 곡물생산량은 급격히 하락, 곡물부족량은 200만톤을 상회하였다. 북한은 식량난 해결을 위해 1월 1일 「공동사설」에서 강조한 곡물사료가 필요없는 토끼·염소 등 초식동물의 사육을 장려하고 양어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김정일도 이를 강조하였다.⁶⁶⁾ 8월 11일 「로동신문」 사설은 “풀먹는 집짐승기르기를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자”였다.

한편 북한은 식량난 해결과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지향적 정책을 도입하였다. 1996년부터 농장원들의 노동의욕을 높이기 위해 일부 협동농장에서 기존의 분조관리제를 개선한 ‘새로운 분조관리제’⁶⁷⁾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996년도의 경험에 기초하여 1997년에는 정무원 결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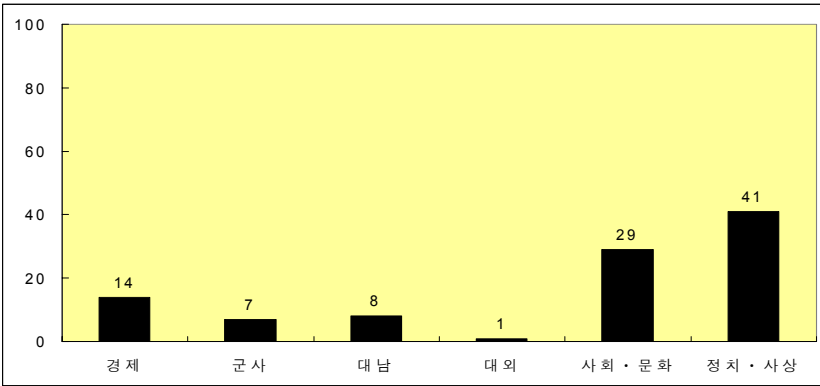
66) 김정일, “풀 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3월 26일),” 「김정일 선집 14」, pp. 297~305.

67) 조충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분조의 규모를 종전의 10-25명선에서 7-8명으로 축소하고, 분조단위의 생산계획을 높이 정하지 않고 웬만큼 노력하면 초과달성할 수 있게 낮게 설정하며, 초과한 몫 전부에 대한 처분권을 분조에 넘겨주는 등의 조치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1996.10.29.

따라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전국의 모든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에 도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11월 24일 열린 국제 농업개발기금(IFAD) 주최 세미나에서 농산물 가격 자율화, 소규모 농산물시장 활성화, 단위작업반에 대한 보너스제도, 과학영농달성 등 4개항의 농업개혁방안을 발표했다.

1997년 북한경제는 전반적으로 1996년도 수준 이하로 쇠퇴하고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비공식부문 경제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북한당국은 체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을 묵인하고,⁶⁸⁾ 농업부문과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부분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표-19> 1998년 경제분야 빈도율(%)



<표-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로동신문』의 경제분야에 대한 강조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물론 어느 정도 최악의 경제상황은 면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나 ‘강성대국’ 건설에 대한 강조때문인 것으로

68) 북한의 비공식 경제부문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최수영, 「북한의 제2경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참조.

분석된다. 1998년도 북한은 경제난 해결을 위해 ‘고난의 행군’에서 벗어나 ‘사회주의 강행군’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경제분야에서도 자력갱생이 더욱 강조되었다. 『로동신문』 2월 3일자 사설 제목도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강행군 앞으로!”였다. 아울러 “성강의 봉화따라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키자,” “다시한번 천리마를 타고 내달리자,”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로선을 끝까지 견지하자” 등 전통적인 경제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강조가 지속되었다. 특히 3월 16일 사설 ‘성강의 봉화따라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키자’는 의미가 있다. 김정일은 3월 함북 김책시의 성진제강연합기업소를 시찰하고 이 공장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자력갱생, 노동자들의 생계보장,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 착안해 국가적 경제부흥 운동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것은 1957년 김일성 주석이 남포시의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당시 강선제강소)를 찾아 ‘천리마정신’을 주창한 것과 그 연유가 유사하다.

1998년도에 북한이 제시한 가장 특기할만한 경제발전 전략은 ‘강성대국’론의 제시였다. 8월 22일 『로동신문』 정론을 통해 정리된 ‘강성대국’론⁶⁹⁾은 향후 김정일이 ‘경제강국’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이었다. 이후 북한의 국가적 역량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모아졌다. 『로동신문』 9월 9일 사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를 필두로 12월 31일 사설은 1998년을 마감하면서 “강성대국건설의 봄우뢰 울린 해”로 마무리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8년 9월 5일 제10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하면서 경제관련 조항들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수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산수단의 소유주체 및 개인소유 확대, 경제관리에서의 독립채산제 명문화 및 수익성 적용, 대외무역의 국가감독권

69) ‘강성대국’이라는 용어는 이미 『로동신문』 1997년 7월 22일자 ‘사설’에 등장하였음.

폐지 및 특수경제지대 장려, 주민에 대한 거주·여행의 자유 부여 등이 다. 경제관련 개정 조항들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준비 및 정책방향 예시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북한 경제 운용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분야에서 북한의 변화 움직임은 헌법 개정과 자립경제 고수로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방향은 보다 실용적이고 개혁·개방지향적인 것으로 변화였다.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의 보고서는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을 계기로 호주 등 각국에 경제전문가를 파견해 시장경제 연구에 착수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농민에게 농지의 일부 소유를 허용하고 그곳에서 재배된 곡물을 농민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실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⁷⁰⁾

북한은 식량난 해결을 위해 감자농사에 힘을 집중하였다. 김정일이 10월 1일 양강도 대흥단군을 현지지도 하여 감자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감자농사를 잘 짓기 위해 수많은 제대군인을 대흥단군종합농장에 보내주라는 ‘교시’를 내렸다.⁷¹⁾ 이후 대흥단군에는 제대군인들이 ‘무리 배치’되었다. 11월 25일 『로동신문』 사설은 “감자농사혁명에 힘을 집중하자”였다. 이후 대흥단군은 감자농사의 모범지역이 되었고, 2000년 4월 4일 『로동신문』 사설은 “전당 전국이 대흥단군을 적극 지원하자”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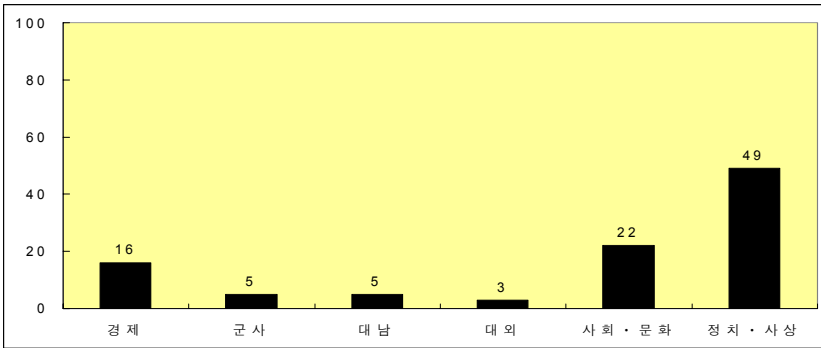
70) 김일성이 ‘농민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1965년이였다. 그는 “농민시장이 남아있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농민시장’은 북한이 공산화된 이후에도 꾸준히 존속해 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일성, “당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5년 11월 15~17일),” 「김일성저작집 2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130~133.

71) 김정일,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킬데 대하여(량강도 대흥단군을 현지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주제87(1998)년 10월 1일),” 「김정일선집 14」, pp. 428~445.

고, 2001년 신년 「공동사설」에는 ‘대홍단 정신’이 강조되었다. 대홍단 정신이란 한마디로 “자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한치의 토지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9월부터는 강원도에 대한 대대적인 토지정리사업이 착수되었다.⁷²⁾ 강원도 총면적 3만정보에 대한 토지정리사업은 1999년 3월중에 완료되었다. 이후 북한은 1999년 7월경 평안북도에 대한 토지정리사업을 시작하여 2000년 5월에 완성하였으며 황해남도에 대한 토지정리사업은 2000년 9월에 시작하여 2001년 12월 3일에 완성하였다. 2001년 12월 17일부터는 평남남도, 남포, 평양에서 동시에 토지정리사업이 시작되었다. 토지정리사업과 관련된 「로동신문」 사설은 2000년 4월 21일 사설 “당의 원대한 구상따라 토지정리사업을 적극 다그치자”였다.

<표-20> 1999년 경제분야 빈도율(%)



<표-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동신문」의 경제에 대한 관심은 1998년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 이것은 ‘경제강국’ 건설 약속을 이행하

72) 북한이 최초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해 강조한 것은 1956년이었다. 김일성, “당 제3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함경남도 당단체들의 과업 (함경남도당영성자회의에서 한 연설 1956년 5월 17일),” 「김일성저작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319.

기 위한 김정일의 행보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1월 1일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에서 1999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설정하고 경제건설에 주력해 왔다.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경제부문 현지도도 활동이 1998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다.⁷³⁾ 1998년 경제부문 시찰은 모두 9회에 불과하였으나, 1999년에 들어서는 총 69회의 ‘현지도’ 중 23회에 이르렀다. 또한 북한당국은 농업법, 양어법, 인민경제계획법, 대외경제중재법 등 경제관련제도를 정비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이례적으로 제철소, 발전소, 농장 등 주요 산업현장의 노력지원을 위해 약 2만~2만 5,000명의 제대군인, 여성근로자, 여성동맹원 등 유휴 노동력의 ‘무리배치’ 사업을 적극 전개하였다.

1999년부터 북한은 생산성 강화를 위해 1월 1일 「공동사설」에서 강조된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을 본격화 하였다. 1월 13일 『로동신문』 사설은 “제2의 천리마대진군으로 강성대국의 령마루에 오르자,” 7월 23일 사설 “제2의천리마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 7월 30일 사설 “제2의 천리마대진군에서 조선녀성의 기개를 떨치자,” 8월 5일 사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심화발전시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8월 9일 사설 “일군들은 제2의 천리마대진군에서 전위기수가 되자,” 8월 28일 사설 “청년들은 제2의 천리마대진군에서 돌격대의 영예를 떨치자,” 9월 28일 사설 “강계정신으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10월 21일 사설 “제2의 천리마대진군에서 현지도단위들이 앞장에 서자,” 11월 3일 사설 “강성대국사에 빛날 제2의 천리마대진군 선구자대회” 등 무려 9건에 달한다.

73)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도 ‘강성대국’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제 88(1999)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 14」, pp. 452~464.

주지하다시피 ‘천리마운동’은 1958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군중동원 운동이었다. 북한이 2000년대를 앞두고, 그것도 과학기술을 통해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상황에서 인간의 힘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이다. 이것은 경제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자유주의’가 팽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경계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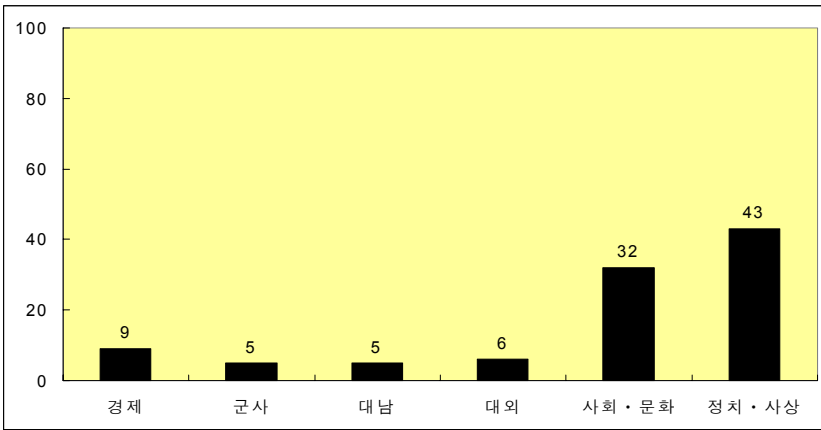
북한은 농업부문 개선에 주력하여 곡물생산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북한은 11월 16일 1999년도 곡물생산량을 전년도 283만톤보다 1.4배 늘어난 428만톤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00년에도 약 120만톤의 식량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북한발표를 정곡 기준으로 환산하면 342.4만톤으로 이것은 「국제농업기구」(FAO) 및 「세계식량계획」(WFP) 합동평가조사단의 평가 결과(347.2만톤)와 비슷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9년에도 전군중적 운동 차원에서 토지정리사업과 함께 영농기반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양강도 대흥단군에서 대대적으로 재배됐던 감자는 함경남북도 등지로 재배지역이 확대되었다.

농업과 함께 북한은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간산업과 에너지부문, 첨단산업분야에 관심을 기울였다. 공업부문에서 북한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전력공업이었다. 1998년에 중소형발전소 5,000여개를 건설한 데 이어, 1999년에는 각 군별 지방산업공장에까지 전력 공급이 가능한 비교적 규모가 큰 발전소 위주로 700여개의 중소형발전소 건설이 추진되었다.⁷⁴⁾ 동시에 북한은 그 동안 부진하였던 대규모 수력발전소의 건설에도 역점을 두었다. 강원도 안변, 자강도 송

74) 북한이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1958년부터였다. 자세한 내용은 김일성, “전력공업부문일군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당면과업에 대하여(전기성 제3차열성자회의에서 한 결론 1958년 2월 4일),” 「김일성저작집 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참조.

원·홍주, 평북 태천 등 10여개 지역에 대규모 수력발전소가 조성되었다. 『조선신보』 3월 12일자는 북한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능력 유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언급하였다.

<표-21> 2000년 경제분야 빈도율(%)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로동신문』의 경제분야에 대한 관심은 1999년에 비해 더욱 약해졌다. 경제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사상이완과 사회일탈 현상이 증대됨으로써 사상강화에 치중한 결과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0년도 「공동사설」은 “우리의 경제는 의연히 어렵다”고 자인하고 당면 경제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고,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강조하면서 향후 경제발전전략으로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특히 김정일을 ‘실력가’로 칭송하면서 2000년부터는 ‘실력전’의 시대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간부들에게도 ‘실력가’가 될 것을 강조하였다. 『로동신문』도 1월 22일 “일군들은 뜻깊은 올해에 실력전을 적극 벌리자”라는 사설을 통해 관료들의 실력배양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실력이 없는 ‘로쇠한’ 간부들에 대한 경고였고, 세대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김정일은 ‘락원의 봉화’를 경제극복 구호로 내세웠다. 「로동신문」은 2월 6일 사설 ‘락원의 호소따라 새로운 대고조에로,’ 2월 24일 정론 ‘락원의 봉화따라 앞으로!’ 등을 실었다. 이것은 1998년에 제시한 ‘성강의 봉화’가 결실을 거두면서 경제회생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던 1999년 1월 김정일은 평북 신의주시에 있는 락원기계연합기업소를 시찰했다. 락원기계연합기업소는 6.25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52년 6월 군수 물자 증산을 결의하고 이를 수행한 ‘락원의 10명 당원(黨員)’으로 유명한 공장이다 ‘대중적 영웅주의의 산실’로 널리 알려진 생산현장이다. 김정일은 이 곳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강성대국의 과업을 수행하려면 락원의 정신과 기풍이 필요하다”면서 ‘락원의 봉화’라는 새로운 캠페인을 들고 나왔다. 북한은 그 결과로 ‘고난의 행군’에서 벗어났다고 자체평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00년도에 경제회생을 위해 중소형발전소 건설, 토지정리사업, 감자재배 및 두벌농사 면적 확대, 생산조직의 개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에 주력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제부문 현지지도 활동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로동신문」 사설숫자와는 달리 2000년 김정일의 총 73회의 공개활동 중 경제부문이 25회를 차지함으로써 1998년의 11회, 1999년의 23회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것은 김정일의 경제분야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 위원장의 경제부문 현지지도는 주로 토지정리사업 현장, 농장, 양어장, 목장 등 농업과 먹는 문제에 관련된 장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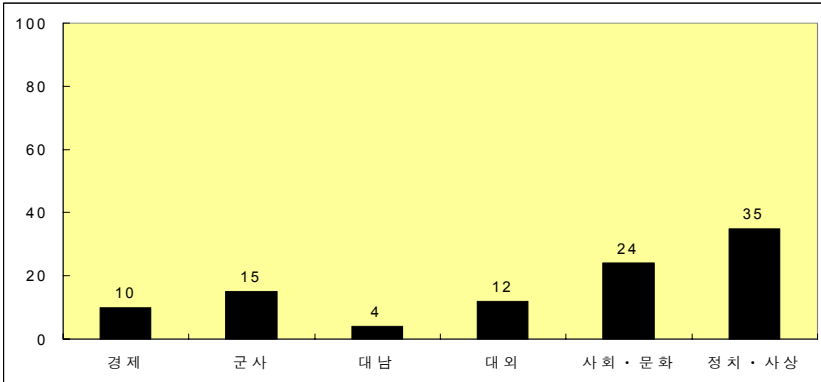
2000년도에 가뭃과 이상고온 현상 및 태풍 등 기상조건의 악화와 영농원자재 공급 부족 및 농업기반 시설의 낙후 등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북한의 곡물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북한 방문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식량계

획(WFP) 북한조사단의 평가에 따르면 2000년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정곡기준 292만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감자농사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두벌농사와 종자혁명을 추진하면서, 전국각지에서 토지정리사업을 전 군증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북한은 2000년에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강조하면서 향후 경제발전전략으로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특히 첨단과학부문의 연구를 중시하였는 바, 『민주조선』은 10월 5일 북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당창건 55돌을 맞이하여 60여건의 첨단과학연구 과제를 앞당겨 완성하였다고 보도했다. 연구과제는 생산공정의 자동화 장치 집적회로용 첨단전자재료 생산 기술, 컴퓨터 및 프로그램 개발과 생물공학부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1월 연합기업소, 종합기업소, 연합총국 등 종합적인 40여개 생산조직을 일반 공장, 기업소, 관리국체제로 개편한 이래 9월부터는 다시 금속·기계·화학 등 중공업부문의 김책제철소, 대안중기계 공장, 남흥청년화학공장 등 20여개의 대규모 산업시설을 연합기업소 체제로 환원시켰다. 이는 연합기업소의 단위이기주의를 척결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연합기업소를 해체했으나, 다시 부품 및 원부자재 공급의 어려움 등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함으로써 생산효율의 저하라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표-22> 2001년 경제분야 빈도율(%)



<표-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도에 들어서 『로동신문』의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약간 증가되었다. 이것은 김정일이 1월 4일자 『로동신문』을 통해 ‘새로운 관점’ 강조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⁷⁵⁾ 2001년 『로동신문』은 ‘경제강국’ 건설문제와 함께 4월 20일 정론을 통해 ‘과학의 세기’를 강조하였다. 이미 북한은 2001년도 「공동사설」에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가는 것 보다 더 중대한 과업은 없다”라고 밝힘으로써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의 전개에 부합하는 경제력 회복에 총력을 경주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1월 4일 『로동신문』을 통해 “현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식하에 김정일은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상하이(上海) 방문을 통해 IT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정일은 귀국도중 신의주 지역의 공장들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였다. 김정일은 2001년들어 11월말 현재 19회에 걸쳐 경제분야 ‘현지지도’를 실시하였다. 김정일의 경제분야 ‘현지지도’는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

75) 『로동신문』, 2001.1.4.

면 <표-23>과 같다.

<표-23> 김정일의 경제관련 행사 숫자

분류 시기	총 횟 수	경제관련행사수	경제관련행사/총횟수(%)
1994	21	0	0
1995	35	2	6
1996	52	6	12
1997	59	2	3
1998	70	11	16
1999	69	23	33
2000	73	25	34
2001	76(11월말)	19	25

11월 22일 사설은 ‘라남의 봉화따라 강성부흥의 북소리 높이 올리자’였고, 이후 북한언론은 ‘라남의 봉화’와 관련된 각 종 담화를 발표하거나 토론을 하였고, 이의 관철을 위한 군중대회를 대폭 확대하였다. ‘성강의 봉화’와 ‘락원의 봉화’에 이어 등장한 이 구호는 첨단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를 일으켜 세우자는 경제부흥 운동으로 분석되고 있다. ‘라남의 봉화’가 나온 함북 청진시의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는 김정일이 1년전 현지지도를 하면서 첨단 과학기술이 필요한 중요설비 생산을 지시했던 곳이다. 김정일은 지난 8월 이 기업소를 재차 방문하고 그 동안의 성과를 높이 치하하였다. 북한 당국이 최근 과학기술개발의 필요성과 함께 강성대국 건설을 강조하는 시점에 ‘라남의 봉화’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들고 나온 것은 과학기술개발을 발판으로 삼아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외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 동안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에서만 허용해 온 위탁가공무역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공무역법」을 4월 5일 제정하였다. 북한이 채택한 「가공무역법」은 대외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는 북한의 의지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조치라 볼 수 있고 김정일의 신사고를 최초로 법제화하였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비록 이러한 법규의 채택이 곧 바로 경제개방의 확대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으나 북한이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21세기를 김정일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새로운 변혁과 최단기간 내에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마련하여 21세기 세계 경제강국의 대열에 위풍당당하게 들어서자고 강조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21세기에 상응한 국가경제력을 다져나가는 것보다 더 중대한 과업은 없다”면서 “올해를 21세기 경제강국건설의 새로운 진격의 해로 빛내이자”라고 역설하였다. 국가경제력 제고를 위한 실천방향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경제의 기술적 개진과 새로운 사고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고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단숨에 국가경제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의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아 개혁·개방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미 언급된 것처럼 북한에서는 “새로운 혁신,” “새 시대의 요구에 맞는 전반적인 전환,”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전환,” “낡은 관념 탈피,” “경제 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개진,” “일한만큼 보수가 차례지도록” 등 신사고를 연상하게 하는 과거와는 다른 수많은 용어와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다.

신사고의 등장은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강화와 변화된 현실 수용 및 실리 추구라는 양면적인 경제관에서 다소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회생을 위해 이념과 사상의 오염이 불가피한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데는 커다란 제약이 존재해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 등장한 신사고를 통해서 북한의 정책 방향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고수를 여전히 강조하면서도 현실 수용, 실리추구 등 실용주의에 입각한 점진적 개혁·개방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에서 행해진 실리·실용주의 중시 경향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북한식 산업구조 조정의 추진, 경제관료의 세대 교체 및 국가 예산 수납 체계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산업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2000년 1월 연합기업소, 종합기업소, 연합총국 등 통합형태의 생산조직을 일반 공장·기업소·관리국 체제로 개편하였다. 연합기업소 체제는 원료 확보 및 제품 생산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점이 있었으나 기업간 독립채산제가 정착되지 않아 장기간에 걸쳐 부실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기업소에서는 연합체제의 해체가 오히려 생산 차질을 야기함으로써 9월부터 금속·기계·화학 등 중공업부문의 김책제철소, 대안중기계공장, 남흥청년화학공장 등 20여개의 대규모 산업시설을 연합기업소로 다시 환원하였다.

둘째, 북한은 경제관료들에 실무지식과 전문성을 겸비한 40~50대를 기용하고 실무진들도 30~40대의 젊은 일꾼들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강정모 무역상을 퇴진시키고 대서방 무역실무에 밝은 리광근 전 종합설비수출입회사 사장을, 임경숙 재정상의 뒤를 이어 재정·금융 전문가인 문일봉 전 러시아 주재 북한 대표를 각각 임명하였다. 또한 조선중앙은행 총재에는 국제합영 전문가인 김완수 전 재정상 부상을 기용하였다.⁷⁶⁾

셋째, 아울러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회의에서 문일봉 재정상은 “국가예산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76) 북한의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최진욱, 『북한의 인사행정』 (서울: 통일연구원, 1999) 참조.

경영활동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고하면서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방만한 예산 운용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을 시사하였다. 이에 앞서 1998년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새로운 중앙예산 수납체계’를 수립하였다. 과거 내각이 예산수납계획을 작성·하달하면 기업소가 재정성에 예산을 직접 납부하던 것에서 내각의 성·관리국 등 기관들이 예산을 거둬들여 일부는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만 국가에 납부하도록 바뀐 것이다. 즉 내각이 자체의 자금을 가지고 경제계획의 수행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내각의 집행·관리 기능을 강화시킨 것이다.

한편 2001년 들어 보다 구체화된 과학기술 중시 정책이 단순히 기술 혁신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은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21세기는 정보산업시대이고 첨단 과학기술은 컴퓨터산업으로 등식화하면서 인민경제 모든 분야의 정보화가 없이는 강성대국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정보기술(IT)산업 육성을 경제회복을 위한 도약의 중심고리로 집중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IT산업을 인민경제에 있어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하면서 정보기술발전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새로운 자력갱생을 추구하고 있다. “오늘의 자력갱생이란 뒤떨어진 것을 창의 고안하는 식의 자력갱생이 아니라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높은 수준의 자력갱생”이라고 설명하면서 IT산업을 성장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있다.⁷⁷⁾ 그렇지만 현재의 여건에서 본격적인 IT산업 육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⁷⁸⁾ 우선 인재 양성 및 IT산업화 마인드 조성에 치중함과 동시에 우리와 서구 선진국

77) 『로동신문』, 2001.1.30; 『민주조선』, 200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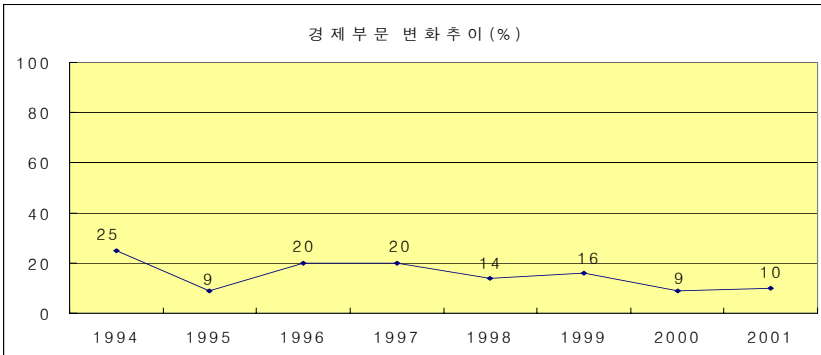
78) 소위 ‘Big Push론’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영훈, “북한체제의 변화진단 및 전망: Big Push와 경제체제전환,” 『북한체제의 변화진단 및 전망』 (통일정책연구소 제3차 남북한관계학술회의, 2001.10.25) 참조.

의 자본·기술에 의존하여 PC생산, S/W개발, 정보통신망 확충 등에 주력하고 있다.⁷⁹⁾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김일성 직후인 1995년 「로동신문」은 체제동요 방지를 위해 정치사상 분야 사설을 늘였으나 <표-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 1996년부터는 경제관련 사설을 대폭 증가시켰다. 북한이 1996~1997년을 ‘고난의 행군’ 기간으로 정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시기가 경제적으로 가장 곤란한 때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분야에 대한 사설 게재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로동신문」은 경제관련 정론·사설·논설수를 대폭 축소하였다. 그 이유는 일단 최악의 경제상황은 극복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북한은 가능하면 ‘자력갱생’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정신,’ ‘사회주의 강행군,’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 등 주민의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구호를 창출해 내고, 감자농사나 경지정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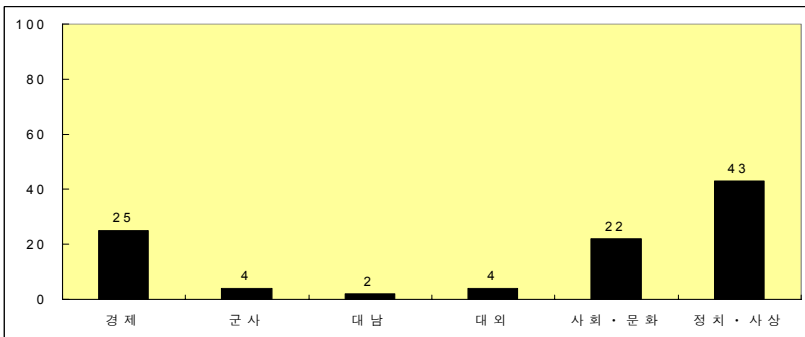
79) 북한의 IT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는 박찬모, “북한의 IT 현황과 전망,” 「統一과 國土」(2001, 가을) (서울: 한국토지공사, 2001), pp. 4~15 및 서재진, “북한의 경제회생정책과 IT산업의 관계,” 「統一과 國土」(2001, 가을), pp. 16~32 참조.

<표-24> 1994~2001년 경제분야 빈도 수 추이



3. 사회·문화 분야

<표-25> 1994년 사회분야 빈도율(%)



<표-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 『로동신문』의 사회문화에 대한 강조는 정치사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것은 김일성이 7월에 사망함으로써 그 이전까지는 특별히 주민들의 사회생활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4년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한 사상동요와 체제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은 후반기부터 사회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⁸⁰⁾ 김일성 사망 직후 발생한 북한내 김정일 타도 전 단살포와 관련하여 공항, 항만 등에서 출입국 휴대품 검사를 강화함과 동시에 김일성 애도기간을 연장하고 추모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북한은 8월 11일 「사로청원들의 맹세모임」⁸¹⁾을 비롯하여 8월 17일 전국의 「직맹」, 「농근맹」, 「여맹」 등 3개 직업동맹원들이 참석한 「근로단체 일군들의 충성맹세모임」을 개최하였으며, 10월 16일 김일성에 대한 「1백일 중앙추모회」에 이어 청년학생들의 「추모회」 및 각 도·시·군 단위의 「추모회」를 추진하여 내부결속을 강화하였다.

중요한 점은 김일성에 대한 애도와 함께 김정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점이다. 『로동신문』은 1994년 10월 5일 김일성 사후 최초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우리의 운명이시다”라는 사설을 게재하여 김정일을 차기 최고권력자로 기정사실화 하였고, 10월 10일에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백전백승할 것이다”를 게재함으로써 김정일로의 권력이양을 확실히하였다. 이것은 김일성 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건재하며 주민 모두는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은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등 남한내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촉구하는 군중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내부적 체제결속을 도모하였다. 북한은 8월 13일 「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조선위원회」를 통해 김인서, 함세환 송환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는데 이어 11월 15일 평양시 군중집회, 11월 18일 평양시 청년학생집회를 추진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결속과 북한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10월 11일 단군릉 개건 준공식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조선민족제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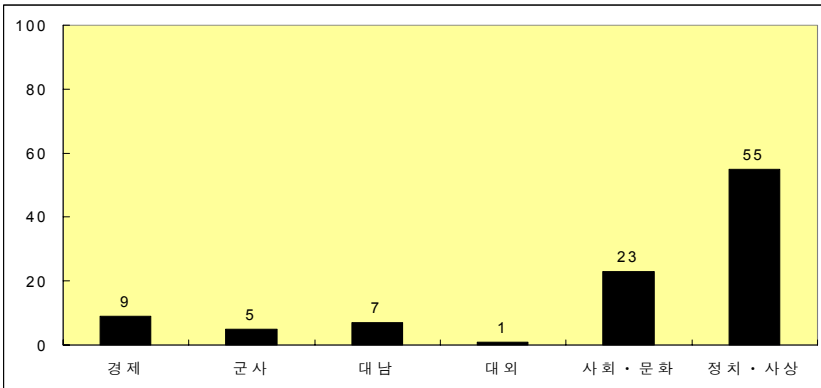
80) 북한의 사회통제체제에 대해서는 이우영,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서울: 통일연구원, 1999) 참조.

81) 『사회주의로동자청년동맹』은 1996년 1월 19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되었음.

를 통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주민들에게 선전하였다.

북한은 10월 18일 제네바 북·미 핵협상의 성사로 북·미관계가 개선, 개방체제로의 돌입이 임박해짐에 따라 사회적 이완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남 적개심을 한층 고조시킴과 동시에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또한 김정일은 11월 1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라는 논문에서 자본주의를 ‘물질지상주의,’ ‘경제만능주의’로 규정하고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자본주의적 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임을 재차 강조하는 사상교양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로동신문』도 12월 20일 사설을 통해 “우리 당의 사상리론에 대한 학습을 더욱 강화하자”고 강조하였다.

<표-26> 1995년 사회분야 빈도율(%)



<표-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 『로동신문』의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강조는 정치사상분야에 눌러 크게 강조되지 못했다. 1995년 김일성 사후 첫 해를 맞이한 북한에서는 강력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부재, 경제난의 심화 등으로 사회통제력이 다소 이완되었고 부정부패와

암거래, 사회일탈현상이 계속되었다. 신분과 사상·성분에 따라 주민을 차별대우하는 엄격한 계급정책의 실시로 북한에서는 체제에 대한 소외 계층의 불만이 증대되었으며, 김정일은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 ‘인덕정치’와 ‘광폭정치’를 보다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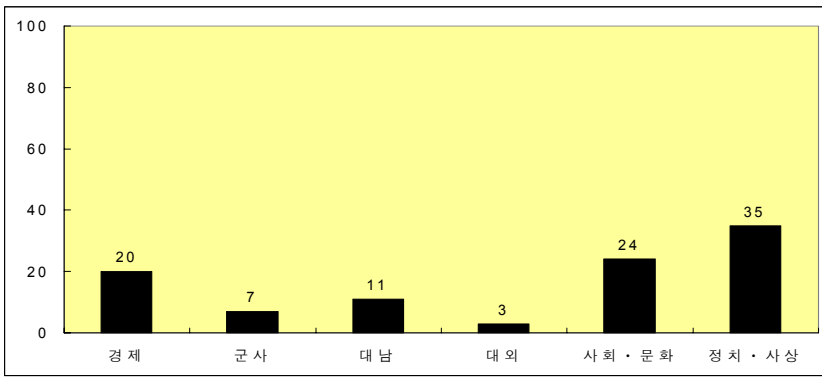
한편, 경제난의 심화로 사적 경제활동이 증가한 동시에 생산량을 조 작하거나 물품을 빼내어 부정을 자행하는 등 사회경제질서 문란행위가 늘어났다. 농촌에서 터밭을 이용한 소위 개인농과 도시직장인들의 장사는 이제 보편적 현상이 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암시장, 물물교환, 보따리장사와 같은 사적 영역의 경제가 활발해지면서 주민들의 의식 속에 돈과 물질을 선호하는 가치관이 자리를 잡았다.⁸²⁾ 이에 따라 뇌물수수, 절취, 줌도둑 등 개인주의적 일탈행위도 증가하였다. 특히 청년들의 사상이완이 심해졌기 때문에 『로동신문』은 6월 22일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길을 따라 사회주의사상진지를 튼튼히 다져나가자”와 8월 28일 사설 “천년들은 당에 끝없이 충직한 청년전위가 되자”를 내보내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한편, 청년들의 사상 이완을 경계하였다. 이에 앞서 『로동신문』은 지식인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6월 17일 사설 “지식인들은 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가 되자”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2월 7일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제정하고 5월 1일 281개에 달하는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발표하는 등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사회결속과 사회주의 강화를 시도하였다. 북한은 7월 7일 김일성 추모대회와 이 행사를 전후해 6월 27일부터 7월 11일까지 열린 영화관람, 7월 8일 연구토론회 및 금수산기념궁전 개관식을 통해 고조된 김일성 추모열기에 편승하여 “김정일은 오

82) 북한의 암시장 실태에 대해서는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경제개혁 전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참조.

늘의 김일성”이라는 구호하에 김정일에 대한 충성교양 강화와 체제단결을 시도하였다.

<표-27> 1996년 사회분야 빈도율(%)



<표-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년에도 경제분야에 대한 강조가 커지면서 「로동신문」의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강조는 일단 뒤로 밀렸다. 그러나 예년보다는 높았다. 그 이유는 김일성 사망 2주년을 맞이한 1996년 북한이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선전선동과 사회일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은 1996년 ‘붉은기 철학’⁸³⁾을 내세우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재해석한 ‘장군님의 한식술론’을 전개하면서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으로 인해 북한사회는 정신적 무질서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북한주민들의 탈북사태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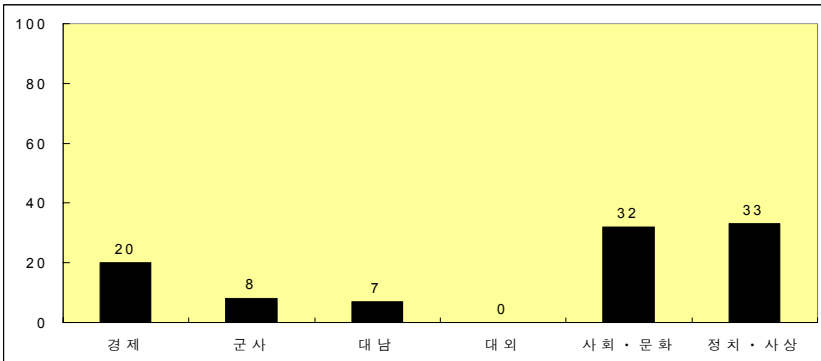
이에 대해 북한은 탈북자를 ‘혁명을 버린 비겁자’로 매도하는 한편, 김정일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하여 ‘제국주의 책동’을 분쇄하자고 주민들을

83) ‘붉은기 철학’에 대해서는 정치사상 부문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함

선동하고, 『로동신문』은 김정일이 1월 14일 강조한⁸⁴⁾ ‘지원(志遠)’을 담은 “래일을 위한 오늘을 살라”라는 사설을 3월 7일에 발표하였다. 북한은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유지하고 외부사조의 침습을 방지”하고자 각종 총화와 학습강연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8월 28일 청년절5돌에 발표한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 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자”라는 김정일의 담화를 통해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 및 단속을 실시하였다.

『로동신문』은 5월 31일 사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를 통해 제국주의 사상과 문화를 철저히 배격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체제를 지켜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국주의 사상·문화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을 역설하였다. 이밖에도 ‘혁명적 의리’, ‘동지에’ 등의 선전구호를 내세우며 사회동요 방지를 위해 부심하였다.

<표-28> 1997년 사회분야 빈도율(%)



84) 김정일,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1월 14일),” 『김정일선집 14』, pp. 134~137.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아사자가 증가한 1997년에는 <표-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동신문』의 사회문화에 대한 강조가 크게 증가되었다. 1997년 북한에서는 김정일에 대한 충섬심을 강조하는 선전선동과 사회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상교육이 더욱 강화되었다. 『로동신문』은 9월 5일 사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 나가자”와 11월 13일 사설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자”를 내보냈다. 이것은 황장엽의 망명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1월 1일 「공동사설」에서 “인민들이 풀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주의를 고수하겠다”며 사상투쟁을 더욱 강조한 북한은 1997년을 고난의 행군과정의 마지막 년도로 규정하고 “붉은기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동시에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집단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와 관련 『로동신문』은 8월12일 정론 “미래는 신념이 강한 인민의 것이다”와 9월 2일 정론 “위대한 단결의 서사시”를 내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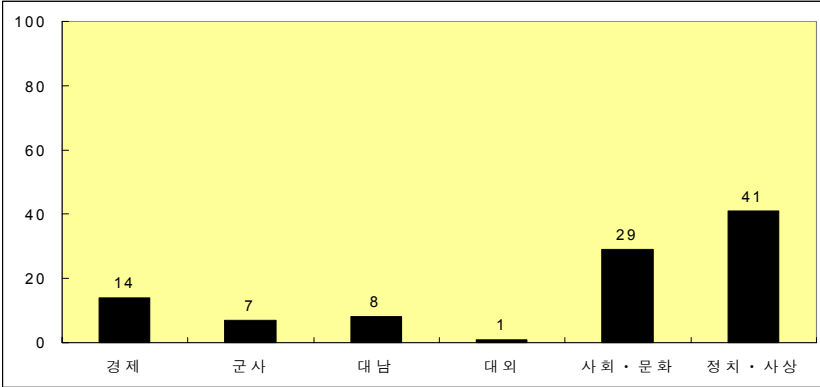
북한은 1997년에도 청년층의 사상교육에 관심을 기울였다. 「공동사설」에서 당·군대와 더불어 청년동맹을 3위일체의 한 요소로 규정하였고 청년들은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이며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서 김정일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로동신문』은 8월 26일 정론 “청년을 사랑하라”와 9월 23일 정론 “조선청년들은 장군님의 별동대이다”를 내보냈다. 청년들에 대한 김정일의 관심은 청년층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김정일이 직접 참여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김정일은 1월 ‘청년기동선전대원’을 접견하고, 2월 4일에는 청년협주단 경축공연을 관람하였으며, 10월 1일에는 김일성대학 창립 51주년을 맞이하여 김일성대학을 방문하고 농구경기를 관람하였다. 그리고 8월 11일에는 김정일 문헌집 「주체의 청년운동과 청년들의 임

무」가 발간되었다.

사상적 통제와 국가보위부 및 사회안전부 등 국가기구에 의한 물리적 사회통제와 함께 1997년에는 보상체제를 활용한 사회적 통제가 강화되었다. 1월에 문예봉의 80세 생일상을 김정일이 차려준 것을 시작으로 주요 인물들과 보통사람들에게까지 김정일의 생일상 차려주기 행사가 계속되었다. 또한 북한은 「피바다가극단」 소속 10여명의 예술인들에게 ‘공훈칭호’, ‘훈장’을 수여하였는데, 과거에는 주로 인민배우·공훈예술가·공훈배우 등의 칭호를 준 반면 1997년에는 국기훈장·노력훈장 등 비교적 높은 등급의 훈장이 수여되었다. 이와 함께 ‘김정일의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각종 단체와 기관에 김정일 명의로 ‘감사’를 보내는 경우가 빈발하였다. 『로동신문』은 김정일의 이러한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9월 26일 정론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땅을 뒤흔든다”를 게재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인덕정치’를 통해 주민들에 대한 선무작업을 병행하였으나, 식량난으로 인한 배급체제의 와해는 기본적인 사회통제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중국과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이탈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남한으로 귀순하는 북한주민의 수도 1996년의 51명에서 79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과거에 비해 가족 단위와 황장엽 당비서, 장승길 이집트 대사 등 고위층의 탈북자가 많아지고 있는 점은 북한 사회통제 기제의 약화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29> 1998년 사회분야 빈도율(%)



<표-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로동신문』의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강조는 여전히 높았다. 그 이유는 1996년부터 1997년까지 극심한 식량난 극복을 위한 ‘고난의 행군’을 끝내고 ‘사회주의 강행군’을 시작한 1998년 북한은 식량난으로 야기된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사회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 사상교육을 여전히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정권수립50주년을 맞이하여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는 선전선동을 전개하고, 새롭게 제시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사회 각 분야의 대중동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력하였다.

우선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일신하고 주민들에게 신념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 『로동신문』은 1월 4일 정론 “사회주의승리자의 기개를 떨치자,” 2월 26일 정론 “강행군과 우리의 신념,” 5월 26일 정론 “군민일치로 승리하자,” 6월 12일 사설 “온 사회에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기풍이 차 넘치게 하자,” 6월 23일 사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등을 차례로 게재하였다.

한편 1998년 「공동사설」의 특징 중 하나는 특히 주목되는 것은 예년과 달리 ‘청년보’가 누락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청년층을 대변하는

『청년동맹』조직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증거이다. 『로동신문』은 8월 28일 사설 “청년들은 당의 위업에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를 게재하였다. 아울러 1998년 들어 특징적인 것은 여자 또는 어머니의 역할을 유난히 강조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청소년들 탈선의 원인이 어머니들의 무관심이나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어머니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어머니나 여성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⁸⁵⁾ 『로동신문』은 이와 관련하여 7월 30일 “당의 령도따라 조선녀성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자,” 9월 28일 사설 “제2차전국어머니대회를 열렬히 축하한다,” 9월 28일 정론 “조선의 어머니를 자랑한다” 등을 게재하였다. 9월 28일부터 개최된 제2차 전국어머니 대회는 1961년 11월15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1회 대회 이후 37년만에 개최된 것으로 경제난 이후 청소년 문제가 그 만큼 심각해졌다는 반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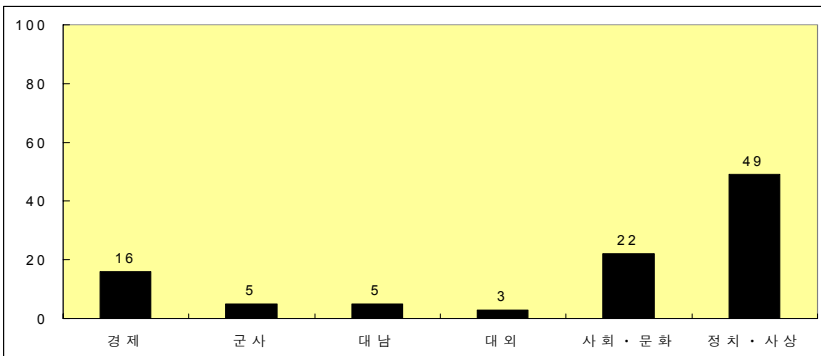
당연한 일이지만 1998년에는 청년층에 대한 사상교육과 조직생활을 한층 강화하였다. 일심단결이 강조되고 배신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덕목으로 내세웠다. 『로동신문』은 9월 13일 정론 “일심단결의 환호,” 8월 7일 정론 “시대의 선구자 자강도사람들을 자랑한다,” 8월 12일 정론 “주체의 신념이 강한 자강도사람들” 등을 게재하였다.

북한은 ‘영웅칭호’ 등 각종 상훈을 수여함으로써 묵묵히 자신의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1998년에는 특히 과학기술자 등 지식인에 대한 포상과 사상교양 독려가 두드러졌다. 신년 공동사설에서 지식인들은 과학과 기술로써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키는 전초병들

85) 김정일은 여성의 중요성에 대해 이미 1995년부터 강조하였다. 김정일, “여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 나가는 힘있는 령령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5년 3월 8일),” 『김정일 선집 14』, pp. 25~28.

이라며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2월 11일에는 교수, 교원 등 지식인들에게 박사, 교수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11월 30일에는 ‘광명성1호’ 로켓발사에 참여한 과학기술자 160명에게 국가표창과 학위·학직을 수여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의 상징이 되고 있는 과학기술 발전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김정일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선전하고자 하였다.

<표-30> 1999년 사회분야 빈도율(%)



<표-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로동신문』의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강조는 1999년에 들어서 낮아졌다. 그러나 이것은 1999년에 들어서는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기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제2의 천리마대진군’ 운동이 유난히 강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은 아니다. 『로동신문』 1월 13일자 사설 “제2의 천리마대진군으로 강성대국의 령마루에 오르자”를 필두로 7월 23일 사설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 7월 30일자 사설 “제2의 천리마대진군에서 조선녀성의 기개를 떨치자,” 8월 28일 사설 “청년들은 제2의 천리마대진군에서 돌격대의 영예를 떨치자,” 9월 28일자 사설 “강계정신으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울러 특이했던 것은 '행군'이 아닌 '구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그 만큼 '빨리 빨리'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다는 점이다. 『로동신문』 1월 26일자 정론 제목은 "준마타고 구보로 달리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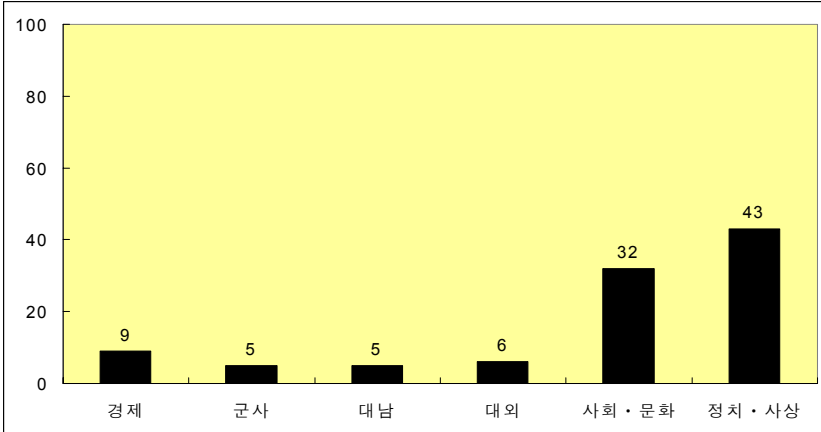
'제국주의'에 대한 경계도 지속되었다. 『로동신문』 6월 1일자 논설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배격하자"였다. 이것은 반미감정을 자극함으로써 경제난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체제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대미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주민들의 사상적 혼란을 예방하려는 시도도 엿보였다. 김정일은 특히 '청년동맹초급조직'의 역할을 강조하였다.⁸⁶⁾ 또한 김정일은 11월 22일 신천 전쟁박물관을 방문하고 근로자들과 군인, 청소년 등을 더 많이 동원, 참관하여 반미의식, 계급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활용하라고 지시하였다.⁸⁷⁾ 또 12월 2일 군참모부 대변인성명 발표 이후에는 대미성토 군중집회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북한은 과학기술 중시를 위해 1999년을 '과학의 해'로 지정하고 김정일이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 단위'인 과학원을 현지도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과학기술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국가 예산에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1999년 과학사업비는 전년 대비 6.3% 증액 지출되었다. 또한 과학기술의 전담부처인 전자공업성이 1999년 신설되었고 부총리 2인 중 한사람인 조창덕이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데서도 북한의 과학 기술 중시정책이 잘 드러났다.

86) 김정일,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모범초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주제88(1999)년 9월 29일)," 「김정일 선집 14」, pp. 465~480.

87) 김정일, "신천박물관을 통한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할때 대하여(신천박물관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주제87(1998)년 11월 22일)," 「김정일 선집 14」, pp. 446~451.

<표-31> 2000년 사회분야 빈도율(%)



2000년에 들어서서도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주민통합에 매진하였다. <표-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동신문』의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사회통제 빈도수는 매우 높았다. 1월 1일 「공동사설」에서부터 강조되기 시작한 ‘당창건 55돐’을 ‘승리의 해’로 만들자는 주장이 사회통합의 주요구호였다. 4월 22일자 『로동신문』과 『근로자』의 「공동사설」은 “강계정신으로 억세게 싸워 나가자”였고,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7월 30일자 『로동신문』 사설은 “강성대국건설에서 녀성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였다. 그리고 11월 19일 『로동신문』 정론은 “붉은기여 더욱 세차게 휘날려라”였다.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서구국가들과의 수교가 이어지면서 주민통제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특히 청년들에 대한 사상단속이 심하였다. 8월 28일자 『로동신문』 사설은 “청년들은 강성대국건설에서 돌격대의 기개를 떨치자”였고, 11월 14일자 사설은 “고상한 도덕기풍을 더 잘 세우자”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청년들에게 “강성대국에서 돌격대, 선봉대가 될 것”을 촉구하고,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영예

롭고 성실한 의무로 간주하고 조국보위에 청춘을 바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평양-남포간 고속도로 건설과 강계-낭림구간 전기철도 건설에 청년돌격대가 투입되었다. 북한은 청년들의 공로에 대한 보답으로 평양-남포간 고속도로 명칭을 ‘청년영웅도로’로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고 체제에 대한 선전선동을 통해 주민들의 사상교양을 강화하였으나, 식량난으로 인한 배급체제의 와해는 근본적으로 사회통합력을 약화시켰다. 중국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수십만명의 탈북자가 존재하고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사회통제의 기제가 약화되었음을 반증한다. 물물교환을 위한 국내이동도 증대되었으며, 특히 빈곤계층주민은 주택 및 기타 생계수단을 처분하고 유민상태로 전락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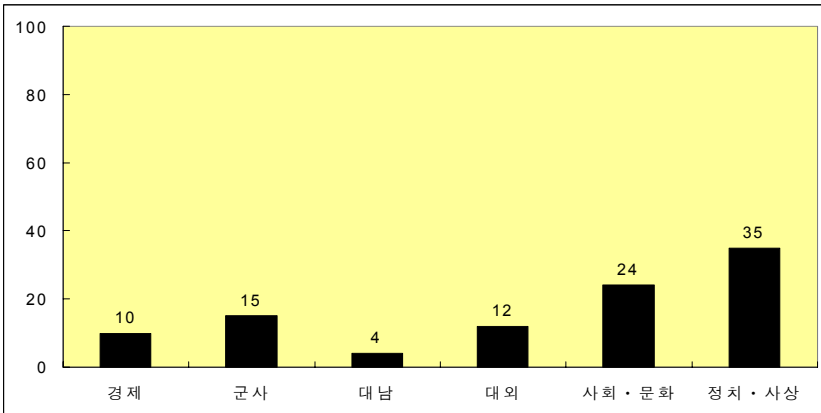
한편, 과학기술은 2000년에 들어와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3대 기둥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우리는 사상 중시, 총대 중시, 과학 기술 중시 로선을 틀어쥐고 올해 총진군을 다그쳐 나가야 한다. 사상과 총대, 과학 기술은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이다. 사상이 건설하고 총대가 위력하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그것이 곧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다”고 주장하면서 경제강국 건설의 토대가 과학기술이고 경제발전이 곧 과학기술발전이라고 선언하였다.⁸⁸⁾ 즉 북한은 사상도 건설하고 총대가 굳건한 상황에서 과학기술만 발전시키면 ‘강성대국’을 이룰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은 먹는 문제 해결과 생산의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향후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적 개진 또는 기술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2000년 개최된 대규모 과학기술발표회가 대부분 먹는 문제와 관련되었다는

88) “당 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 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근로자』, 신년 공동사설, 2000.1.1

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은 현 시기 경제사업의 중심고리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온 사회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며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⁸⁹⁾ 2000년 과학기술발전사업비 예산은 5.4% 증액 배정되었다.

<표-32> 2001년 사회분야 빈도율(%)



<표-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에는 군사분야에 대한 강조가 높아지면서 『로동신문』의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강조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히 부시행정부 등장 및 ‘9·11 테러사태’가 군사분야에 대한 강조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1년에는 「공동사설」 제목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에서처럼 1995년 이후 암울했던 마음을 털어 버리고 사회적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의지가 강력히 촉구되었다. 『로동신문』 사설과 정론에서

89)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에로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신년 공동사설, 2001.1.1.

주로 강조하는 것은 미래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1월 7일 『로동신문』 정론은 “더 용감하게, 더 빨리, 더 높이”였고, 1월 9일 사설은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높이에서 보고 풀어 나가자”였으며, 1월 30일 정론은 “더 좋은 래일을 향하여”였다. 그리고 3월 2일 『로동신문』 정론은 “대담하고 또 대담하라”였으며 3월 8일 사설은 “새 세기 진군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높이자”였고, 4월 2일 정론은 “그리움의 세계에 살자”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여성들의 역할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3월 8일자 『로동신문』 사설은 “새 세기 진군에서 녀성들의 역할을 높이자”였고, 7월 30일 사설은 “부흥강국건설에서 녀성들의 역할을 높이자”였다. 또한 현대과학기술을 강조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5월 7일 『로동신문』 사설은 “현대과학기술을 배우는 사회적 풍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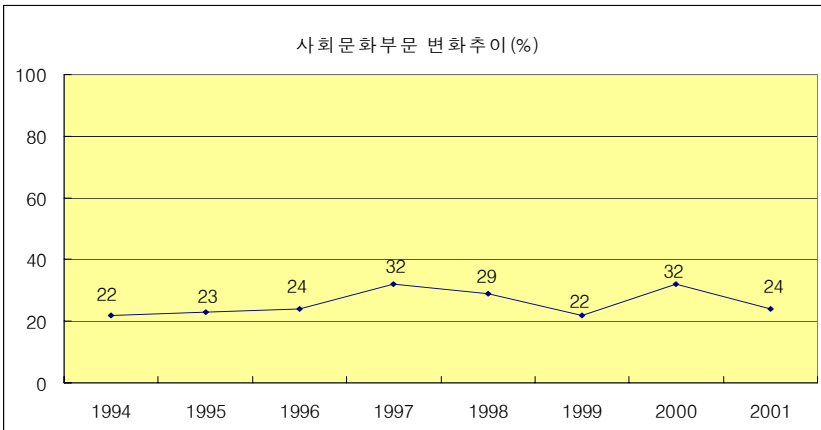
아울러 주목되는 것은 부시 행정부 등장과 ‘9·11테러사태’ 이후에는 ‘미제’에 대한 비난과 함께 ‘혼연일체’ 및 ‘우리’를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6월 25일 『로동신문』 사설은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자”였고, 7월 25일 정론은 “우리는 승리밖에 모른다”였으며, 9월 22일 사설은 “제의식을 높이는 것은 혁명위업수행의 요구”였다. 아울러 8월 6일 『로동신문』 정론은 “혼연일체의 거세찬 흐름”이었고, 10월 18일 정론은 “<우리>라는 그 부름속에”였다. 『로동신문』은 10월 7일 정론 “아리랑”을 내보냈고 11월 22일 사설은 “라남의 봉화따라 강성부흥의 북소리 높이 올리자”를 게재하여 주민통합을 선동하였다.

전체적으로 사회문화 분야 관련 『로동신문』의 사설, 정론, 논설 등의 비중변화 추이를 보면 <표-33>와 같다. 크게 보아 사회문화 분야는 정치사상분야와 깊은 관련이 있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에 대한 충성 강요가 강화되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절대자’ 김일성의 사망은 주민들의 심리적 아노미를 야기 시켰다. 김정일은 신속히 자신을 중심으로 정치사회적 통합을 이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1994년부터 자신을 강조하였

고 “김일성=김정일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자신을 강조하기 보다는 먼저 김일성의 위대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주민들의 호감을 사는 책략을 구사하였다. 그것이 곧 ‘김일성 영생론,’ ‘태양절 제정,’ ‘영원한 주석’ 옹립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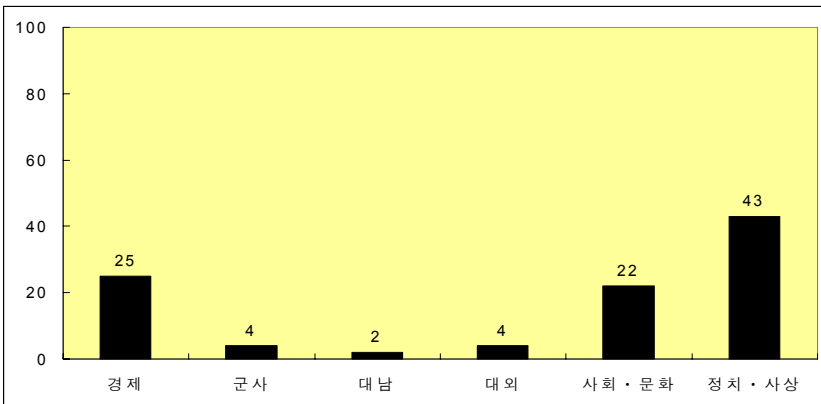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일탈 증가, 청소년 타락 등은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제국주의에 대한 경계도 강화하였다. 특히 1997년에 사회문화 관련 사설, 정론, 논설 비율이 높았던 이유는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동요가 극심했고, 그 만큼 주민들의 단결이 중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2000년에 「로동신문」이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게재횟수를 증가시킨 이유는 정상회담과 EU 등 서방국가 들과의 수교로 인한 사상침습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33> 1994~2001년 사회분야 빈도 수 추이



4. 군사분야

<표-34> 1994년 군사분야 빈도율(%)



1994년도에는 김일성 사망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으나 <표-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사관련 『로동신문』 사설은 많지 않았다. 김일성 사후인 7월 27일 『로동신문』 사설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만대에 빛날 것이다,” 12월 24일 사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군은 백전백승의 혁명적무장력이다” 등 2건이었다. 그 이유는 김일성 사후 김일성 ‘수령’에 대한 애도 분위기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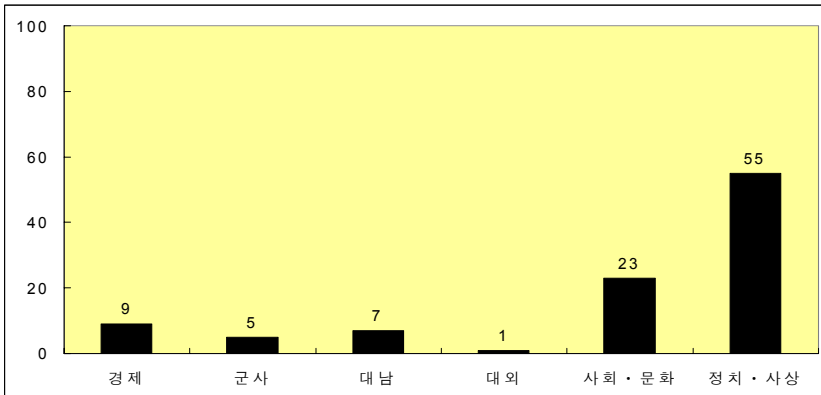
김일성 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군내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다. 오히려 북한군은 김정일에 대한 충성서약에 열중하였다.⁹⁰⁾ 7월 14일에는 해군사령관 김일철과 당군사부장인 이하일이, 7월 20일에는 공군사

90) 조선인민군의 역할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 김정일 시대의 당·군관계를 중심으로-」(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12) 참조.

령관인 조명록이 충성서약을 하였고, 북한군 수뇌부인 군총참모장 최광, 차수인 김봉율, 김광진 등은 7월 27일 휴전 41주년을 맞아 전승기념탑앞에서 행사를 갖고 “김정일의 명령을 곧 김일성의 명령으로 받들어 김정일동지가 있으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안고 군전투력을 더욱 향상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오직 김정일동지를 위해 살고 죽어도 김정일 동지의 무릎을 베고 죽는 열렬한 충신과 효자가 되자”라고 다짐하였다.⁹¹⁾ 이것은 이미 김정일이 1991년 군총사령관 지위를 김일성으로부터 이양받은 때부터 군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편,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은 가장 첨예한 군사문제였던 핵문제를 미국과 10월 18일 제네바에서 「북·미 제네바합의」를 통해 일 단락지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북·미관계’ 분야에서 다루기로 한다.

<표-35> 1995년 군사분야 빈도율(%)



91) 『평양방송』, 1994.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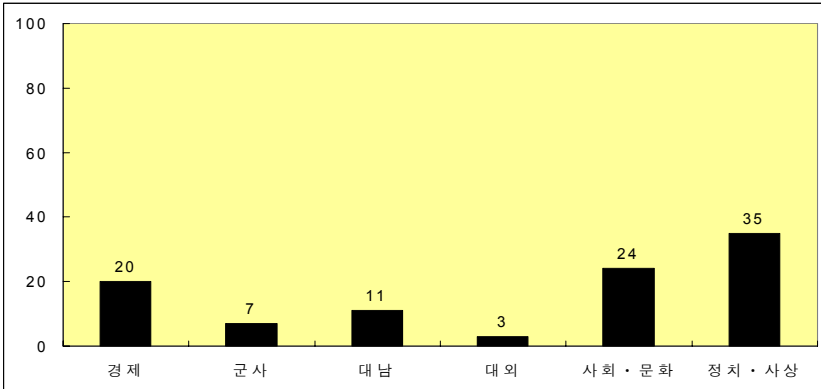
<표-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에도 1994년과 같이 『로동신문』의 군사분야에 대한 강조는 그리 높지 않았다. 그 이유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로의 정치적 통합 노력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95년 들어 『로동신문』은 3월 17일 사설 “군민일치의 미풍을 더욱 활짝 꽃피우자,” 4월 9일자 사설 “위대한 강철의 령장을 모신 우리 조국은 금성철벽이다” 등 5건의 사설을 게재하였다. 1995년 김정일은 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최초의 ‘현지지도’를 군부대 방문으로 시작하였다. 1월 1일 인민군 제214군부대에 대한 ‘현지지도’가 그것이었다.

이후 김정일은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인민군 중대장·중대 정치지도원 대회에 참가하였고, 6월 16일에는 해군 853부대를 방문하였다. 김정일은 7월 18일 금수산 기념궁전 건설 참가 장병을 위로하였고, 8월 6일에는 인민군 훈련일꾼회의 참가자들을 접견하였으며, 10월 10일에는 당 창건 5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는 등 군관련 행사에 20차례 참여했다.

김일성 사망이후 하나의 사건은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원수가 2월 25일 사망하였다는 점이다. 오진우는 빨치산세대로서 군부를 대표하여 김일성과 김정일 모두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한 인물이었다. 이후 김정일은 인민군 사기진작을 위해 10월 8일 인민무력부장 최 광과 리을 설을 원수로 승진시키면서 최광을 인민무력부장에 보임하였다. 그리고 조명록, 이하일, 김영춘을 차수에 임명하였고, 대장이하 14명을 승진시켰다.

한편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래 정전협정 파기와 관련한 주기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5월 3일에는 ‘조선인민군관문점대표부’ 명의로 중립국 감독위원회 북측사무실 폐쇄 ‘성명’을 발표하여 중립국 감독업무를 무력화시켰다.

<표-36> 1996년 군사분야 빈도율(%)



<표-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년 『로동신문』의 군사분야에 대한 강조는 약간 증가하였다. 이것은 경제난으로 인해 사회가 이완되면서, 군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1996년 들어 『로동신문』은 1월 1일 사설 “온 나라에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자,” 4월 9일 사설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백전백승할 것이다,” 4월 25일 사설 “조선인민군은 무적필승의 강군이다,” 10월 18일 사설 “모두다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11월 4일 정론 “혁명적 군인정신,” 12월 24일 사설 “위대한 강철의 령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영광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 등 4건의 사설과 1건의 정론을 발표하였다. 이 사설들은 모두 김정일의 군사적 위대성을 무각시키고 사회를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해 나온 것들이다. 1995년 막대한 수재를 당한 북한은 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군인들처럼 강인한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후에 ‘선군정치’론으로 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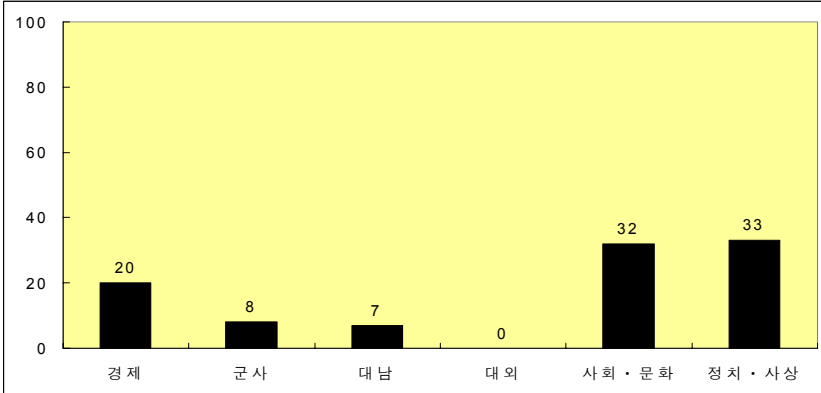
경제난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인 가운데서도 북한은 2월 22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미잠정협정 체결’을 제의하였고, 3월 9일에는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명의로 ‘정전협정 파기위협’ 비망록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3월 28일에는 김광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비무장지대 유지 불가, 대응책 강구 예정’ 담화를 발표하였고, 4월 4일에는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명의로 ‘MDL/DMZ 의무포기’를 선언한 후 4월 5일부터 7일까지 연속 사흘간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내에 무장병력을 투입하여 기관총·박격포 등 중화기 진지를 구축, 남한내에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전쟁준비와 관련된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노력을 지속하였다. 북한 병력은 105만 5천명으로 1995년에 비해 1만 5천명이 늘어났으며, 총군단수도 19개에서 20개로 증편되었다. 특히 북한 지상군은 휴전선 접경인 황해북도에 1개 지구사령부를 정규군단으로 증편함으로써 각 도에 1개 이상의 군단을 확보하여 각도 별로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것은 식량난으로 인한 탈북자 증가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도 분석된다. 즉, 이 시기부터 북한군의 사회질서 유지 참여가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1996년 김정일의 군부관련 ‘현지도’의 특징은 그가 군부를 체제수호의 보루로 간주하고 군부의 위상제고를 위한 활동에 주력했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1996년 총 35회의 군관련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는 김정일이 참석한 공식행사 중 3/4에 달하는 것으로써 그의 군위상 제고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해 주고 있다. 김정일은 최광, 이을설, 조명록, 김영춘, 이하일, 김명국,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 등 군부 핵심인사들을 수행시킴으로써 군부와의 유대를 과시하였다.

<표-37> 1997년 군사분야 빈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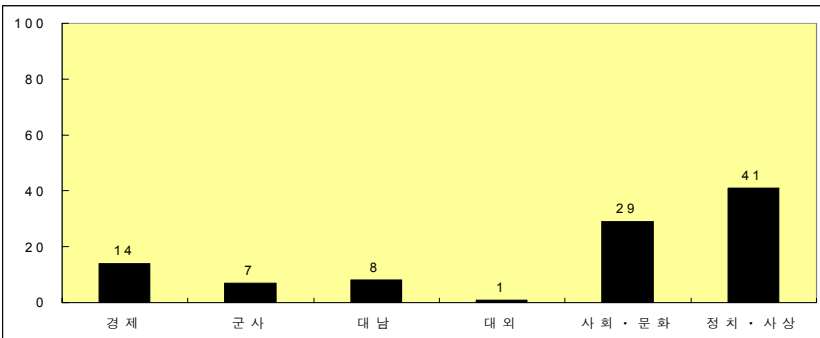
<표-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사에 대한 『로동신문』의 강조비율은 1996년에 비해 더욱 증가하였다. 1997년은 북한으로서는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군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로동신문』은 총 5건의 군관련 사설과 4건의 정론을 발표하였다. 2월 10일 정론 “군민일치,” 4월 9일 사설 “위대한령장을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모신 우리 조국은 금성철벽이다,” 4월 25일 사설 “당의 혁명위업에서 인민군대는 항상 강력한 주력군으로 영광 떨칠 것이다,” 4월 28일 정론 “장하다 우리군대,” 5월 5일 정론 “병사들을 보라,” 5월 19일 사설 “혁명적 군인 정신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을 힘차게 전진시키자,” 6월 10일 사설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 12월 22일 정론 “최고사령관기따라 조선은 나아간다,” 12월 23일 사설 “위대한령장을 높이 모신 영웅적 조선인민군은 불패이다” 등이 그것들이다.

1997년 『로동신문』 논조의 특징은 인민군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1997년은 북한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따라서 사회일탈 현상이 증가하였고 이를 막기 위해 군이 더욱 많은

역할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은 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은 것으로 보인다. 1996년에 이어 ‘혁명적 군 인정신’을 강조한 소이는 주민들의 사회일탈 방지와 패배주의를 경계하고자 하는데 있었던 같다. 이것은 사회가 이전보다 훨씬 ‘군대조직화’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중앙방송』은 10월 7일 정론을 통해 ‘先軍後勞’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김정일이 “경제사정이 아무리 어렵고 부담이 크더라도 선군후로하라”⁹²⁾고 지시했다고 보도하였다.

군에 대한 예우는 1997년에도 지속되었는 바, 김정일은 2월 9일에 대장이하 6명을 승진시킨 이후 김일성의 85회 생일과 군창건 65주년을 앞두고 4월 13일 김일철, 전재선, 박기서, 이종산 등 4명의 대장을 차수로 승진시키는 등 장군 123명을 1계급씩 승진시켰다. 4월 25일 개최된 군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의 주석단 서열에서 이을설, 조명록, 김영춘 등이 서열 5~7위를 차지하여, 군의 위상제고를 암시하였다. 한편 2월 21일 인민무력부장 최 광과 2월 27일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광진이 사망하였다.

<표-38> 1998년 군사분야 빈도율(%)



92) 『조선중앙방송』, 1997.10.7.

1998년에도 『로동신문』은 <표-38>처럼 예년수준의 군에 대한 비중을 유지하였다. 그것은 최고사령관 김정일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때문이었다. 1998년 『로동신문』은 군사문제와 관련하여 3월 9일 정론 “혁명의 기둥,” 4월 9일 사설 “위대한 강철의 령장을 높이 모신 민족적 영광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 4월 25일 사설 “우리 혁명무력은 총대로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다,” 7월 27일 사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전승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 11월 14일 정론 “민족의 최대국사,” 12월 24일 사설 “위대한 령장을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모은 영광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 등 4건의 사설과 2건의 정론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0월 20일 ‘조선중앙방송’ 논설을 통해 등장한 ‘선군정치’라는 용어는 『로동신문』 사설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북한은 1997년에 이어 1998년에도 군을 중시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로동신문』 4월 25일 사설에서 ‘선군혁명령도’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이 방식은 “혁명무력을 혁명의 기둥으로 키우고 그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여 전반적인 사회주의 위업을 즐기치게 이끌어 나가는 군중시의 령도”라고 북한은 주장했다. 아울러 10월 10일 사설에서는 김정일의 군사중시사상을 “김정일동지의 기질이자 우리 당의 기질이고 김정일동지식이자 우리 당의 혁명방식이다”⁹³⁾라고 주장하였다. 김정일의 군중시사상은 10월 20일 『조선중앙방송』 논설을 통해 ‘선군정치’라는 용어로 정제되었다. ‘선군정치’는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북한은 1998년 9월 5일 김정일이 헌법수정을 통해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된 것도 “군중시 정책을 실시하여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장군님에 대한 전체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의 표시였다”⁹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인식은 ‘군사강국’론과도 연계된 것으로서 8

93) 『로동신문』, 1998.10.10.

94) 『조선중앙방송』, 1998.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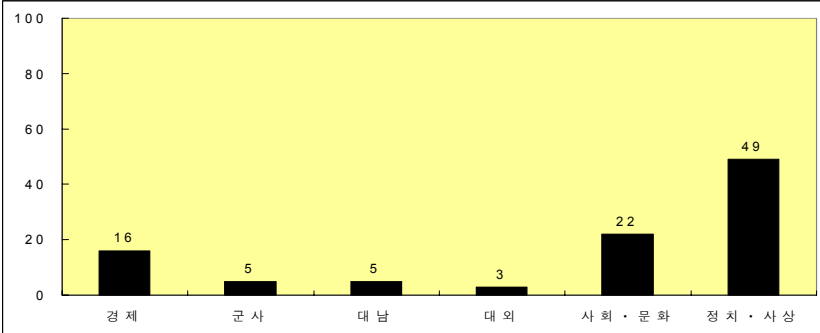
월 31일 3단계 로켓발사가 그 징표이다. 로켓발사의 목적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지만 국방위원장체제 등장을 앞두고 김정일의 ‘장군’으로서의 위대성 제고를 통한 강력한 내부통합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일은 ‘혁명적 수령관’을 통한 절대복종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선군정치’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선군정치’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을 밀고 나가는 영도방식이다. 북한은 김정일이 정력적인 선군혁명영도로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튼튼한 군사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향후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특히, 경제강국 건설은 선군정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군은 1998년부터 국방, 건설, 치안유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은 사상적 강군을 강조함으로써 군대를 당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의 정권보위 전위대로 남게 하고, 강대국 이미지를 제공하는 미사일과 같은 전략무기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에게 강대국 환상을, 대외적으로는 대미협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선군정치’에 걸맞게 김정일은 1998년 70회의 대외 활동 중 군관련 행사에 49회나 참석하였다. 그리고 김정일은 4월 13일 상장이하 22명의 장군을 승진시켰고, 9월 8일에는 이용무와 김용연을 차수로 승진시켰다.

<표-39> 1999년 군사분야 빈도율(%)



대외개방에 신경을 쓴 1999년에 들어서서 <표-39>에서 처럼 『로동신문』은 군관련 기사를 상대적으로 적게 취급하였다. 『로동신문』은 사실을 통해 1998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선군정치’를 본격으로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로동신문』은 3건의 사실과 1건의 정론 및 1건의 논설을 게재하였다. 그것은 4월 25일 사실 “백두의 혈통을 이어받은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이다,” 6월 16일 논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9월 5일 사실 “위대한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12월 22일 정론 “필승의 선군정치,” 12월 24일 사실 “위대한 령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끝없는 영광 빛내여 나가자” 등이다. .

이로 미루어 보아 1999년은 ‘선군정치’가 사회전체에 침투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민군은 국방은 물론 경제건설, 사회통제 등 제반분야를 관여하였다. 물론 북한군은 전통적으로 경제건설에 많은 군인력을 투입해 왔으나 경제난 심화와 주민의 사회일탈 증가로 인해 국경 및 주요시설 경비를 군이 책임지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난이 점점 심화되면서 군에 대한 보급상황도 악화됨에 따라 인민군의 민간인 농가 약탈사건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군민관계가 악화되자 북한은 군민일

치운동을 벌여 왔다. 이 운동을 통해 민간인이 각종 가축이나 채소를 공식적으로 군부대에 전달하는 행사를 벌여 왔는 바, 4월 3일에는 원산사에서 강원도 토지정리사업의 성공적 종료와 관련 군인과 주민 5만여명이 참가하는 군민대회가 개최되었다.

한편 김정일에 대한 군의 충성심 제고 작업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6월 16일자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는 “선군정치방식은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을 밀고 나가는 영도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김정일이 정력적인 선군혁명영도로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튼튼한 군사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향후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특히, 경제강국 건설은 선군정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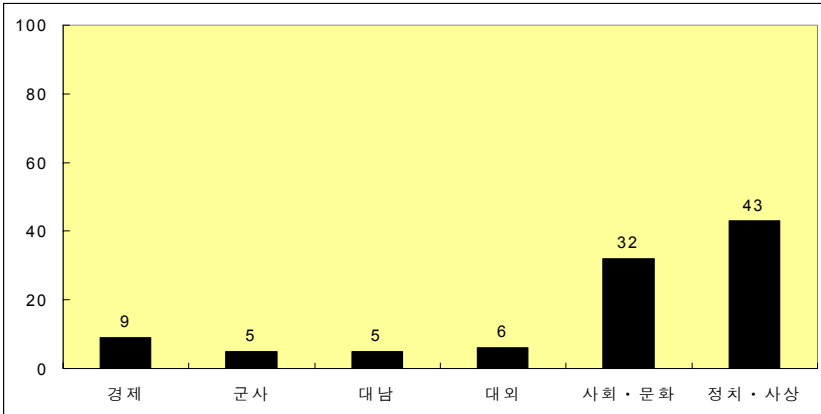
‘선군정치’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김정일은 군을 체제유지의 주도세력으로 키우기 위해 각종 사기진작책을 시행하였다. 첫째, 김정일은 군부대 및 군관련 행사에 거의 매주 참석하였다. 김정일은 총 69회의 공개 활동중 군부대 및 군관련 활동을 41회 실시하였다. 둘째, 군원로에 대한 우대조치가 지속되었다. 김정일은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백학림, 이용무 등 군원로들의 서열을 당중앙위원회 비서들보다 상위에 배정함으로써 군의 중요성 부각과 함께 원로예우를 통한 충성유도 정책을 실시하였다. 셋째, 4월 13일 군간부 79명에 대한 장성급 승진인사가 단행되었다. 이 인사로 이병삼이 상장으로, 권옥필·김선주가 중장으로, 76명의 대좌가 소장으로 승진하였다. 특히 이병삼 상장과 중장 1명이 군정치위원인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군통제기관에 대한 배려를 통한 충성심 유도 방안인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에도 군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으로 보인다. 넷째, 최일선 지휘관과 조직단위에 대한 위안행사가 실시되었다. 특히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

조선인민군 중대장대회」가 개최되었다. 김정일은 이를 통해 경제난에 의해 열악해진 후생수준과 부정부패의 만연, 초급지휘관들에 대한 결혼 불허 및 영내생활 강제 등으로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전투력 강화 및 자신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김정일의 군우대정책에 상응하여 북한군은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정일에 대해 충성을 다짐하는 군부의 대표적인 행사는 2월 15일 김정일 생일 57회 축하 중앙보고대회, 4월 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93.4.9) 6돌맞이 중앙보고대회, 4월 24일 군창건 67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9월 9일 공화국창건 61주년 기념식, 10월 10일 당창건 54주년 기념식 등이다. 이를 통해 북한군은 ‘김정일의 비범한 지략과 탁월한 군중시 정치 강조,’ ‘김정일 군사업적 찬양과 군사중시 정책의 당위성 강조,’ ‘김정일 결사옹위 촉구,’ ‘군의기강 확립과 훈련강화,’ ‘혁명적 영군체제와 군풍 확립,’ ‘전투정치훈련 백방으로 강화,’ ‘군민일치 확립,’ ‘김정일체제 결사옹위 촉구’ 등이 강조되었다.

한편 1999년에 발생한 서해사태에서 북한군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6월 북한은 남북차관급회담을 앞두고 대남긴장조성과 대미협상을 위해 6월 7일부터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였고 남한의 적극대응으로 6월 15일에는 정면충돌이 발생하였다. ‘6·15 서해교전’에서 북한해군은 패퇴하였고, 북한은 6월 15일 판문점장성급회담과 해군사령부 성명을 통해 서해사태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고 ‘천백배’의 보복을 다짐하였다. 9월 2일 북한은 인민군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해 북방한계선 무효화를 선언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NLL을 무실화하고 서해 접경지역을 국제적 분쟁수역화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표-40> 2000년 군사분야 빈도율(%)



<표-40>에서 처럼 2000년 들어 『로동신문』의 군사관련 사설은 약간 줄어 들었다. 대외관계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월 25일 『로동신문』 사설 “우리 인민군대는 언제나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 영광떨칠 것이다,” 12월 2일 정론 “백두산의 장군의 천품,” 12월 22일 정론 “백두의 총대혈통” 등이다. 그러나 북한은 2000년도 「공동사설」에서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은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이라고 하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총대중시’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김정일은 2000년 총 73회의 공개활동 중 군 관련 활동을 21회 실시하였다. 이것은 1999년도와 비교할 때 군 관련 활동이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그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김정일 자신이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 군사지도자임을 과시함과 동시에 군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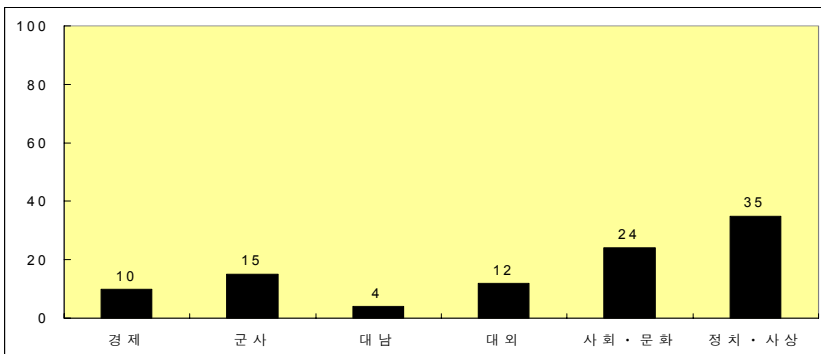
이외에도 김정일은 군사기 진작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였다. 2월 11일 『4.25 문화회관』에서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등 군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투력 강화에서 모범을 보인 7개 부대와 군인들(약

1,350여명)에 대해 김일성 훈장, 국기훈장 등이 수여되었다. 상훈 수여식을 통해 북한군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세가 이루어 졌다.

이어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는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전재선, 박기서, 김룡연을 비롯해 군중·병종사령관, 정치일군 등이 참석하였다. 북한은 군내의 당통제를 위해서 중대급까지 군총정치국 소속의 정치지도원을 파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난이 군부에까지 파급되어 군의 부패도 점점 증가되는 상황에서 군중대정치지도원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주요하다는 것을 김정일은 인식, 이들에 대한 위무와 함께 통제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김정일은 충성확보를 위해 4월 14일 인민군 총참모장 김영춘에게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는가 하면 당창건 55돌을 맞아 10월 4일 장령급 44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하였다.

한편 북한은 3월 2일 서해 NLL 불인정 담화를 발표한데 이어 3월 23일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공포하여 1999년과 같은 서해군사위기사태를 다시 조성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은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았다.

<표-41> 2001년 군사분야 빈도율(%)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2001년에는 <표-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동신문』은 군사관련 사설을 증대시켰다. 2월 1일 사설 “당의 선군혁명로선의 생활력을 더 높이 발양시키자,” 4월 23일 정론 “장군님병사,” 4월 25일 사설 “위대한 선군사상의 기치따라 백전백승 떨 치자,” 6월 19일 사설 “위대한 당의 선군령도따라 부흥강국을 건설하 자,” 6월 23일 정론 “용서없다,” 6월 27일 정론 “장군님의 선군길,” 6월 29일 정론 “영원히 최고사령부와 함께,” 7월 25일 정론 “우리는 승리밖 에 모른다,” 7월 27일 사설 “위대한 전승의 역사를 영원히 빛내이자,” 9 월 16일 정론 “번영하라 선군시대여” 등 사설 4편, 정론 5편이 실렸다. 『로동신문』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정론이 5편이나 실렸다는 것은 북한이 대북 ‘강정책’을 구사하는 부시 대통령 등장 시기인 2001년을 그 어느 때보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로 인식한다는 반증 이다. 즉, 부시 행정부 등장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강경해지는 상황에서 군사적 준비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한 방책인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부시행정부 등장이후 조성된 부정적 정세인식에도 불구하고 북 한은 어떤 위협적인 군사행동은 취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은 4월 16일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에 대해 미국과 남한을 동시에 비난하는 동시에 5월 7일 『로동신문』 논평을 통해 수도방위사령부의 야외기동훈 련에 대해 ‘6.15 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고 배신이라며 비난 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9·11테러사태’ 및 ‘10·7 대테러전쟁’ 이 후 미국이 북한의 생화학 무기문제를 거론하고 언론매체들이 북한을 ‘공 격대상’으로 지목하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군사적 대비태세를 한층 강화시켰다.

한편 김정일은 1월 1일부터 군부대 방문을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11 월말 현재 총 76회의 현지지도를 실시하였는 바, 그 중에서 46%인 35 회를 군관련 행사에 참여하였다. 그만큼 김정일이 2001년 국내외 정세

를 불안하게 본다는 증거이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이 군 관련 행사에 참여한 횟수를 정리해 보면 <표-42>와 같다. 한편 김정일은 4월 13일 강덕수를 상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군장령 19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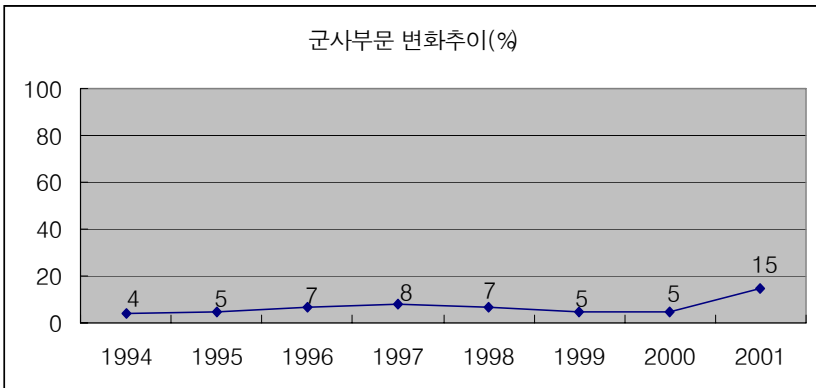
<표-42> 김정일의 군관련 행사숫자

분류 시기	총 횟 수	군관련행사수	군관련행사수/총횟수(%)
1994	21	1	47
1995	35	20	57
1996	52	35	74
1997	59	40	67
1998	70	49	70
1999	69	41	59
2000	73	21	28
2001	76(11월말)	35	46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로동신문」은 <표-43>에서 보는 것처럼 군사 관련 정론·사설·논설을 많이 게재하지 않는 경향성을 보였다. 대체로 게재비율은 4~7% 정도였다. 그러나 2001년 들어 「로동신문」은 그 비율을 15%로 격상시켰다. 그 이유는 북한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매우 불안하게 인식하고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맞서 내부적으로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이 체제 위기 의식을 느끼고 군의 역할을 증대시킨 것은 식량난이 가중된 1997년이었고, 1998년에는 '선군정치'까지 도입하였으나 2001년에 북한이 군에 대한 중시정책을 취한 것은 그 질이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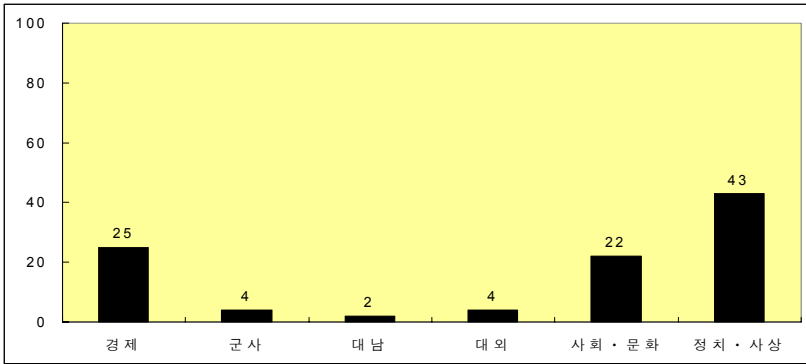
2001년 북한이 군의 중요성을 강화한 이유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책’으로 선화하려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고 더구나 미국의 ‘9·11 테러사태’로 인해 ‘테러지원국가’로 분류된 북한도 언제 미국의 침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이로 인해 북한은 내부통합용으로 ‘미제’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였다.

<표-43> 1994~2001년 군사분야 빈도 수 추이



5. 대외분야

<표-44> 1994년 대외분야 빈도율(%)



<표-44>에서 처럼 1994년에 『로동신문』은 대외분야를 크게 다루지 않았다. 1994년 김일성 사망이후 『로동신문』은 대외문제와 관련하여 2건의 사설을 발표하였는데 10월 1일자 사설 “투쟁과 승리의 45년”과 10월 25일자 사설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은 불멸할 것이다” 등이다. 『로동신문』이 특별히 ‘조중관계’를 강조한 이유는 10월 25일이 1950년 한국전쟁시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한 날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10월 24일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오룡방 대장을 단장으로 한 군친선 참관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지호전 국방부장과 장만연 총참모장을 면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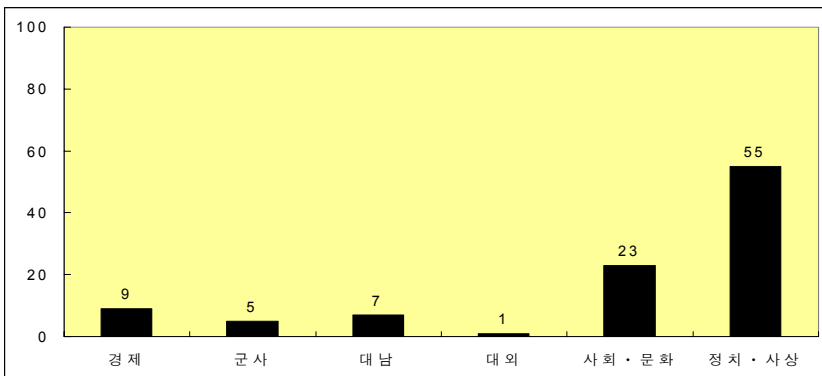
그러나 북한은 실제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매진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전부터 핵문제와 관련한 회담을 지속했었다. 북한은 핵동결 약속이라는 유화책을 제시하여 1994년 6월 23일 미국으로부터 제3단계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합의를 유도했고, 8월 5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3단계 제1차 회담과 9월 23일부터 10

월 17일까지 개최된 2차 회담을 통해 핵협상을 타결하고 10월 18일에는 소위 「북미제네바합의」를 도출하였다.⁹⁵⁾

러시아는 김일성 사후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파노프 외무부 차관을 열친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북한에 파견, 1996년에 만료되는 ‘조·소 후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갱신문제를 비롯, 러시아형 경수로 지원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였다.⁹⁶⁾

일본은 7월 12일 김일성 사망에 대하여 무라야마 총리가 사회당 총재 명의로 조전을 발송하였으나, 핵문제로 인해 북일간 관계개선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표-45> 1995년 대외분야 빈도율(%)



<표-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에도 『로동신문』은 대외분야에 대한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김일성 사후 대내통제가 우선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995년 『로동신문』은 대외문제에

95) 미북관계에 대해서는 박영호,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서울: 통일연구원, 1997) 참조.

96) 이후 북러관계 변화 추이는 여인곤, 「북러관계 변화추이와 푸틴의 대북정책 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00) 참조.

대한 사설을 1건만 내놓았다. 그것은 10월 25일 “조중친선은 영원할 것이다”였다. 『로동신문』이 중국을 제외한 대외문제에 대해 사설을 쓰지 않는 이유는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이 대외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995년 북·중관계는 이념적 유대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정치적 측면에 있어서 1995년 북·중관계는 1994년에 비해 소원해졌다. 1994년 11월 리펑 중국 총리의 남한 방문, 2002년 아시안 게임 개최지 선정시 북한의 대만지지 입장, 11월 장쩌민 주석의 방한 등이 북·중관계에 긴장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양국간 인사교류는 활발하였다.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김복신 북한부총리 방중,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황장엽 당중앙위 비서 방중,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노동당대표단 방중, 4월 8일 임태덕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 등이 이루어 졌다. 중국에서는 6월 7일부터 13일까지 당가선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 9월 20일 군참관단 등 3개의 중국대표단 방북 등이 이루어져 북중관계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회복되는 양상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1995년에도 역시 북한의 대외정책은 미국에 집중되었다. 북·미관계는 『북·미제네바합의』 이행을 위한 각종 후속 회담과 북한 수재 지원, 양국 민간인의 상호방문 등을 통해 보다 진일보하였다. 특히 양국 정부간 관계는 큰 마찰없이 진전을 보였다. 북한은 1월 9일 미국 상품 반입제한 조치와 미국 선박 북한항 입항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고 미국도 1월 20일 통신 및 정보, 금융거래, 무역,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한 기타 단계적 조치 등 4개항에 걸친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2월 10일 미 재무부는 애드미럴 줌월드 자문회사와 스탠턴 그룹에게 대북한 경제활동사업을 허가하는 한편, 2월 14일 해외자산규

제령을 개정하여 북한과의 금융거래 및 인적 교류, 북한상품의 반입, 경수로 건설 및 에너지 제공에서의 미국기업 참여, 북한 언론기관의 활동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의 연장선상에서 미 재무부는 4월 17일 미국 광물거래사인 코메탈사에게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 사업허가서를 발부하였고 3월 29일 미연방 통신위원회(FCC)도 북·미간 직통전화 개설을 허용하였다.

정치적 관계를 보면 양국은 경수로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5월 북·미 준고위급회담을 팔라렘푸르에서 개최한 결과, 합의된 사항을 6월 13일 공동언론 발표문으로 공표하였다. 북·미 준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핵 동결 유지, 사용후 핵 연료봉의 처리, 대북중유제공 등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들이 합의되었다.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문제는 9월 29일 북·미 전문가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미국이 駐북한 舊동독대사관을 연락사무소 건물로 사용키로 하였다. 연락사무소 개설시점과 관련, 미국은 남북대화 재개여부를 전제조건화하지는 않았다. 또한 미국정부는 9월 7일 북한의 수해복구를 위해 2만 5천 달러를 지원키로 했을 뿐만 아니라 10월 25일 유엔의 요청에 따라 20만 달러를 추가 제공키로 결정하였다.

1995년 북·일관계는 수교회담의 재개를 위한 접촉,⁹⁷⁾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청산 문제, 일본의 대북 쌀 지원, 군사력 증강을 둘러싼 양국간의 공방 등으로 집약된다. 정치적 관계에서 볼 때 북한과 일본은 3월 30일 중단상태에 놓여있던 수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고, 일본이 6월 30일 쌀 50만톤을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북일관계는 2년여의 냉각상태에서 벗어나 활발한 접촉을 보였다. 그러나 수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시점에서의 낙관적인 예상과는 달리 양국관계의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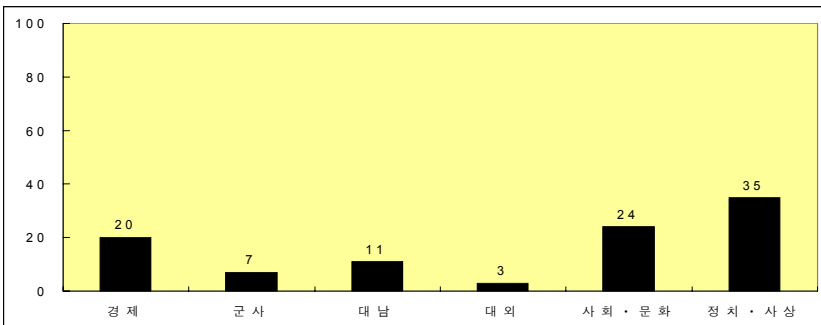
97) 북일국교정상화 과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김영춘, 『일본의 외교정책 결정요인-북·일국교정상화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0) 참조.

선이라는 측면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수교문제의 경우 북·미 제네바합의를 계기로 일본 연립3당과 북한 노동당은 국교정상화 회담 재개와 관련한 합의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북·일은 1995년 한 해 동안 몇 차례의 실무접촉을 가졌으나 합의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과 일본의 보상문제 등에 대한 양국간의 현저한 입장 차이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1995년 북·러관계는 남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등거리외교와 상호간의 실리추구라는 새로운 기초위에서 재정립되는 추세를 보였다. 북·러 관계 강화요인은 북한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해, 러시아의 대서방 견제 외교정책, 북·미 및 북·일 수교 가능성에 따른 러시아의 대북한 영향력유지 노력, 북·러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동인식 등으로 볼 수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1996년 9월 10일에 만료되는 「조·러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의 폐기를 북한에 공식 통보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9월 13일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조약의 체결을 시사함으로써 북·러관계를 상호 실리추구의 협력관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

<표-46> 1996년 대외분야 빈도율(%)



1996년에도 <표-46>에서 처럼 『로동신문』은 중국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사설을 신는데 그쳤다. 7월 1일 사설 “중국공산당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 7월 11일 사설 “조중친선은 영구불멸할 것이다” 등 2건이다. 이것은 북한이 실질적 측면에서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중공군 참전기념일인 10월 25일에 중국관련 ‘사설’이 없다는 점이다.

1996년 북한과 중국은 7월 11일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35주년을 맞아 군사부문에서 친선발전과 협력증진을 강조하였다. 특히 중국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왕계영 북해 함대 사령관 지휘하에 구축함 2척을 북한 남포항에 파견하여 북한과의 돈독한 군사협력관계를 과시하였다. 또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간 중국 국무원 비서장겸 국무위원을 단장으로 한 중국대표단이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조약」 조인 35주년을 맞아 북한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김일성 사후 중국 각료의 최초 북한 방문이었다. 북한은 3월 23일 이상우 인민무력부 대외사업국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군사대표단 일행이 중국을 방문, 지호전 중국 국방부장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간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상하이 등 지방군구를 시찰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 중국은 4월 5일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현 정전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북한의 판문점 비무장지대내 병력투입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4월 11일 대북관계를 고려하여 “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나 안보리가 직접 나서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는 반대하였다.

또한 중국은 4월 16일 정전협정 서명국의 일원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적극적인 역할을 행사하기 위해 「4자회담」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중국이 「4자회담」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은 6월 6일 최우진 북한외교부 부부장과 한반도 「4자회담」을 비롯한 양국관계 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역시 「로동신문」 사설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북한의 대외정책은 미국에 집중되었다. 1996년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합의의 이행을 중심으로 연락사무소 개설, 미군유해 송환, 미사일 개발 및 수출통제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는 등 양국관계를 진일보시켰다. 북·미관계의 진전은 양국간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는 북한의 붕괴를 방지하고, 한반도 안전보장을 구축하려는 데 주목적을 두었다.

제네바 합의에 따라 진행되기 시작한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하여, 9월 23일 미국무부 한국담당관인 골드스타인을 단장으로 한 협상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공식적으로 북한측과 협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연락사무소 개설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였는데, 이는 미외교행낭과 외교관들의 관문점 통과, 미국의 대북정보수집, 美해병대의 평양 연락사무소 주둔, 워싱턴 연락사무소 개설비용 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바 합의의 주 안건인 핵동결 작업 및 대북 중유제공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북한은 5메가와트 원자로의 재장전을 포기하고, 50메가와트, 200메가와트 원자로건설을 중단하였으며, 8천여개의 사용후 핵연료봉을 밀폐보관하는 작업에 착수해 이 중 절반 이상을 완료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핵동결 작업 진척에 따라, 50만t의 금년분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였다.

이러한 정치·군사적 안건 외 북한과 미국은 비정치적 접근을 통해 양국간의 관계진전을 모색하여 왔다. 미국은 4월 7일 '대북 인도적 지

원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구호용 식량, 보건·의약품류, 의류 및 생필품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 물품제공이 정부의 사전 허가없이 유엔이나 국제적십자사 또는 공인된 구호단체·기관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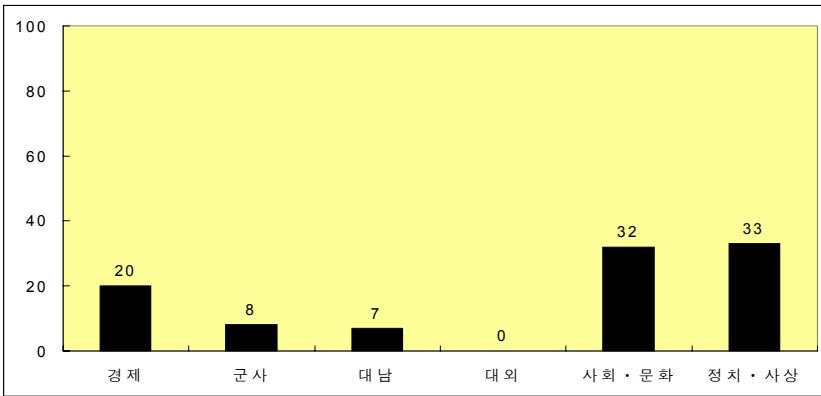
1996년 북·일관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부진하였다. 경제관계에서만 예년 수준을 유지했을 뿐 정치적 관계는 북한의 일방적인 대일 비난이 거듭된 가운데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북일간 최대 현안인 수교 문제는 양국 및 한국과 미국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1996년 북한의 대일반응은 시기적으로 뚜렷이 대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상반기에는 수교회담의 재개를 위해 매우 조심스런 자세를 취했으나, 하반기에는 일본의 태도를 격렬히 비난하였다.

1996년 북·러 관계는 전년에 비해 진전되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 복원이 가장 큰 진전이었다. 북한은 10월 28일 러시아와 5년 기한의 「투자장려 및 호상보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러시아와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게 되었다. 북·러는 10월 12일 수산업분야 협조에 관한 공동위원회 제10차 회의에 대한 합의서의 조인을 통해 양국간 어획할당량을 비롯하여 어로, 양어, 양식 등 전반적인 수산업분야에서의 상호협조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7월 23일 북한과 러시아간 철도운송협상이 타결되어, 북한의 핫산역 사용이 재개되었고, 4월 12일 북·러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의정서가 조인됨으로써 무역·경공업·임업·채취공업·과학기술 등 제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군사적으로는 양국관계가 순조롭지 못하였다. 러시아 외무차관 파노프는 7월 6일 「북·러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 체결 35주년을 맞아 1995년 8월 북한에 전달한 '개정초안'을 통해 러시아는 제3국으로부터 침략이 있을 경우 쌍방에 대한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이른바

자동군사개입조항을 배제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러시아 외무부는 「북·러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조약은 폐기되고 대체조약 체결논의가 진행중이라고 9월 10일 밝혔다.

<표-47> 1997년 대외분야 빈도율(%)



<표-47>에서 처럼 1997년도에 『로동신문』은 대외관련 사설이나 정론 등을 일체 게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1997년이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외문제에 사설을 할애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역설적이지만 북한이 자본주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는 1997년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북한이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 지원 아래 경제관료들의 시장경제 연수를 시작한 시기가 지난 1997년께 부터였기 때문이다. 북한이 자본주의교육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이유는 김정일의 정책적 의지와 함께 김일성의 ‘교시’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사망전 사회주의권 붕괴이후 자본주의와의 무역을 위해서는 관계 ‘일군’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즉 김일성은 “현시기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자본주의

시장을 대상으로 무역을 할수 있는 능력있는 무역일군들을 많이 늘이는 것입니다…우리는 자본주의시장에 대담하게 진출하여 무역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자면 자본주의나라들과 능란하게 무역을 할수 있는 준비된 무역일군이 많아야 합니다…가만히 앉아서 합병, 합작 대상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거나 사회주의시장이 없어졌다고 걱정이나 하여서는 언제가대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킬수 없습니다”⁹⁸⁾라고 강조하였다.

자본주의교육 대상지역은 주로 미국, 호주, 스위스, 태국, 싱가포르, 중국, 헝가리 등지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교육을 받은 경제관료는 200여명 정도였다. 1997년 UNDP의 지원하에 최초로 경제관료 15명을 중국 상하이에 파견했고, 동년 11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12명의 관료를 파견하였다. 또한 1997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매년 10여명의 북한외교관들이 스위스 ‘다자협상실습연구소(CASIN)’에서 자본주의 연수를 받고 있다.

1997년 북한과 미국은 「기본합의문」 이행의 틀속에서 준고위급회담, 미사일협상, 미군유해 송환 협상, 경수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4자회담 개최를 위한 협의를 진행시킴으로써 양국관계를 일보 진전시켰다. 클린턴 정부 집권 2기에 들어선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 및 한반도 전쟁예방을 위해 북한의 4자회담 참여 유도,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정치·군사적 대화접촉 등을 시도하였고, 북한은 경제지원 확보와 다변적 대미 접근을 추진하였다.

양국간 정치적 접촉은 3월 5일 북한의 뉴욕 4자회담 공동설명회 참가와 3월 7일 준고위급회담, 3월 8일부터 13일까지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의 워싱턴 방문 등이 있었다. 특히 미사일회담과 관련하여,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1단계 2차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98) 김일성, “현시기 정무원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협의회에서 한 연설 1992년 12월 14일),” 『김일성 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15~16.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과 미사일개발 중단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개발이 자위권 차원의 문제이며 MTCR 가입도 자신의 판단소관으로 주장하는 한편 미사일수출 포기 대가를 과도하게 요구함으로써 협상이 결렬되었다.

3차회담은 8월 27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8월 26일 장승길駐이집트 북한대사 일가의 미국망명으로 인해 북한이 회담자체를 일방적으로 취소함으로써 무산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동결과 대북 중유 제공 및 경수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미국은 폐연료봉 봉인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영변에 국무부 실무담당자들을 상시 파견하고 있고, 북한에 중유를 계속 제공하였다. 반면 미국무성은 4월 4일 북한을 ‘국제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였다.

미·북 경제관계와 관련, 미국은 적극적 대북 연착륙정책 기조에 따라 식량지원을 지속하였다. 미국 정부는 미공법 480조 II 긴급식량원조 항목에 총 5,200만 달러 규모의 곡물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무상 지원하였다. 또한 미국 민간구호단체들도 80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9월 10일 미국 민간비행기로 공수하였다. 미국 민간항공기가 북한에 들어간 것은 1949년이래 처음이며, 이는 미재무부가 4월 7일 민항기의 북한영공 통과를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1997년 북·중간에는 우호협력관계가 지속되었다. 북한내 사정으로 인하여 북·중간 최고 지도자의 교환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다방면적인 지원으로 북·중간 유대관계가 유지되었다. 다만, 황장엽 망명사건 처리와 4자회담문제로 상반기에는 다소간의 갈등이 노정되기도 했다. 북·중간에 우호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막대한 지원 때문이었다. 1997년 중국은 북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15만톤의 식량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었다. 중국은 4월 12

일 북한 주재 만영상 대사를 통해 쌀 1만톤과 옥수수 6만톤 등 총 7만톤의 식량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고, 7월 14일 유산재 중국 대외무역경제협작부 부부장의 평양 방문시 8만톤의 식량을 무상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는 공개된 지원분에 불과할 따름이며, 물물거래나 비공식 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부분을 포함할 경우 연간 100만톤 이상의 식량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월 12일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의 망명신청으로, 북·중간에 다소간의 긴장이 있었다. 중국은 ‘황장엽사건’을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황장엽이 제3국(필리핀)을 거쳐 한국에 망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이러한 중국의 조치는 북한에게 불만스러운 것이었다.

1997년 북·일 관계는 상반기 일본소녀 납치의혹 사건(13세의 여중생인 요코다 메구미가 배드민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실종된 사건)의 이슈화로 인해 악화되었으나, 하반기 수교회담 예비회담과 북송 일본인 처 고향방문으로 인해 다시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월 10일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1997년 연초부터 일본에게 전후문제 청산회담을 촉구하고, 2월 13일에는 일본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시도를 비난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도 북한의 일본소녀 납치의혹과 각성제 밀반입 문제가 대두되면서 양국관계는 악화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과 당면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은 대북 관계정상화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보와 정치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수교회담 재개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양국은 3월 이후 4차례에 걸쳐 북경에서 외무성 과장급 비공식접촉을 계속하여 1992년 11월 수교회담 결렬 이후 4년 9개월만에 수교협상 재개를 위한 예비회담을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북경에서 가

졌다. 동 회담에서 북한은 북송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 및 일본인 납치문제 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일본은 UN을 통해 북한에 식량을 원조하기로 약속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북경에서 적십자회담을 개최, 실무적 문제를 협의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후 양국은 9월 6일부터 9일까지 적십자사 연락협의회 제1차 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하고, 총 1,831명에 달하는 북송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제1진 15명의 고향방문이 성사되었다. 또한 일본 여 3당(자민·사민·신당사키가케) 대표단이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방북, 노동당과 수교교섭재개 및 일본인 처 고향방문 지속 추진에 합의하는 한편 일본인 납치 의혹에 관해서도 북한으로부터 일반 행방불명자로 조사하겠다는 양보를 얻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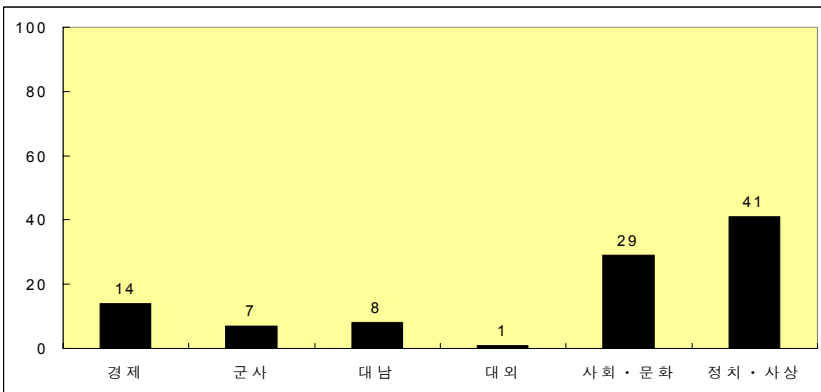
1997년 북한과 러시아는 1996년의 관계개선 추이를 이어갔다. 효력을 상실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대체하기 위해 양국은 1월 21일 평양에서 1차 차관급회담을 가졌고, 6월 16일에는 모스크바에서 제2차 차관급회담을 가졌다. 북한은 새 조약에 러시아의 고려연방제 통일안 지지 문안의 삽입을 주장했으나 러시아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양측 대표단은 1차회담에서 합의한 상호주권 인정, 내정불간섭, 영토보존의 원칙, 상대방에 대한 무력불사용 등의 기본조항을 재확인했다.

1996년 10월 18일 북한과 러시아는 「투자장려보호조약」 등 4건의 조약을 포함한 다양한 협정을 통해 경제분야의 관계개선을 꾀했는데, 이와 같은 노력은 1997년에도 지속되어 1월 24일 「여행협정」, 4월 14일 「과학기술협력의정서」, 9월 26일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이 체결되었다. 또한 양국은 9월 16일 교역량을 구소련시기 수준으로 완전 회복시키기로 합의하였고, 북한의 고려민항이 8월 4일 평양-블라디보

스토크간 운항을 개시했다.

북·러 관계개선은 체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개선에 서 보다 중요한 요인은 러시아의 대북한 자세 변화이다. 그 동안 러시아는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외교의 중심축을 남한으로 이전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으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약화된 대북 영향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자국의 실익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의 의도는 미·일의 대북한 접근으로 발생할 자국의 외교·안보적 이익 축소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48> 1998년 대외분야 빈도율(%)



1998년 『로동신문』은 <표-48>에서 처럼 대외관련 사설을 1건 게재하였다. 그것은 5월 22일 “총련 제18차 전체대회를 열렬히 축하한다”이다. 『로동신문』이 이례적으로 ‘총련’과 관련된 사설을 게재한 이유는 급격히 와해되어 가는 ‘총련’ 조직을 활성화 시켜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재일동포 1세대들의 자연사가 증가하는 대신 2, 3세대들의 일본귀화가 증가하고 북한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총련’을 재건시켜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을 통해 외교적 고립, 경제난 등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전략을 지속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대북 경제제재조치 완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북·미평화협정체결 등을 미국에게 요구하였다. 북한은 이와 같은 대미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일면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로켓 발사, 제네바 합의문 파기 위협 등 ‘벼랑끝 전술’을 병행하였다.

북미관계의 분수령은 1998년 8월 31일 이후였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급증하였다. 특히 보수적인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 의회는 「북·미 제네바합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대북 중유지원의 전면 삭감을 결의하는 등 대북 강경 입장을 나타내었다. 결국 10월 미 의회는 대북포용정책의 지속을 원하는 클린턴 행정부와와의 타협을 통해 대북 중유 공급을 허용하되, 3,500만 달러의 대북지원 예산을 지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핵합의 이행, 미사일 규제 등에서의 진전, 그리고 북한정책 조정관의 임명 등을 요구하였다.

북한은 미의회에서의 대북지원금액 삭감 움직임 등과 관련, 미국이 「북·미제네바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파기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하였으나, 북·미고위급회담 등에 응하며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단절하지 않고 협상을 계속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무엇보다도 경제난 해소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미국의 경제제재를 완화시키고 보다 많은 자본 및 기술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타협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미국내의 대북 강경분위기를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었기 때

문이었을 것이다.

클린턴 정부도 북한의 지하 핵의혹 시설 및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제네바합의의 기본틀을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핵동결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네바합의가 파기될 경우, 북미관계 자체가 악화되고 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유지라는 전략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강경책보다는 우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자제하는 데는 한미공조 하에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한국정부의 입장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사일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은 1997년 이후 자본주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북한시장경제 연수단은 대체로 선진국의 대학이나 정부연구소에서 마련한 시장경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분야 연수단은 연수대상국 정부가 마련한 국가차원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은 2월 ‘나진 선봉특구’내 나진기업학교 교원 14명을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보내 기업 회계, 재정, 경영, 재무관리 등을 익히도록 했고, 7월에는 경제전문가 27명을 세계적인 금융투자가인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소재 ‘중부유럽대학’에 3주간 파견, 국제금융동향을 배우도록 했다.

1998년 중국과 북한간의 경제교류는 북한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주로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와 지원성 수출 및 변경무역에 의해 이루어 졌다. 1998년 중국의 대북 공개 식량지원 규모는 10만t으로 전년도(15만t)에 비해 33% 감소되었으나, 대신 중국은 2만t의 화학비료와 8만t의 원유를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1998년 북·중간 변경무역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30% 정도 증가되었다. 1월부터 8월까지 단동-신의주 루트를 경유한 변경무역 규모가 약 2억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중국내 쌀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0~30만t의 식량이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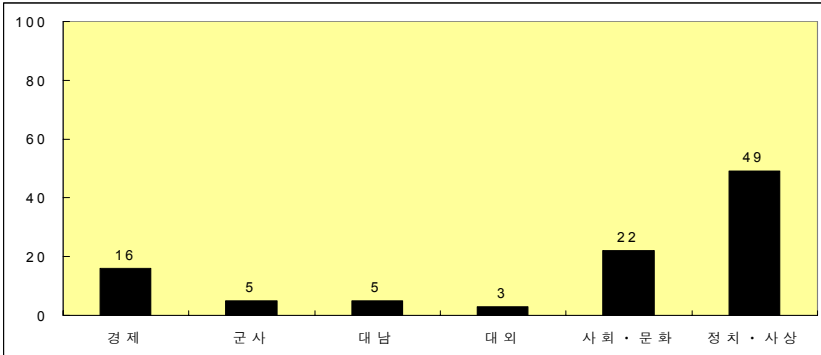
에서 북한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⁹⁹⁾

1998년 이후 북·일관계는 최악의 상태가 지속되었다. 물론 1997년 8월 양국은 외무부 심의관급 접촉에서 수교협상 본회담의 조기 개최에 합의하고 북송 일본인처 고향방문단 제1진이 1997년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방일한 데 이어 고향방문 사업을 총 6회 추진하기로 1997년 12월 12일 합의했기 때문에 1998년의 양국관계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화해적 행사도 길게 가지는 못했다. 북한이 8월 31일 일본열도를 넘는 로켓 시험발사를 하였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9월 1일 유엔안보리와 총회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를 제기하고, 북·일 수교교섭 및 대북 식량지원 유보, KEDO분담금 합의서 서명 보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검토 등을 결정하고, 9월 2일 평양왕래 직항전세기 운항중지, 9월 3일 참의원 대북항의 결의문 채택 등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이 3단계로켓을 인공위성이라고 발표한 뒤에도 일본의 고무라 외상은 9월 8일 ‘국교정상화 교섭 중단 등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98년 북러관계는 큰 사건이 없이 러시아가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99) 북한의 대외무역 특성에 대해서는 임강택, 『북한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변화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1998) 참조.

<표-49> 1999년 대외분야 빈도율(%)



<표-49>에서처럼 1999년 들어 『로동신문』은 대외문제와 관련하여 3건의 사설을 게재하였다. 6월 20일 사설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불패이다,” 6월 25일 사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새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자,” 7월 6일 사설 “캄보디아인의 친선의 사절” 등이다. 특이한 점은 『로동신문』이 캄보디아 국왕 시아누크의 평양 도착일인 7월 6일에 맞춰 사설을 게재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사설을 통해 김일성과 시아누크와의 친분을 강조하고 시아누크가 김일성 노선을 전적으로 지지했다고 선전하였다.

북한이 중국관련 사설을 게재한 이유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대규모 북한사절단이 6월 3일부터 7일까지 1991년 10월 김일성의 방중 이후 7년만에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중국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방중단은 김정일체제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한중수교이후 소원해진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복원하는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식량 15만톤, 코크스 40만톤의 지원을 약속받았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식 사회주의’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중국도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북한이 대중관계 복원을 추진한 이

유는 북한의 대미 중시정책에 대한 중국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한편,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경쟁적으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외교’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된다.

1999년 북미관계는 1998년 8월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 의혹과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생성된 긴장상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2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금창리사찰에 대한 북·미 회담 4차 협상에서 북한은 미국 대표단이 5월 금창리 시설을 방문토록 허용하고, 미국은 북한의 사찰 수용에 대한 대가로 세계식량계획을 통해서 50만톤, 미국 민간기구를 통한 씨감자 1,000톤 및 식량 10만톤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는 선에서 타결되었다. 미국측 조사단은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당시 시점에서 핵개발 흔적이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금창리 지하시설을 둘러싼 의혹은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금창리협상이 타결된 이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제4차 북·미 미사일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추가 발사·개발 및 수출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기존 입장대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함으로써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한편 페리 조정관은 대북 포괄적 접근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타진하기 위해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페리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등 북한 고위관리들에게 한·미·일 3국이 합의한 포괄적 대북 권고안을 설명하였다.¹⁰⁰⁾ 북한은 페리의 방북 활동을 신속히 보도하며 이례적으로 환대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포괄적 협상안에 대한 진의는 분명하게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9월 7일부터 12일까지 베를린에서 개최된 ‘베를린회담’에서 미사일 문제에

100) 자세한 내용은 박종철, 『페리프로세스와 한·미·일 협력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0) 참조.

대한 해법을 내놓았다. 즉,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하는 대신 미국은 대북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9월 17일 적성국교역법, 방산물자법, 수출관리법 등 3개법에 근거하여 행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상품의 미국내 수입과 미국 상품의 북한 수출이 대부분 허용되고, 민간 및 상업용 자금의 송금과 선박과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및 화물운송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백남순 북한외무상은 9월 25일 제5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북·미 고위급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사일 문제는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라는 종전의 입장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백남순이 미사일 유보를 약속하고 UN에서 EU를 상대로 ‘공세적’ 외교를 펼친 이유는 국방장관체제를 통한 내부통제에 대한 자신감에서 대외관계를 적극화했다는 점이다.

1999년 북·일관계는 9월 베를린 미·북 고위급회담 결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유예함에 따라 대화재개와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시작되었다. 북한과 일본은 싱가포르에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외교당국자간 비밀접촉을 가졌고, 일본 정부는 11월 2일 북한-일본간의 전세기 운항 동결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무라야마 전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초당파 방북단이 12월 1일부터 3일까지 평양을 방문하면서, 북일관계는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할 수 있게 되는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일본은 북한과 첫째,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 및 예비회담 연말 개최, 둘째, 식량지원 및 일본인 처 고향방문에 대해 북·일 적십자사 및 정부수준의 협의, 셋째, 북한 노동당 대표단의 2000년 일본 방문 등을 합의하였다.

북한과 일본 적십자사는 12월 21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2000년

상반기중 북한거주 일본인처 고향방문 재개, 일본의 대북 식량지원, 일본인 실종자에 대한 조사 협조, 그리고 1945년 이전 조선인 행불자에 대한 조사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수교교섭 재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1999년 북·러 양국은 1961년 동맹조약을 대체하는 ‘신조약’을 ‘가조인’하고 연례적인 기념행사들을 개최하였으나 고위인사들의 상호방문은 감소하였다. 북한은 러시아 및 CIS 국가들로부터 군사무기와 부품을 여러 경로를 통해 도입하였으며,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문제가 합의되었으나 실질적인 이행은 양국의 경제난으로 지연되었다.

북한의 이인규 외무부상과 러시아의 카라신 외무차관은 양국간의 최대 현안인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을 3월 17일 평양에서 ‘가조인’하였다. ‘신조약’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폐지되고 대신 ‘안보위협 발생시 협의’ 조항이 신설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북한이 주장하였던 ‘고려연방제 지지’ 문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5월말 방북하여 북·러 신조약을 정식 조인할 예정이었으나 양국 사정으로 계속 지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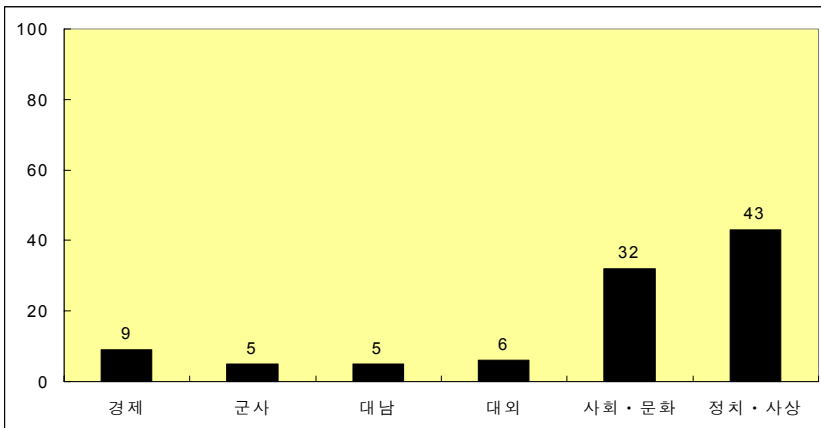
러시아와 북한은 고위급인사의 방문을 통해서 양국간 현안을 논의하고 관계진전을 모색하였다. 카라신 외무차관은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백남순 외상과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및 국제적 상황에 관해 협의하고 4자회담 협상과정에서 러시아를 참여시키는 문제와 TMD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ARF 등 다양한 다자간 포럼에 대한 북한의 참여를 지지하였다. 그리고 홍성우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4월 2일부터 7일까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러시아 연방하원 의장과 부의장, 공산당 당수 주가노프 및 연방하원 국제문제위원회 대표 등과 면담하였다.

또한 북한의 어려운 식량난 때문에 박의춘 주러시아 북한대사가 1999년 초에 노보시비르스크주를 방문하여 주정부에 식량과 씨감자 지

원을 요청하였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7월 13일 1998년 3월부터 국내 정치문제로 중단된 인도주의적 원조 재개를 결정하여 설탕, 밀가루, 곡류 및 기타 생필품을 지원하였다.

한편, 1999년에는 UNDP의 지원하에 109명이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방법, 사유재산 개념 등 자본주의 경제교육을 받았고, 북한관료 10여명은 9월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아시아재단’과 미국 뉴욕대학이 공동 후원한 자본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거래 분쟁시 중재방법, 외국기업에 대한 건물 및 토지임대 요령, 국제거래법 등을 학습하였다. 4월에는 5명의 에너지분야 북한 전문가들이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 등을 순방하면서 수력과 풍력발전에 대한 기술을 체득하였다.

<표-50> 2000년 대외분야 빈도율(%)



<표-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들어 『로동신문』은 비교적 많은 대외관계 사설을 게재하였다. 4월 10일 사설 “남남협조를 확대발전 시켜 나가자,” 5월 25일 사설 “총련의 애국위업은 필승불패이다,”¹⁰¹⁾ 6

101) 김정일은 총련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1995년에 지적하였다. 김정일,

월 3일 사설 “조중친선의 력사는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7월 19일 사설 “조로친선관계의 새로운 발전,” 10월 25일 사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50돐” 등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러시아관련 사설이 등장한 점이다. 이것은 7월 19일 푸틴 러시아대통령의 방북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선진공업 8개국회의」(G 8)에 참석하러 가는 도중에 러시아 최고지도자로서는 최초로 북한을 방문하였다. 그의 방북 목적은 미·일의 TMD 계획과 남북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체제 견제, 러·북간 군사협력 문제 협의, 향후 자신의 방한을 약속한 상황에서 남북한에 대한 균형관계 유지,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서 경제실익 확보 등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7월 19일 김정일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경협 문제를 논의하고 전통적인 선린관계 유지, 안보위협 상황 발생 시 지체 없는 상호 접촉,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지지, 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 등 11개항의 「조·러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중·러간 전략적 동반자관계와 중·북간 군사동맹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러 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북·러·중 간에 3각 안보협력이 긴밀히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러관계는 1961년 7월 6일 채택된 동맹조약을 대체하고 양국간 기본관계를 규정하는 ‘신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소 수교이후 약 10년만에 냉각기를 청산하고 보편적인 국가간 관계로 재정립되었다. 남북정상회담 직전 김정일의 방중, 남북정상회담 직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과 방북 등을 통해 북·러·중 3각 안보협력이 확대되었다. 북·러 양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제교류·협력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러시아간 3각경협을 긍정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1995년 3월 2일),” 「김정일 선집 14」, pp. 16~28.

적으로 평가하였다.

1999년 3월 17일 가조인했던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의 공식 조인을 위해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990년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방북 이후 10년만에 2월 9일부터 10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그는 한반도의 긴장 지속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쌍무관계 강화와 정치적 대화 수준 제고에 대한 ‘신조약’의 기여 가능성, 협상을 통한 한반도문제의 해결과 한민족의 평화통일 노력 지지, 한반도의 군사·정치적 상황 개선과 동북아 평화·안전의 강화를 위한 러시아의 주변국들과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김정일에 대한 푸틴 대통령 권한대행의 메시지를 북한측에 전달하였다.

이바노프와 백남순 북한 외상간에 2월 9일 공식 조인된 ‘신조약’은 전문과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10년간의 전반적인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법적 문서이다. ‘신조약’은 상호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 동등권 및 국제법 원칙을 기초로 우호관계 발전(제1조), 쌍방중 일방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또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할 경우 쌍방의 즉각 접촉(제2조), 상호 이해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정기적 협의(제3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원칙에 따른 한반도 통일 지지(제4조), 통상, 경제, 과학·기술 분야 협력 발전을 위한 적극 노력(제5조), 양국 의회와 다른 정부기관 및 사회단체간 관계 심화(제6조), 양국 도시, 기업, 단체 및 양측 인사간 접촉 등 다양한 수준에서 다방면의 접촉 활성화(제7조), 10년간 유효하며 일방이 12개월 내에 조약의 연장불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5년 단위로 자동연장(제12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조약’에서는 1961년 동맹조약의 주요 내용이었던 이념적 연대 조항과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배제되었다. 그러나 러·북 양국은 ‘안보위협

발생 시 즉각 접촉' 조항을 삼입함으로써 제한적 군사협력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이는 양국이 「한·러 기본관계조약」 제2조 규정보다는 더욱 긴밀한 군사협력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해 온 고려연방제 지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조약’ 체결을 위한 이바노프의 방북 시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북한 공장들의 재건과 현대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포함한 경제증진 방안이 논의되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발표되자 러시아 정부는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에 대한 공동참여 의사를 한국 정부에 밝혔다. 푸틴 대통령도 방북시 구 소련의 기술로 건설된 산업시설들의 복구, 남북한과 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시베리아 대륙횡단 철도 사업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구체적인 경제문제들을 김정일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남북한 철도 연결과 철도망 정비에 대한 일본의 협력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모리 일본 총리에게 전달해 주도록 일본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에게 부탁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임업상 및 채취공업상과도 회담을 갖고 극동지역의 수산업, 광물채취 부문 문제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회담을 가졌다.

2000년 북미관계에서 획기적인 사건은 10월에 있는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미국방문과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의 북한방문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미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하기 위하여 조명록 부위원장을 특사로 미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조명록 특사는 10월 10일 클린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관계정상화를 요구하며, 북한 로켓의 제3국 발사를 위해 국제사회가 재정지원을 할 경우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정식 제안하였다. 조명록 특사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코언 국방장관 등과 회담을 개최한 후 10월 12일 ‘북·미 공동코뮤니케’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북한이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개발 포기를 선언

함으로써 북한 미사일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둘째, 상호 적대관계를 포기하고 경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함으로써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을 약속 받았다. 셋째, 정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4자회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을 활용한다고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조만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북한을 방문하여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김정일 위원장은 2차례의 회담을 통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미사일 개발, 외교 대표부 개설, 한반도 긴장완화 등 양국간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이 회담에서 양국 관계개선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북한 미사일 문제에 관해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제3국에서 북한 인공위성을 대리 발사해주고, 중·단거리 미사일 수출은 경제제재 완화 및 경협지원 지원 등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면 포기하는 방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에서 제6차 미사일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장거리 미사일 대리 발사 및 중·단거리 미사일 수출 중단에 대한 보상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여 일부 진전을 이루었다. 미국 측은 회담 결과를 토대로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협상안의 세부사항에 대해 미·북간 견해차가 남아 있는 한편, 11월 7일 실시된 미 대통령 선거가 당선자를 확정하기 못하고 혼란을 겪게 되자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여부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었다. 공화당 후보 부시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도 클린턴 대통령은 방북 계획을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방북 성과가 미지수인 반면, 퇴임 직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

해 미국 내 여론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자 클린턴은 결국 방북 계획을 취소하였다.

2000년 북중관계는 한층 제고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3월 5일 조명록과 김일철 등 군 지도부를 대동하고 '전격적으로' 평양주재 중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중국과 우호관계 강화 의사를 천명하고,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것은 외교관례상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김 위원장의 중국에 대한 관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 사건이었다. 이어 백남순 북한 외무상이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중국을 방문, 중국 측과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 문제와 경제원조문제 및 남북대화문제를 협의하였다.

아울러 놀라운 사건은 남북정상회담을 불과 2주일 앞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중국을 극비리에 방문한 점이다. 1983년 비공식 중국방문 이후 최초의 일이었다. 베이징 체류기간 중 김정일 위원장은 장쩌민 주석과 두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주룽지 총리, 리펑 전인대 상무위원장, 후진타오 부주석 등과 회담을 가졌다. 김정일의 방중으로 한·중수교 이후 최초로 북·중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 바, 이를 계기로 북·중관계가 정상적 관계로 완전히 복원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은 대외적으로 한·미·일 공조체제에 대한 북·중 공조를 과시하는 한편, 미국의 TMD 구상과 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추가 무상지원을 약속 받았으며,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지지하는 대신 중국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약속 받았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은 자칭린 베이징시 당서기 안내로 중국의 실리곤 벨리인 중관촌(中關村)내 컴퓨터공장을 시찰하였으며,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로써 경제개혁·개방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중국간에 더 이상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으며,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원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일철 인민무력상이 6월 17일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국방부장 츠하오토텐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 사태를 협의하고 북·중간 군사관계의 발전이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군사협력 확대에 합의하였다. 한편, 장쩌민 주석은 10월 9일 북한 노동당 창당 55주년을 기념하여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을 방문하였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 북·중관계 개선, 북한의 대서방관계 개선을 높이 평가하고, 김정일 위원장에게 북한과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2000년 북한과 일본은 수교회담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함으로써 관계진전을 이룩하였다. 수교회담 진행과정에서 일본의 대북 식량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과거청산 문제와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 등으로 수교회담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북한과 일본간 9차 수교교섭 본 회담이 4월 4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1992년 11월 제8차 수교회담이 이은혜 문제로 결렬된 후 7년 5개월만이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일본측에 과거 식민통치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 반면, 일본은 배상은 곤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중단, 일본인 납치의혹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북한측 대표 정태화 외무성 순회대사는 회담 후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사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회담을 더 이상 계속할 근거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회담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시사했다. 이에 일본 대표인 다카노 고지로 대북담당 대사는 일본과 북한은 식민통치기간 중 전쟁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일본이 한반도 분단에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북한에 배상해야 할 합

리적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국 이 회담은 특기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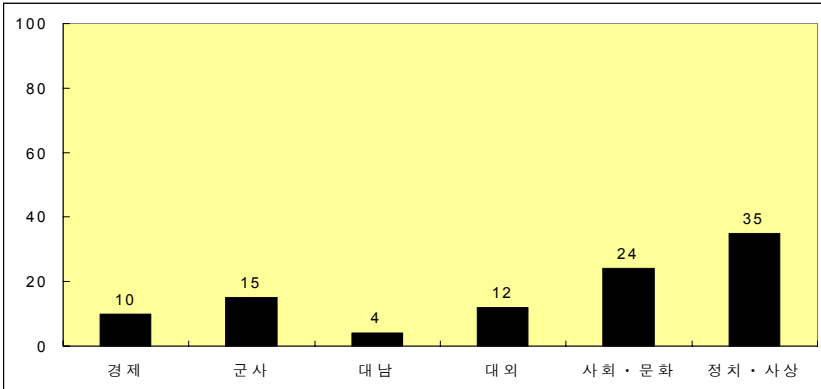
제10차 수교회담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보다 3개월 뒤인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일본의 지바현 기사라즈에서 개최되었다. 북측에서는 정태화 대사가, 일본은 다카노 고지로 대사가 수석대표로 회담에 참가하였다. 양국은 회담에서 외무성 직원의 상호 교류에 합의하는 한편, 민간경제인 교류가 바람직하는 데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양국은 협상의 최대 쟁점인 교섭방식이나 과거청산 방법 및 북한의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북한은 먼저 과거사를 청산하고 기타 현안은 추후에 해결하자고 하였으나, 일본은 과거사 청산,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 및 미사일 개발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은 사죄와 보상을 통해 과거사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은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의 담화로 사죄문제는 해결되었다면서 재산청구권 문제해결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납치 의혹에 대해 “일반 행방불명자 차원에서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과 일본은 10월말 중국 베이징에서 제11차 수교 본 회담을 열고 조기수교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발표문이 발표되지 않았고, 다음 협상 일정마저도 잡지 못했다. 이는 과거 청산문제와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에 대한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북한은 2000년 1월말 호주 에너지사업 대표단을 초청, 북한의 전력시스템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7월 중순부터 농업분야 전문가 몇 명은 핀란드 트르나바 감자연구센터에서 다수확 품종 감자재배법을 교육받았다. 이들은 핀란드 정부로부터 체재비 10만 마르카(1,900만원)을 지원받았다. 북한은 11월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산업·무역장관을 초청하였다.

<표-51> 2001년 대외분야 빈도율(%)



<표-51>에서 처럼 2001년에 접어들어서 『로동신문』은 대외관련 사설 비중을 갑자기 높였다. 그 이유는 부시 행정부 등장이후 대중국 외교를 강화하려는 의도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1월말 현재 9건이나 발표되었는 바, 그것들은 1월 23일 사설 “조중친선은 세기를 이어 강화발전될 것이다,” 5월 2일 사설 “조선-유럽동맹관계의 새로운 발전,” 5월 25일 사설 “새 세기 재일조선인운동발전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대회,” 6월 25일 사설 “미제의 새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자,” 7월 1일 사설 “세기를 이어 강화발전되는 조중친선,” 7월 11일 사설 “중국공산당이 걸어 온 투쟁과 진보의 80년,” 8월 22일 사설 “새세기 조로친선과 자주위업의 리정표를 마련한 력사적 사변,” 9월 3일 사설 “끊임없이 강화되는 조중친선의 뉴대,” 9월 8일 사설 “조중친선관계발전에서 력사적인 계기” 등이다.

2001년도 『로동신문』 사설은 여러 가지 점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중국관련 사설이 9건 중 5건이나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만큼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 위원장은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였다. 김 위원장

은 북경에서 장쩌민 당 총서기가 주최한 연회에 참석한 후 중국의 대표적인 개혁개방 도시인 상하이로 방문하였다. 김정일은 상하이의 발전상을 보고 ‘천지개벽’이라는 용어를 사용, 중국의 개혁개방의 성공을 칭찬하였다. 김정일은 1983년 비공식 중국방문시 상하이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의 상하이 방문은 그가 『로동신문』 1월 4일자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강조한 이후였기 때문에 향후 김정일이 ‘상하이 모델’을 북한에 도입하려한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이 나왔다.

아울러 김정일은 7월 1일 2000년 3월 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주북 중국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였다. 중국공산당 창건 80주년 기념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일국의 최고통치권자가 두 번씩이나 중국 대사관을 방문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미국을 견제할 역량을 가진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는 인식하에서 안보관계상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한편, 경제난 타개를 위해 내세운 I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첨단과학 기술을 중국으로 이전받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9월 장쩌민 중국 주석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미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은 내심으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신북방3각관계’ 형성을 기대하여 사실을 게재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미국의 ‘10·7 대테러 전쟁’ 이후 중국 및 러시아의 미국지지로 인해 실망으로 전변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EU와 관련된 사실 기재이다. 북한은 1998년 ‘강성대국’ 건설 천명 이후 ‘경제강국’ 건설에 매진하였다.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은 필수적 사안이기 때문에 북한은 1999년부터 백남준 외무상을 필두로 대유럽 외교에 매진하였고 동년 UN총회를 계기로 이탈리아 외무장관을 포함, 20여개국 대표들과 회담하였고 그 결과 2000년 1월 4일 이탈리아와 수교¹⁰²⁾ 하였고, 동년

102) 이탈리아는 1980년대 초반부터 북한과 수교하려 했으나 북한이 반대

12월에는 영국과 수교하였다. 2001년에는 <표-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델란드를 필두로 6개국과의 수교가 성사되었고 5월 14일에는 EU가 북한과의 수교를 결정하였다. 이로써 EU 15개국 중 13개국과 수교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¹⁰³⁾ 이러한 가운데 EU의장인 스웨덴의 요란 페르손 총리가 5월 2일부터 3일까지 서방국가 수반으로서 는 최초로 북한을 방문하였다. 북한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로동신문」 사설도 EU와의 관계 개선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하였고, 1991년 UN가입 이후에는 북한이 수교하려 했으나 이탈리아가 반대해서 무산되었음. 이탈리아가 G7국가들중 최초로 북한과 수교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김일성이 1948년부터 이탈리아공산당에 관심을 가지고 접촉한 점, 이탈리아의 정계의 좌파적 분위기, 1970년대이후 수십차례 북한과 접촉한 이탈리아국제관계연구소 총서기 장 카를로 엘리아 발로리의 헌신적 역할 등 때문인 것으로 보임. 장 카를로 엘리아 발로리는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후 최초로 조문한 서방인이었음. 「연합뉴스」, 2000.1.5.

103)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줄고, “북한의 대서방국 및 EU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제10권 1호(2001), pp. 89~114 참조.

<표-52> 북한-서유럽(EU포함)수교현황

국 가 명	수 교 일
말 타	1971. 12. 20.
아이슬란드	1973. 5. 21.
덴마크(EU)	1973. 5. 21.
스웨덴(EU)	1973. 5. 25.
핀란드(EU)	1973. 6. 1.
노르웨이	1973. 6. 22.
오스트리아	1974. 12. 17.
스위스(EU)	1974. 12. 20.
포르투갈(EU)	1975. 4. 15.
이탈리아(EU)	2000. 1. 4.
영국(EU)	2000. 12. 12.
네델란드(EU)	2001. 1. 15.
벨기에(EU)	2001. 1. 24.
스페인(EU)	2001. 2. 7.
독일(EU)	2001. 3. 1.
룩셈부르크(EU)	2001. 3. 5.
그리스(EU)	2001. 3. 8
프랑스(EU)	미정
아일랜드(EU)	미정
EU 수교결정	2001. 5. 14

* 2001년 11월 31일 현재

셋째, 미국에 대한 비난 사설이다. 2001년 들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매우 나빠졌다. 그 이유는 1월에 새로 등장한 부시행정부의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파월은 1월과 3월 등 2회에 걸쳐 김정일을 ‘독재자’라고 표현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1월 25일 강력히 항의하였으며, 2월 21일에는 ‘외교부대변인 담화’를 통해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의 대북 강경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였다. 특히 3월 8일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부시

대통령이 포용정책은 지지하지만 ‘검증’과 ‘엄격한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김정일을 ‘회의적(skeptical)’인 인물로 표현한 것에 대해 북한은 강한 반발을 보였다. 부시대통령은 6월 6일 북한과의 대화를 제의하였으나 6월 7일 발표된 ‘대북정책 검토결과’에서 미국은 대화의제로 ‘재래식 무기’까지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북한은 6월 18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제의를 비판하고 경수로 제공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보상문제’를 주의제로 내세우는 한편, 북미대화는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와 2000년 10월 ‘북미 공동코뮤니케’의 토대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그 선을 명확히 하였다. 물론 미국은 ‘보상불가’를 천명하였고 이후 북미간 대화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9·11 테러사태’ 이후 ‘테러지원국가’로 분류된 북한에 대한 미국내 보수 세력의 시각이 더욱 나빠지면서¹⁰⁴⁾ 북한의 대미 비난이 강화됨으로써 북미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¹⁰⁵⁾ 그러나 북한은 주 UN 대사를 차관급인 박길연으로 교체하고, 11월 3일 2개의 테러관련 협약 가입을 약속하는 한편 IAEA에 대해 동위원소실 사찰을 허용하는 등 유화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대외적인 위협이 증대되면 대외적 온건책을 구사하는 정책선택을 하였다.

이외에 북러간에는 2000년 푸틴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행해졌다. 김정일은 7월 26일 러시아 국경지대인 핫산역 통과하여 시베리아를 횡단, 8월 4일부터 5일까지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에 참석하였다. 북러 정상은 8월 4일

104) 『뉴욕타임즈』지는 아프가니스탄 다음 공격목표로 북한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The New York Times』, 2001, November, 25.

105) 미국의 ‘대테러전쟁’ 이후 세계전략 및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김국신,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질서의 변화』 (북한연구학회 2001년도 동계학술회의 자료집 2001년 11월 24일), pp. 161~177 참조.

‘모스크바 선언’을 통해 8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TKR과 TSR 연결사업의 실현을 선포한 것이다.

북·일관계는 담보상태를 면치 못했고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문제, 종군위안부 문제 등으로 인해 북한의 대일 비난만 지속된 상태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월 7일 역사교과서의 당국검정 통과를 “국제사회와 인류양심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고 비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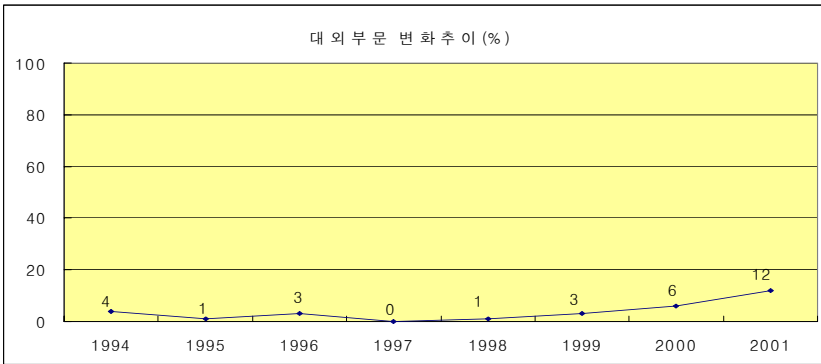
한편 2001년 1월말 부터 지재룡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노동당대표들이 영국, 프랑스, 벨기에를 방문하였고, 2월 6일부터 20일까지 유럽연합 경제협력대표단이 북한을 방문, 농업과 에너지 분야 등 경제협력을 위한 기초활동을 벌였으며 스위스-스웨덴계 산업설비 생산업체인 ‘아세안 브라운 보베리(ABB)’ 그룹 대표단이 1월 9일부터 1주일간 평양을 방문, 평양사무소 개설을 합의하였다.

2월 24일 전승훈 금속기계공업상을 단장으로 한 경제대표단이 이탈리아를 방문하였고, 미국의 「스탠리그룹」 초청으로 2월 27일 내각의 무역성과 재정성 등 5-7명의 관리들이 방미하였다. 또한 김봉익 무역성 부상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2월 28일부터 6일간 이탈리아를 방문, 자동차, 섬유 분야에 대한 투자상담 등 경제협력 확대를 논의하였다.

전체적으로 김일성 사후 「로동신문」은 대외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별로 다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룬다 할지라도 중국관련 사실이 대부분이었다. 중국관련 사실이 9건 중 5건이었다. 이것은 북한이 그만큼 중국을 중요시한다는 증거이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악화된 상황에서도 「로동신문」, 사설이나 정론에는 ‘반미’가 잘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제3방송’을 통해서 ‘반미교육’을 강화했겠지만 외형적으로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대화하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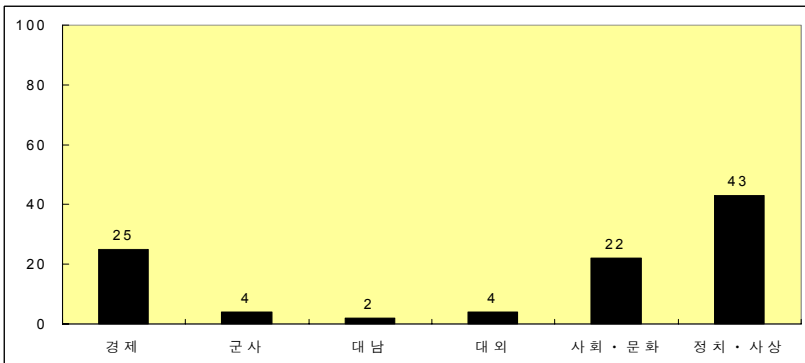
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하나의 특징은 <표-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 이후 대외관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사설숫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53> 1994~2001년 대외분야 빈도 수 추이



6. 대남분야

<표-54> 1994년 대남 분야 빈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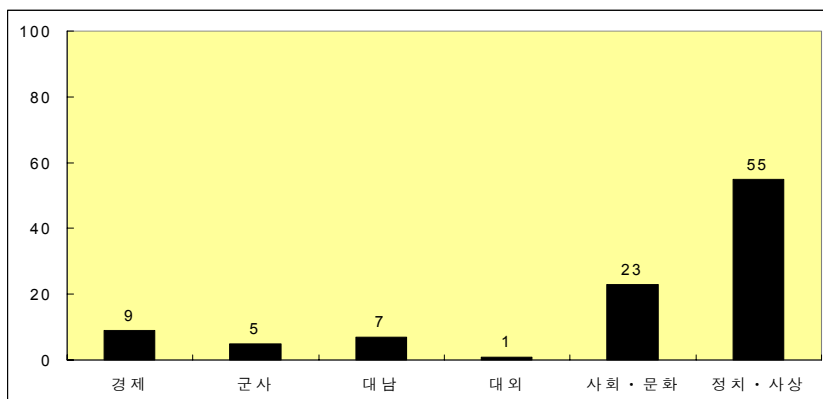


<표-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 『로동신문』은 대남분야 사설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로동신문』이 다룬 대남분야 사설은 김일성 사망 전인 7월 4일 “3대원칙을 구현하여 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자”였다. 따라서 김일성 사후에는 대남관련 사설은 한 편도 없었다. 물론 그 이유는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주민통제를 위해 사상정치분야에 대한 강조를 강화했기 때문이었다.

1994년 김일성 사망직후 발생한 가장 큰 사건은 ‘김일성 조문파동’이었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후 대남비방을 일시적으로 자제하였으나, 김일성 사후 남한 정부가 김일성 조문 금지조치를 취하자 7월 15일 「한민전」 대변인 담화를 통해 “초보적인 예의범절도 모르는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비난한 이후 대남비방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7월 14일 김일성 사망에 대한 조문단 방북 환영 담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5차 범민족대회 개최, 9월 25일 단군릉 준공식에 대한 남한 주요 정당 및 사회단체 인사들의 초청 서신 발송 등을 통해 통일전선전술을 계속 구사하였다.

한편 김일성 사후에도 북한의 대남정책은 ‘유훈통치’ 차원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9월 9일 김일성 추도대회와 국가수립 46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등을 통해 「통일3원칙」 및 「10대강령」을 구현하고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방안을 재천명하고, 주한미군 철수, 남한당국의 외세의존 포기를 주장하였다.

<표-55> 1995년 대남 분야 빈도율(%)



1995년 들어 『로동신문』은 <표-55>에서 처럼 대남관련 사설을 갑자기 증가시켰다. 남한에 대한 통일투쟁촉구 때문이었다. 그 이유는 아마 경제난에 대한 반작용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은 남한내 학생·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연대적 통일투쟁 및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는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는 한편, 한국정부에 쌀을 요청하는 등 이중적 대남전술을 견지하였다. 북한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입각한 통일을 촉구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주장을 되풀이하였다.

『로동신문』은 3월 1일자 사설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를 비롯해 4월 6일자 사설 “전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자,” 4월 19일자 사설 “거족적인 투쟁으로 4.19의 리념을 실현하고 90년대 통일을 이룩하자,” 5월 5일자 사설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90년대 통일의 돌파구를 열자,” 5월 18일자 사설 “거족적 투쟁으로 광주의 념원을 실현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6월 25일자 사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자,” 8월 18일자 사설 “민족통일대축전을 90년대 련방제통일로 이어가자” 등을 발표하였다. 예시된 사설게재 시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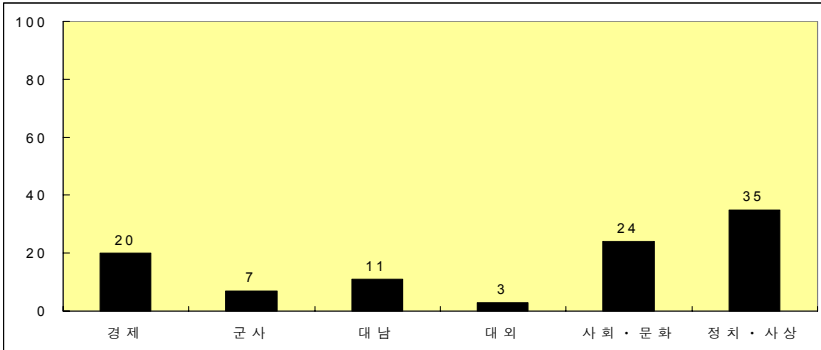
하나의 특징은 통일문제에 대한 사설이 전반부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기조는 1월 19일 「한민전」 중앙위원회가 ‘남조선의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지속적으로 안기부 해체 투쟁을 전개하도록 남한주민을 선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북한은 남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미출소공산주의자’ 문제를 인권탄압행위로 비난하였다. 즉 북한은 1월 12일과 10월 26일 남한의 ‘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 조선위원회’를 통해 김선명,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의 석방과 송환을 촉구하였다.

한편, 북한은 연초부터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1월 24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당·단체 연합회의’를 개최하여 ‘남조선과 해외의 정당·단체 각계각층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조국해방 50주년을 맞아 ‘8.15 통일대축전’과 남북 정부당국, 정당·사회단체 및 해외동포들이 참석하는 ‘대민족회의’를 열어 민족공동의 과제와 통일방도, 민족대단결 실천대책을 협의·확정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은 1월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과 한반도문제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합의를 촉구하는 한편, 분위기가 조성되면 언제든지 남북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대민족회의’를 통한 통일문제 해결을 주장하면서도 평화보장 문제는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즉 북한은 ‘主 대미협상, 從 남북대화’ 전술에 입각,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국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요구를 거부하였다. 북한은 “남과 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유관국들이 담보하는 ‘2+4’나 ‘2+2’ 방식의 평화구축안은 한반도 평화보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등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의도를 드러내었다.

<표-56> 1996년 대남 분야 빈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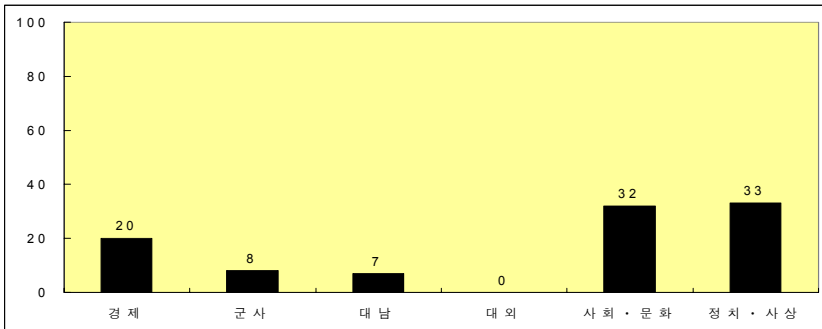
1996년에 들어서 『로동신문』은 <표-56>에서 처럼 남한관련 기사를 더욱 많이 게재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3월 1일자 사설 “민족의 대단결로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 4월 6일자 사설 “전민족의 대단결로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고 통일을 이룩하자,” 4월 19일자 사설 “거족적인 투쟁으로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통일을 이룩하자,” 8월 15일자 사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민족앞에 이룩하신 역사적 공적은 영원불멸할 것이다,” 8월 23일자 사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8.15통일투쟁은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등이다. 1996년에도 1995년과 같이 대남관련 사설은 전반부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다.

1996년은 북한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특히 1995년 대홍수로 인해 식량난이 극에 달했고, 탈북자도 그 만큼 증가하였다. 북한은 수해를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 당국에 대해서는 일체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종교단체의 원조에 대해서만 은밀히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즉, 북한은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남북경제교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반면, 당국간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될 ‘나진·선봉 국제투자 포럼’에 참가를 신청한 남한측 신청자 53명(기업인 24, 기업관련인 5, 공사관련자 1, 정부관계자 12, 언론인 11명) 중 기업인 23 중소기업협동조합·담배공사 관련인 각 1명 등 총 25명만을 선별초청 함으로써 우리측의 불참을 유도하였다. 이 같은 북한의 선별초청과 수용은 정부와 민간을 분리하고 당국간 접촉을 회피하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한편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간 대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4월 16일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4자회담’을 요지로 하는 제주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김일성 조문파동 이래 지속해온 남북대화 불응 입장을 재천명하는 동시에 ‘4자회담’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공식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미국측에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대미 평화협정 우선 체결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였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 체제생존전략 차원에서 전개해 온 ‘주 대미협상, 從 남북대화’의 전략구도를 지속하였다.

<표-57> 1997년 대남 분야 빈도율(%)



1997년 들어 「로동신문」의 대남관련 보도는 <표-57>에서 처럼 상대

적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경제난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내부단속과 함께 남한에 대한 견제도 동시에 펼쳤다. 대표적인 사설은 3월 1일 “민족자주 평화수호의 기치밑에 통일대행진을 더욱 힘차게 벌려 나가자,” 4월 6일 사설 “10대 강령의 기치밑에 민족자주 평화수호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리자,” 7월 4일 사설 “3대원칙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8월 21일 사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조국통일 위업을 앞당겨 이룩하자” 등이다. 역시 전반부에서만 대남관련 사설이 게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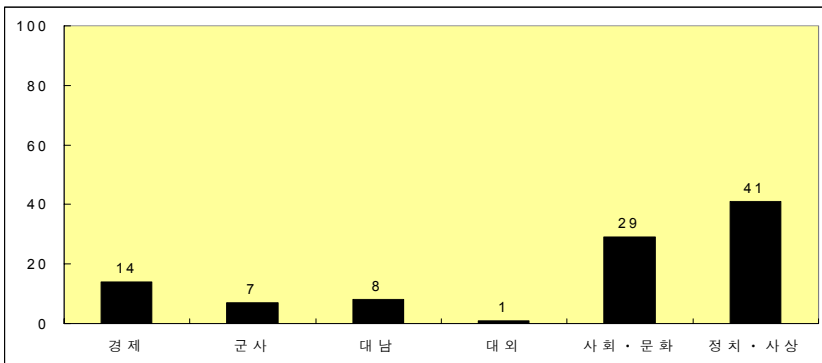
북한은 1997년 1월 1일 신년 「공동사설」에서 ‘3대헌장’을 제시하였다. ‘3대헌장’은 7·4남북공동성명, 전민족대단결 10대원칙,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 등이다. 이것은 김정일이 통일문제에 대해 ‘새로운’ 틀을 짜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통일문제는 김일성 시대에 제시된 방안을 토대로 진행하되 ‘김정일식’도 가미될 것임을 암시하는 문건이 8월 4일 발표되었다. 그것은 소위 ‘8·4로작’으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였다.¹⁰⁶⁾ 이것은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이 보다 실리주의적인 대남정책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과 연관이 있다. 북한은 5월 3일과 26일에 식량지원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에 응하였고, 10월 7일부터 9일까지 관제구역 재조정을 위한 「항공회담」에도 응하였다.

물론 잠수함사건과 부부간첩 최정남·강연정 남파사건이 있었기는 하지만 북한은 「적십자회담」시 지정기탁제를 수용하여, 약 2,00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획득하였고, 관제구역 재조정을 통해 연간 약 200만 달러 상당의 관제로 수입을 획득하였다. 아울러 「4자회담」제의 이후

106)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1997년 8월 4일),” 「김정일 선집 14」, pp. 340~359.

‘검토중’임을 이유로 회답수용을 유보해 왔던 북한은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4자회담’ 1차 본회담에 참가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식량지원 및 미국과의 합법적 대화채널을 확보하려 하였다.

<표-58> 1998년 대남 분야 빈도율(%)



1998년 「로동신문」의 대남관련 사설은 <표-58>에서 처럼 많은 편이었다. 주로 ‘민족주체’에 대한 강조가 주류를 이루었다. 대표적인 사설은 2월 21일자 사설 “민족주체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자,” 3월 1일자 사설 “온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자,” 4월 6일자 사설 “전민족이 대단결하여 민족자주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이룩하자,” 4월 19일자 사설 “거족적인 투쟁으로 민족자주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자,” 5월 5일자 사설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구현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8월 14일자 사설 “통일대축전을 열렬히 축하한다” 등이다. 예년처럼 남한관련 사설은 전반부에만 등장하였다.

1998년은 남한내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로서 대북 포용정책을 구사하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였다. 북한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 일면 의구심을 나타내면서도 기대를 갖는 2중적 태도를 보였다. 남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괴뢰,’ ‘파쑈’ 등의 표현이 없어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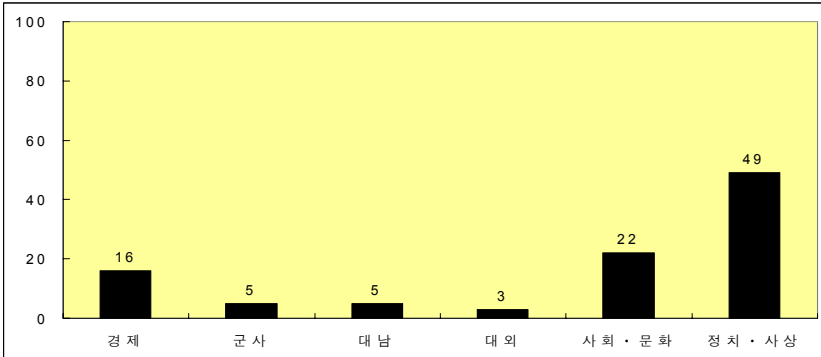
이러한 분위기는 결국 김대중 정부를 신뢰하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택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북한은 1998년 2월 18일 ‘정당·단체 연합회의’를 통해 대북 유화 정책을 기대하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김정일은 4월 18일 소위 ‘4·18 서한’인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¹⁰⁷⁾를 통해 민족자주의 원칙, 애국애족의 온 민족 단결, 북남관계 개선, 외세·반통일세력 반대, 내왕·접촉·대화·연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을 발표하였다. 김정일은 이를 통해 통일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지도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민족문제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선전하려 하였다. 『로동신문』은 이를 반영하여 5월 5일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구현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라는 사설을 썼다.

1997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당국간 대화재개는 회피하면서도 민간 차원의 교류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1998년 6월 한국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김정일이 정주영 회장을 면담하여 대북 투자를 직접 보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11월 18일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되었다.

107) 김정일,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런석회의 50돛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낸 서한 주체87(1998)년 4월 18일),” 『김정일 선집 14』, pp. 41 2~427.

<표-59> 1999년 대남 분야 빈도율(%)



1999년에는 남북관계가 개선된 이유로 인해 <표-59>에서 보는 바대로 『로동신문』은 통일전선 차원의 대남관련 기사를 줄였다. 그러나 여전히 대남관련 기사는 예년수준을 유지하였고 그 내용도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찼다. 그것들은 3월 1일 사설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대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자,” 4월 19일 사설 “거족적인투쟁으로 자주민주 통일의 날을 앞당기자,” 8월 13일 사설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로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자,” 8월 14일 정론 “조선은 하나다,” 8월 18일 사설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자랑찬 한페이지를 남긴 특기할 사변” 등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사설은 전반기에 집중되었으나 특징적인 것은 대남문제와 관련하여 『로동신문』 정론이 등장한 점이다. 북한은 1991년 UN에 가입함으로써 사실상 ‘하나의 조선’ 논리는 포기하였으나 1998년부터 남북관계가 개선됨으로써 통일 가능성이 제고되었다고 판단한 북한이 이를 재론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8년도와 마찬가지로 당국간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민간협력을 통해 실리를 획득하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민족’과 ‘자주’를 앞세운 통일전선전술을 계속 구사하였다. 김대중정부 출범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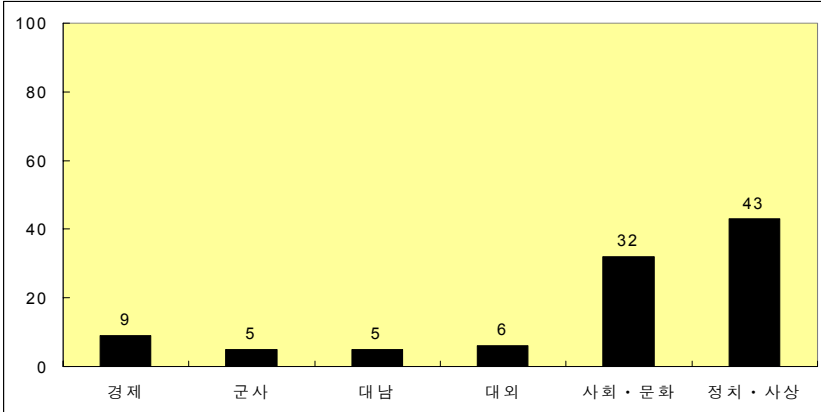
함께 ‘연북화해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남한이 국가보안법 폐지, 안기부 철폐, 합동군사훈련 중지 등의 전제조건을 이행하면 당국간 대화에 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던 북한은 1999년에 들어와 보다 구체적·직접적으로 남북회담을 제의하였다.

북한은 1999년 2월 3일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를 통해 외세와의 공조 파기, 합동군사연습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운동의 자유 보장 등의 전제조건 위에서 하반기에 ‘남북고위급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이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문제, 교류협력문제, 이산가족문제 등을 토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6월 7일부터 꽃게잡이 조업을 명분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기 시작하였다. 남한 해군은 6월 15일 북한의 의도적·지속적인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북한함정에 대해 밀어내기식 ‘충돌격퇴작전’을 감행하였다. 북한함정의 침범에 대한 이 같은 대응과정에서 북한함정의 선제사격으로 남북 함정간에 교전사태가 발생하였다. 『로동신문』은 이 사태를 ‘사설’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북한당국은 6월 22일부터 개최된 비료지원을 위한 북경 남북 차관급 회담을 결렬시켰다.

북한은 서해교전사태를 남한의 ‘고의적·계획적 도발책동’으로 비난하면서 “당분간 남측 인원들의 평양방문과 접촉을 제한 또는 중지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추가적인 군사적 보복조치를 자제하는 등 사태를 악화시키기보다는 금강산관광, 비료지원 등을 포함하여 남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리를 계속 확보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북한은 9월 2일 북방한계선의 무효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황해도와 경기도와의 경계선을 임의로 연장하여 ‘해상군사통제수역’을 설정하였으나 다른 도발은 하지 않았다.

<표-60> 2000년 대남 분야 빈도율(%)



2000년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해였다. 이를 반영하듯 대남관련 「로동신문」 사설과 정론 숫자도 <표-60>에서 처럼 1999년과 비슷했다. 물론 분단후 55년만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커다란 사건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로동신문」이 남북정상회담을 소홀히 취급했다는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그 증거는 ‘6·15 남북 공동선언’ 직후에도 「로동신문」은 사설이나 정론을 게재하지 않은 점이다. 2000년 「로동신문」 사설은 3월 1일 사설 “거족적인 반외세 반괴뢰투쟁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4월 19일 사설 “거족적인 투쟁으로 남조선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실현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5월 18일 사설 “대중적인 반미항전으로 자주 민주 통일의 새날을 안아오자,” 6월 12일 정론 “우리인민의 통일외지” 등이 전부이다. 역시 모두 전반부에만 사설이 게재되었다.

북한은 1999년까지 남북 당국간 접촉은 최소화하면서 민간교류를 통해 실리를 추구해 온 기존의 전략에서 탈피하여, 남북정상회담과 부문별 후속 대화에 참여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3월 9일 ‘베를린선언’을

통해 남북당국간 경협, 이산가족문제 해결, 한반도냉전 종식과 평화정착, 이를 위한 남북대화의 재개 등 4대 과제를 제안하자 북한은 “새로운 것이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남한이 “대결정책에서 벗어나 실제행동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아무 때나” 당국간 대화에 응할 수 있다며 당국간 회담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남북한은 비공개 접촉을 통하여 4월 8일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북한이 정상회담에 합의한 이유는 경제적 지원 획득에 있기는 했겠지만 내부통합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인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남한과 ‘제2의 체제경쟁’을 선언한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의견, 회의 형식, 호칭 등에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남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남한 정부를 대등한 상대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북한은 정상회담 직후 대남비방을 중단하였으며, 장관급 회담, 국방장관 회담, 특사회담, 적십자 회담, 남북경협 실무접촉 등 각종 회담을 수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측 대표들은 과거와 달리 대화 지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를 이어나가려고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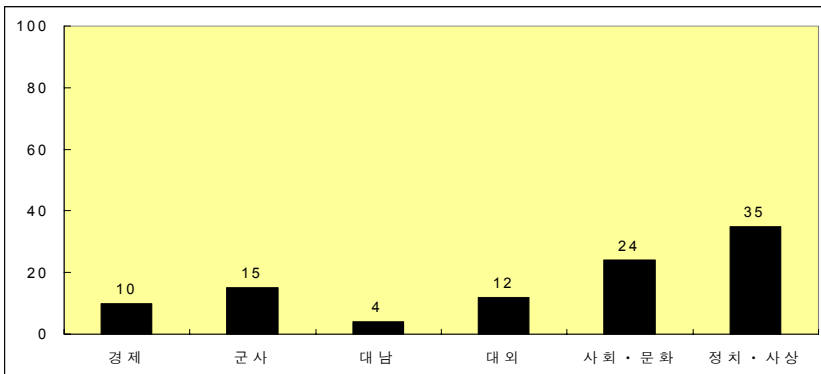
공동선언의 첫 결실로서 남북적십자회담이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100명 규모의 이산가족 상봉이 3차례 개최되었고, 4회의 장관급회담(7.29~31, 8.29~9.1, 9.27~30, 12.12~16)이 개최되었다. 1회의 국방장관회담도 개최되었고, 경의선 복원 및 문산 개성간 도로건설 사업도 시작되었다.

북한은 남북경협사업에는 적극적인 반면, 군사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남측이 군사문제 논의를 강력하게 요구하자 북한은 결국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김용순 특사의 서울 방문시 이를 수용하였다. 특사 회담에서 김용순은 가까운 시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국방장관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남측의 조성태 국방장관과 북측의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국방장관회담이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로동신문』은 사건에 대한 보도는 정확히 하였으나 사설이나 정론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표-61> 2001년 대남 분야 빈도율(%)



2001년 들어 『로동신문』은 <표-61>에서 처럼 2000년과 유사하게 대남관련 사설이나 정론을 다루었다. 3월 1일 사설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전민족대단결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자,” 6월 15일 사설 “6.15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해 나가자,” 9월 2일 사설 “통일에국투사들은 우리 당과 민족의 자랑” 등이다. 『로동신문』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최초로 ‘6·15 공동선언’ 관련 사설을 다루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남북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

다. 그리고 9월 이후에 대남관련 사실이 등장한 이유는 ‘8·15 통일대축전’ 이후 문제를 일으킨 축전참가자들의 구속사태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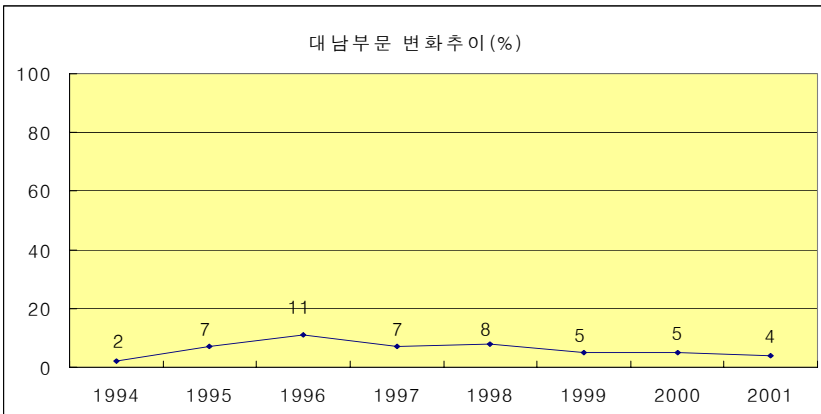
2001년 들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하였다. 전반부에는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책과 『현대』의 금강산관광 비용 미지급 사태였고, 후반부에는 미국내 ‘9·11테러 사태’와 미국의 ‘10·7 대테러 전쟁’이 악재였다. 1월에 등장한 부시행정부는 대북관계 조절을 주장하면서 ‘엄격한 상호주의’와 ‘철저한 검증’을 대북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그리고 부시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회의(skepticism)’를 강하게 나타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대미비난을 지속하고 부시행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북미제네바합의』 파기까지 거론하는 한편 남북당국간 관계에 대한 ‘속도조절’을 시작하였다. 3월 13일 제5차 장관급회담을 갑자기 연기한 것이 그 예이다. 물론 이후 우여곡절 끝에 제5차 회담을 개최하여 10여 가지의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제6차 장관급 회담은 북한이 ‘9·11테러 사태’와 미국의 ‘10·7 대테러 전쟁’ 이후 남한내에 내려진 ‘비상경계 조치’ 해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신변안전보장’을 이유로 금강산 지역에서만 각 종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주장 때문에 무산되고 말았다.

한편 『로동신문』은 10월 7일 정론 ‘아리랑’을 내보냈다. 이것은 물론 남한만을 겨냥한 정론은 아니지만 북한이 2002년 4월 공연을 목표로 연습중인 ‘아리랑’이라는 매스게임과 같은 명제로서 민족적 정서를 자극하여 남북한 주민교류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로동신문』의 대남관련 사실은 <표-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년 11%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6년의 빈도수가 높았던 이유는 1995년 대홍수로 인해 ‘민족대단결’ 즉 남한의 원조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대남관련 정론이나 사실 빈도수가 낮아진 것은 대북 포용정책

을 채택한 김대중 정부의 등장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아직까지도 ‘민족대단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정책 또는 대남전략이 변화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속단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로동신문』은 대남관련 사설이나 정론을 대체로 8월말 이전에만 게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북한이 매년 8월 15일을 대남 통일전선전술 구사의 정점으로 삼고있다는 증거이다.

<표-62> 1994~2001년 대남분야 빈도 수 추이



IV. 결 론

1994년 김일성 사후부터 2001년 11월 31까지 「로동신문」이 분야별로 게재한 ‘사설·정론·논설’ 689건을 분야별로 나누어 정책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 사후인 1995년에 「로동신문」은 전체 사설, 정론, 논설 중 55%를 정치사상 부문에 할애하였는 바, 북한이 주민사상동요를 크게 걱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재임된 이후인 1999년에 정치사상분야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다. 1999년 이후 정치사상에 대한 강조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는 바, 이것은 김정일로의 정치적 통합이 완성된 자신감에서 발로된 것으로서 경제분야나 외교분야에 대한 강조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로동신문」은 1995년 및 1996년부터 경제관련 사설을 대폭 증가시켰다. 북한이 1996~1997년을 ‘고난의 행군’ 기간으로 정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시기가 경제적으로 가장 곤란한 때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분야에 대한 사설 게재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로동신문」은 경제관련 정론·사설·논설수를 대폭 축소하였다. 그 이유는 일단 최악의 경제상황은 극복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로동신문」은 1997년에 사회문화 관련 사설, 정론, 논설 비율을 높였다. 그 이유는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동요가 극심했고, 그 만큼 주민들의 단결이 중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2000년에 「로동신문」이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게재횟수를 증가시킨 이유는 정상회담과 EU 등 서방국가 들과의 수교로 인한 사상침습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로동신문」의 군사관련 정론·사설·논설 게재비율은 대체로

4~7% 정도였다. 그러나 2001년 들어 「로동신문」은 그 비율을 15%로 격상시켰다. 그 이유는 북한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매우 불안하게 인식하고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맞서 내부적으로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2001년 북한이 군의 중요성을 강화한 이유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책’으로 선화하려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고 더구나 미국의 ‘9·11 테러사태’로 인해 ‘테러지원국가’로 분류된 북한도 언제 미국의 침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다섯째, 김일성 사후 「로동신문」은 대외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별로 다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룬다 할지라도 중국관련 사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01년 들어 대외관련 정론·사실이 9건으로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 중국관련 내용이 5건이었다. 이것은 북한이 그만큼 중국을 중요시한다는 증거이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악화된 상황에서도 「로동신문」사실이나 정론에는 ‘반미’가 잘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제3방송’을 통해서도 ‘반미교육’을 강화했겠지만 외형적으로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대화하려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하나의 특징은 1999년 이후 대외관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사실숫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로동신문」의 대남관련 사실은 1996년 11%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6년의 빈도수가 높았던 이유는 1995년 대홍수로 인해 ‘민족대단결’ 즉 남한의 원조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대남관련 정론이나 사실 빈도수가 낮아진 것은 대북 포용정책을 채택한 김대중 정부의 등장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아직까지도 ‘민족대단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정책 또

는 대남전략이 변화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속단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로동신문』은 대남관련 사설이나 정론을 대체로 8월말 이전에만 게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북한이 매년 8월 15일을 대남 통일전선전술 구사의 정점으로 삼고있다는 증거이다.

한편, 위의 분야별 추이를 종합해 볼 때 서론에서 세운 가설 즉, 북한은 국·내외 상황이 어려울 경우 생존을 위해 ‘대외 유연’ 정책을 구사한다는 경향성(tendency)이 있고, 대외 유연정책 이전에 사상정치적으로 공고한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정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김일성 사망, 극심한 식량난, 대북 포용정책을 재검토하려는 부시 행정부 등장 등에 대해 ‘강성대국’론, 강력한 국방위원장 체제 수립, ‘선군정치’ 표방, 사상단속 강화 등 내적 체제를 정비한 가운데 미국과 「북미제네바합의」, ‘북미공동코뮤니케’ 등을 도출하는 한편, EU와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하였고 남한과는 금강산관광 개방 및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취하였다. 특히 <표-63>에서와 같이 ‘9·11테러 사건’ 및 ‘10·7 대테러전쟁’ 이후 북한은 2개의 ‘반테러조약’에 가입하는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를 보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63> 김정일 사후 북한의 대내·외 환경 적응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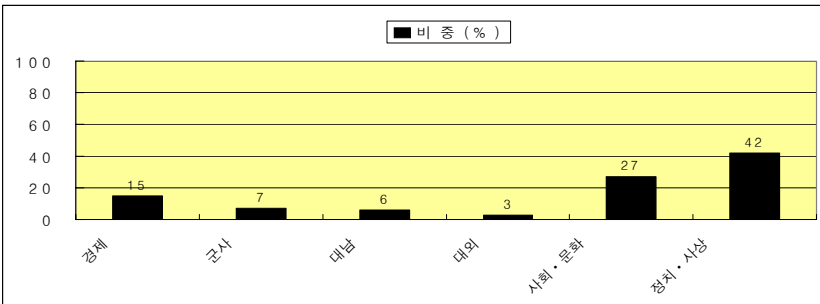
대내외 위협		내부안정장치		대외적 반응	
시 기	내 용	시 기	내 용	시 기	내 용
1994.7.8	김일성사망	1994.10	'비사회주의구루빠'를 통한 사상 통제강화 '김일성=김정일'화	1994.10.21	북미제네바 핵합의
1995.9~현재	심각한 식량난	1996~1997	'고난의 행군'을 통한 내부통합	1995.9	북, 국제사회에 식량지원 요청
1996.3	미, 북한 미사일문제 쟁점화	1997	'사회주의 강행군'	1997.	자본주의 교육 확대
1998.8.17	미, 금창리 핵의혹 제기	1997.7.9	주체연호 제정, 김일성 절대화	1998.11.18	금강산관광개방
2001.1	부시정부, 대북 정책 재검토	1998.8.22	'강성대국' 건설 표방	1999.10	대EU 및 서방외교 확대
2001.9.11	미국내 테러사태	⇒ 1998.8.31	미사일시험발사로 김정일 위대성 부각	⇒ 200.6.13~15	남북정상회담
2001.10.7	미, 대테러전쟁	1998.9.5	헌법수정, 국방위원장체제	2000.8.10	개성특구 설정
		1998.10	'선군정치' 채택	2000.10.12	북·미공동 코뮤니케
		2000.	세대교체 시작	2001.1.4	'신사고' 표명
		2001.9	군사대비 태세 강화	2001.1.15~20	김정일, 중국방문
				2001.7.26~8.18	김정일, 러시아 방문
				2001.9.3~5	북·중 정상회담
				2001.11.3	북, 2개의 반테러조약 가입

첫째, 북한은 김일성 사망, 아사자 속출 등 대내적 악재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 미국과 「북미 제네바합의」를 도출하였고, 1995년에는 국제사회에 정식으로 식량지원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1997년부터는 자본주의 교육을 위해 관료들을 해외에 파견하였다. 1999년부터 북한은 유럽연합(EU)과의 관계개선에 매진한 결과 유럽연합 15개국 중 13개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아울러 김정일은 2000년 6월 역사상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한편, 7월에는 자본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개혁·개방 노선을 걷고 있는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는 1월부터 ‘새로운 관점’을 강조하고 IT산업 육성에 매진하는 한편,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지역인 상하이 포동지역을 방문, 개방에 대한 관심을 세계에 과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1989년 사회주의권 붕괴이후 체제붕괴 위기에 직면한 김정일이 ‘대외 유연정책’ 구사를 통해 자본주의국가 특히,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을 제어하기 위한 전략전술인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일련의 김정일의 행보를 북한의 개혁·개방 노선 채택으로 보는데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북한은 ‘대외 유연정책’ 채택에 앞서 <표-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상, 정치, 군사,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체제결속력을 강화시켰다.

<표-64> 1994~2001년간 사설·정론·논설 중 부문별 비중



사상적 측면에서는 ‘혁명적 수령관’을 여전히 강조하였다.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집착력이 『로동신문』에 강하게 투영되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였다. 아울러 이념적 선동성이 강한 ‘붉은기 철학,’ ‘한식술론’ 등이 등장, 사상적 통합을 더욱 강화시켰다.

정치적 측면에서 김정일의 절대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수령후계자’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으로 인해 권력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꾸었다. 김정일은 자신의 카리스마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유훈통치’를 강조하는 한편, ‘김일성=김정일’론을 통해 김일성과의 동일시 작업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김정일은 1998년 실제적으로는 주석보다 훨씬 강력한 국방위원장에 취임하여 당과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군사적 측면에서 ‘선군정치’를 통해 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주민일탈 행위를 군이 직접 통제하도록 하였다. 김정일은 군의 충성유도를 위해 군고위 간부의 서열상승을 포함해 군부대에 대한 집중방문 등 군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을 취하였다. 물론 ‘선군정치’가 당이나 수령후계자의 권위보다 결코 높은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은 ‘혁명적 무장력’인 군을 앞세워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군사력을 과시, 북한에 대한 위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김정일의 전략적 고려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측면에서 주민결속을 위해 ‘김일성은 곧 김정일이다’라는 구호를 전 사회에 보급시키고, 각종 통제장치를 통해 주민통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1995년부터 시작된 극심한 식량난은 주민일탈을 확대시켰고, 하급관료들의 부패와 동요를 증대시켰다. 비록 북한은 ‘비사회주의 구루빠’를 통한 감시강화, 범법자에 대한 공개처형 등과 같은 강경책과 농민시장에서의 상행위 묵인, ‘개인경리’에 대한 사적 소유인정, 분조관리제 조정 등 온건책을 병행하여 주민결속 및 정권과 체제에 대한 충성

을 강화하고 있으나 주민일탈 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오히려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인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일탈행위가 단기간내에 김정일 정권 또는 ‘수령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조직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북한은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인가? 사실 북한의 변화는 이미 김일성이 1955년 ‘좌수우수론’¹⁰⁸⁾에 의해 그 물꼬를 터냈고, 이후 1970년대초, 1984년, 1991년 등 몇 차례의 개방시도가 있었다. 다만 현재의 변화는 그 속도와 범위가 이전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빠르고 넓을 뿐이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은 1980년 「고려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 제시되면서 남북 양체제의 현상유지전략인 ‘연방제통일전략’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1946년에 채택된 당강령과 1980년에 신설된 당규약 전문에 ‘온사회의 주체사상화’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남혁명 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보이지만 김정일의 언급대로 ‘대남일군’의 존재이유를 주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는 화석화된 문장일 뿐이다.¹⁰⁹⁾ 단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은 대남혁명 전략은 아닐지라도 ‘연방제통일전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일뿐이다.

「로동신문」 ‘사설·정론·론설’ 제목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김정일 정권의 정책을 ‘추론적 차원’에서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¹¹⁰⁾

-
- 108) 김일성은 허가이·박일우간의 노선논쟁을 비판하면서 “밥을 먹는데 바른손으로 먹든 왼손으로 먹든 또는 숟가락으로 먹든 젓가락으로 먹든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어떻게 먹든지 간에 입에 들어가는 마찬가지가 아닙니까”라고 말하여 실용주의적 태도를 취하였다.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477.
- 109) 「중앙일보」, 2000.8.14. ‘방북언론사장단-김위위원장대화록’ 다만 김정일이 노동당 강령에 대한 개정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정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110) 이와 관련된 자료는 줄고, “북한의 대내변화: 실상과 전망,” 「북한은

첫째, 주체사상에 대한 강조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혁명적 수령관’에 대한 강조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체사상의 내용은 김정일의 위대성을 부각시키는 내용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 차원에서는 주체사상 기초하에 실용주의적 태도가 주요 생활기준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7차 당대회를 통해 중국 처럼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유사한 노선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식 개발독재’ 정책을 합리화하는 노선변경이 도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국방위원장체제는 지속될 것이다. 다만 이의 변형된 형태인 ‘왕정’이나 ‘종신대통령제’ 같은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왕제를 채택하고 있는 아랍국가들처럼 김정일도 정치적으로는 ‘왕제’를,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당대회나 헌법수정을 통해 국방위원장 체제는 종식될 것이다. 특히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각종 전향적 조치를 김정일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전향적 조치에 대해 남북한 주민 및 주변국의 지지가 확산될 경우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합하는 기구를 설립, ‘초대 수장’ 즉, ‘연방대통령’이 되려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정일식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 개인적 차원에서 반대할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김정일이 이러한 도전을 잘 제압하면 ‘북한의 등소평’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북한의 고르바췌프’가 될 것이다.

셋째, 경제난 해결을 위해 경제제도 개선에도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분조관리제의 가족책임생산제로의 전환, 패기밭에 대한 세금완화, 농민시장의 거래품목 확대, 소규모 개인상행위 합법화, 이산가족 방문을 위한 해외여행 확대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체농법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통일연구원 학술회의총서 2000-05) (서울: 통일연구원, 2000.8) 참조.

을 개선하여 농민의 선택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개방정책으로 인해 북한경제 회생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세금제도의 부활을 통해 자본주의 기업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확대되면 중앙 통제경제는 형해화되고 자본주의식 경영방식이 도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농민시장의 ‘암시장화’ 확산으로 인해 당국의 묵인하에 밑으로부터 시장사회주의가 등장하고 상당량의 자본소유자도 발생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으로 주민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고 정치적 목적이 아닌 각종 친목활동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행증없는 지역간 이동을 허용하고 남한 및 해외 가족·친지들과의 서신교환이나 전화통화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의식은 보다 개방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방적 분위기는 김정일 정권의 개방정책에 오히려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민들의 개방적 태도가 자유주의적 세력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섯째, 북한군의 보수적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빨치산의 후예임을 자부하는 군부는 ‘반제’노선을 고수할 것이고 주체사회주의의 고수에 헌신할 것이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수령후계자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또한 변함이 없을 것이다. 김정일의 개방 노선에 대한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 차원에 머물 가능성이 있고 각종 통제장치로 인해 조직화·집단화되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개방정책에 대한 군관료들의 개별적인 불만표시 가능성은 상존 할 것이고, 이것은 ‘궁정혁명식’의 김정일 정권 변화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섯째, 남북관계는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화해협력이 지속될 것이다. 김정일의 절대권력에 기반한 전향적인 대남정책은 김정일의 권위 제고를 위해서라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한과의 관계는 제6차 장관급회담 무산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전체제라는 구조적인 한

계로 인해 급속한 진전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긴 하지만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정신에 입각, 당국간 대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2차 정상회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더구나 만일 미국이 '대테러전쟁' 승리 이후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면 정상회담을 '피난처'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없이 국제사회로 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군사분야에서까지도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통일전선전술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남한내 진보적 인사들에 대한 '포섭공작'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가 현실화될 것인가는 의문이다. 그것은 2001년 '8·15 통일대축전' 행사시 증명되었다. 아울러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답보상태에 있는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할 것이고, 주민들의 사상이완 없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개방지역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¹¹¹⁾

일곱째,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대내외 환경이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개방을 확대하면서¹¹²⁾ 대외관계를 유연하게 유지하려 할 것이다. IT산업 활성화를 비롯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는 대미관계 개선이 필수적이고 특히 '대테러전쟁' 이후 미국의 유일패권화가 확고히 된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화는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벼랑 끝 외교'를 구사하면서도 결국 미국과의 핵심의제인 대량살상 무기 및 재래식 무기 문제 등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변수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인식 변화 여부이다.

111) 미국 테러사태 이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고유환, "미국 테러사태 이후 남북관계 전망," 「미국테러사태이후 국제관계」(한국국제정치학회 2001년도 연례학술회의, 2001.12.14) 참조.

112)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신지호, 「북한의 '개혁·개방」(서울: 한울, 2000) 참조.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가. 단행본

- 국가안전기획부,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집』, 1996.
- 김성철, 『김정일의 퍼스낼리티·카리스마·통치스타일』,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경제개혁 전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 김영춘, 『일본의 외교정책 결정요인-북·일국교정상화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김하룡, 『중국정치론』, 서울: 박영사, 1990.
- 목정균, 『북한의 위기상황인식에 관한 연구-김일성 사후 『로동신문』 사설(1996.1~1997.2)의 『위기주제』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박종철, 『페리프로세스와 한·미·일 협력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박형중,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1997.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3.
- 신지호, 『북한의 '개혁·개방』, 서울: 한울, 2000.
- 양영식, 『통일정책론』, 서울: 박영사, 1997.
- 여인곤, 『북러관계 변화추이와 푸틴의 대북정책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이온죽, 『북한사회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 이우영,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7.
- 이춘근, 『북한핵의 문제』, 성남, 경기도: 세종연구소, 1995.
- 이 한, 편저, 『북한의 통일정책변천사(하)』, 서울: 온누리, 1989.
- 이항구, 『북의 실상과 허상』, 서울: 한국출판공사, 1985.
- 제성호·임강택, 「북한 ‘인민경제계획법’의 분석 및 평가」(통일정세 분석 99-2), 서울: 통일연구원, 1999.5.
- 전현준, 『김정일리더십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전현준,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실태 평가: 사상·정치·군사분야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정진위, 『북방3각관계』, 서울: 법문사, 1987.
- 조형준, 『북한언론에 관한 연구: 로동신문 사설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2년)
- 최수영,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경제부문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1999).
- 최수영, 『북한의 제2경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최주환, 『북한경제론』, 서울: 대왕사, 1992.
- 최진욱, 『북한의 인사행정』,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통일연구원, 『통일환경과 남북한관계』, 1994~2000년 각 년도.
- 허문영,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나. 논문

- 고유환, “미국 테러사태 이후 남북관계 전망,” 「미국테러사태이후 국제관계」(한국국제정치학회 2001년도 연례학술회의, 2001.12.14)
- 김계동, “북한의 대미정책,” 양성철·강성학, 「북한외교정책」, 서울: 서울 프레스, 1995.
- 김국신,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질서의 변화」(북한연구학회 2001년도 동계학술회의 자료집 2001년 11월 24일)
- 김영수, “주체사상의 변용과정과 붉은기 사상,” 「北韓調査研究」제1권 1호, 서울: 北韓問題調査研究所, 1997.
- 박영호,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1997.
- 박찬모, “북한의 IT 현황과 전망,” 「統一과 國土」(2001, 가을), 서울: 한국 토지공사, 2001.
- 백인학·홍민식·김승채, “김정일정권의 ‘신북방삼각관계’ 분석: 「로동신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北韓研究學會報」, 제5권 제1호, 2001년
- 서재진, “북한의 경제회생정책과 IT산업의 관계,” 「統一과 國土」(2001, 가을), 서울: 한국토지공사, 2001.
-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 김정일 시대의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12)
- 이상우, “로동신문에 나타난 북한정책관심의 변천: 1967~1973,” 「省谷논총」, 제6집, 1975년

- 이영훈, “북한체제의 변화진단 및 전망: Big Push와 경제체제전환,” 「북한체제의 변화진단 및 전망」(통일정책연구소 제3차 남북한관계학술 회의, 2001.10.25)
- 이종석,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과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주체사상과 유일지도체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년 8월)
- 임강택, 「북한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변화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1998.
- 장명봉, “최근의 북한사회주의헌법 개정('98.9.5)의 분석: 배경·내용·평가 및 정책전망,” 「統一研究論叢」 제7권 2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전현준, “김정일정권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統一研究論叢」 제7권 2호, 1998.
- 전현준, “북한의 대내변화: 실상과 전망,” 「북한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통일연구원 학술회의총서 2000-05), 서울: 통일연구원, 2000.8.
- 전현준, “북한의 대서방국 및 EU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통일연구원, 「통일 정책연구」 제10권 1호, 2001.
- 최완규, “사회주의 건설과 주체사상,” 최완규 외, 「북한사회주의건설의 정치 경제」,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3.
- 하용출, “동유럽·북한관계,” 유세희·이정식 편, 「전환기의 북한」, 서울: 대한 교과서주식회사, 1991.

2. 북한 문헌

가. 단행본

김재호, 「김정일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 평양출판사, 2000.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나. 김일성 및 김정일 저작

김일성, “당보를 창간할데 대하여(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선전 부일군들과 한 담화 1945년 10월 17일),”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 할데 대하여(당선전선동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저작집 9」,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결론 1994년 7월 6일),” 「김일성저작집44」,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김일성, “당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5년 11월 15~17일),” 「김일성저작집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김일성, “당 제3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함경남도 당단체들의 과업 (함경남 도당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 1956년 5월 17일),”

「김일성저작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김일성, “전력공업부문일군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당면과업에 대하여 (전기성 제3차열성자회의에서 한 결론 1958년 2월 4일),”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김일성, “현시기 정무원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연합회의에서 한 연설 1992년 12월 14일),” 「김일성 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 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0.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 (1995년 6월 19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1995년 10월 2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김정일,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담화 1995년 12월 25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김정일, “일군들은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며 일해야 한다(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10월 14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김정일,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3월 17일),” 「김정일 선

- 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김정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사명과 임무에 대하여(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 한 담화 1996년 1월 20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김정일, “올해에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김정일, “당의 무역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5년 2월 1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김정일,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8월 11일),” 「김정일 선집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김정일, “경제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4월 22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김정일, “풀 먹는 짐짐승을 많이 기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3월 26 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김정일,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킬데 대하여(량강도 대홍단군을 현지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87(1998)년 10월 1 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88(1999)년

1 월 1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김정일,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1월 14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김정일,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 나가는 힘있는 력령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5년 3월 8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김정일,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모범초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주체 88(1999)년 9월 29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김정일, “신천박물관을 통한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신 천박물관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87(1998)년 11월 22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김정일,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5년 3월 2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1997년 8월 4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김정일,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 50돛기념 중

양연구토론회에 보낸 서한 주체87(1998)년 4월 18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3. 외국 문헌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by Don Oberdorfer」, Indianapolis Addison-Wesley,
1997.

「The New York Times」, 2001, November, 25.